

2014년 상반기 (통권 4호)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CREATIVITY - LED ECONOMY

특집 | 한국 사회자본 역량 평가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CREATIVITY - LED ECONOMY

■ 특집 : 한국 사회자본 역량 평가

- 선진국 진입, 사회자본 확충이 좌우한다
- 사회자본지수 개발 및 OECD 비교

■ 이슈

- 소득 4만불 시대 조기진입을 위한 과제
- 서비스 2년 연속 흑자의 명(明)과 암(暗)
- 한중일 분업구조, 한국의 몫이 줄어들고 있다
- 제조업을 업그레이드 하자

■ 국내외 창조경제 주요 정책

■ 창조경제 주요지표

발행인 : 하 태 형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장 우 석, 정 민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Tel (02)2072-623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02-2072-6306)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CREATIVITY - LED ECONOMY

목 차

■ 핵심 내용	i
■ 특집 : 한국 사회자본 역량 평가	1
- 선진국 진입, 사회자본 확충이 좌우한다	1
- 사회자본지수 개발 및 OECD 비교	15
■ 이슈	29
- 소득 4만불 시대 조기진입을 위한 과제	29
- 서비스 2년 연속 흑자의 명(明)과 암(暗)	45
- 한중일 분업구조, 한국의 몫이 줄어들고 있다	58
- 제조업을 업그레이드 하자	73
■ 국내외 창조경제 주요 정책	87
■ 창조경제 주요지표	92

선진국 진입, 사회자본 확충이 좌우한다

1. 사회자본의 중요성

사회자본이란 집단의 구성원 사이에 비공식적 가치와 규범들의 실증적 집합으로서 이들이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갈등이나 부패 등 사회적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사회자본이 확충될 경우 국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질서 준수와 일인당 GDP와의 상관관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질서 등 사회자본 확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자본의 중요 요소 중 하나인 법·질서 지수가 OECD 국가 중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선진국 진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융통성에 밀린 신뢰사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46.4%로 나타났으며, 이는 향후 신뢰사회로의 도달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시민단체(47.4%), 행정시스템(46.7%), 대기업(42.3%), 입법시스템(18.0%)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자녀들에게 법·질서 준수가 아닌 적당한 융통성을 지녀야한다고 충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비중이 20대(71.6%), 30대(56.4%), 40대(45.8%), 50대 이상(31.5%)의 순서로 나타나 젊은 사람일수록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 과반수 이상이 10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 사회시스템의 신뢰 수준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의 71.9%가 향후 신뢰 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우리나라 사회시스템의 신뢰에 대한 미래 기대는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신뢰사회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대처하는 반면, 경범죄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태도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뺑소니 차량을 목격할 경우 90.7%가 반드시 경찰에 신고한다고 응답한 반면, 차가 없는 도로에서 빨간 신호등을 만날 경우 51.7%만이 '파란 신호등이 켜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10명 중 9명 정도는 우리나라를 공적 관계보다 사적 관계를 우선시하는 사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8.1%는 우리나라는 법·질서 등 공적 관계보다 지연, 학연, 혈연 등 사적 관계가 우선시되는 사회라는 의견에 동의하였으며, 응답자의 85.4%는 일처리를 할 때 친척이나 친구를 마주치면 어느 정도 배려하려는 마음이 든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우리나라가 성공만 하면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못한 과거도 용서하는 사회라고 응답하여 결과 지상주의가 만연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응답자의 84.0%는 정직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성공하면 사회지도층으로 용인되는 분위기라는 의견에 공감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사회지도층에 대해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3.5%에 불과하였다.

넷째,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6명 정도는 엄격한 규정 준수가 타인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6.7%는 내가 법질서나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준수하면 주위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3. 시사점

선진국 진입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나라의 사회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첫째, 작은 약속부터 지키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신뢰사회와 관련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입법, 사법, 행정 등 사회시스템 각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신뢰 프로세스 구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신뢰사회를 붐업시키는 방송이나 시민단체 운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신뢰사회로의 전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신뢰사회 문제는 시민이 주도적 역할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이므로 사회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자본지수 개발 및 OECD 비교

1. 사회자본지수의 개념 및 추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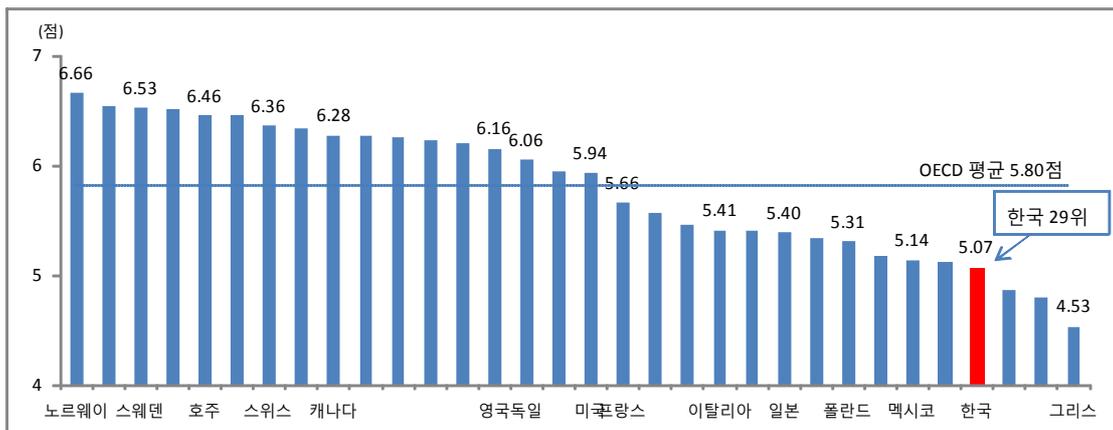
사회자본지수란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들 즉, 사회자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경쟁력을 지수화한 것이다.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크게 사적 사회자본(15개 지표)와 공적 사회자본(15개 지표)으로 구분되며, 사적 사회자본은 사적 신뢰, 사적 배려, 사적 참여로, 공적 사회자본은 공적 신뢰, 공적 배려, 공적 참여 등과 같이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로 구분하였다. 산출방법은 만점을 10으로 하여 모든 개별지표들의 산술평균값을 지수화했다. 비교대상은 OECD 32개국이다.

2. 사회자본지수 추정 결과

사회자본지수 추정 결과 한국의 사회자본 수준은 G7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한국의 사회자본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사회자본지수는 5.07으로 OECD 32개국(이하, OECD) 평균 5.80을 한참 밑도는 수준으로, 전체 32개 국가 중 29위로 나타났다.

< OECD 사회자본지수 추정 결과(2012년) >



주: OECD 국가 중 이스라엘, 터키는 데이터 부재로 제외.

둘째, 한국 사회자본은 사적 및 공적 영역 모두 취약 편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사적 사회자본이 5.40점으로 OECD 평균 6.22점에 크게 못미치며, 공적 사회자본도 4.75점으로 OECD 평균 5.37점과 큰 격차를 보인다.

셋째, 정부와 사법시스템 등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이 한국사회자본의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 중 공적 신뢰 부문의 순위가 31위로 가장 낮았다. 특히, 정부와 사법시스템 등 국가의 공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넷째, 사적 차원의 타인에 대한 배려도 매우 부족한 편으로 평가되었다. 사적 배려 부문이 낮은 이유는 성소수자에 대한 관용 항목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개인 선택의 자유 항목도 거의 최하위 수준을 보였기 때문이다. 사적 신뢰 부문도 역시 취약한 편인데, 친척이나 친구에 대한 신뢰가 OECD 32개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한국 사회자본의 희망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들의 참여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 공적 참여 부문이 사회자본 6개 요소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여 한국 사회자본 확충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적 참여 부문의 점수는 G7국가 평균보다 높은 편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사적 참여 부문 역시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데, 사적 참여를 구성하는 자원 봉사 활동이나 종교 행사 참여 등의 개별 요소 점수가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3. 시사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개조를 통해 한국의 사회자본 중 가장 취약한 공적 신뢰를 향상시켜야 한다.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행정부 개혁, 사법질서의 확립, 사회전반에 걸친 부패 방지, 사회적 계약을 중시하는 풍토 조성 등 개인 또는 공동체의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둘째, 한국 사회자본 요소 가운데 강점이 공적 참여와 사적 참여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사적 참여와 공적 참여를 기반으로 사회자본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사회전반의 소통 원활화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자본 구성요소들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 내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추진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 전체의 사회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에 걸친 동시다발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복잡한 정책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한 정부내 정책추진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소득 4만불 시대 조기진입을 위한 과제

1. 개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급락하고 성장의 질적 수준도 효율성이나 자본스톡보다는 중간재 투입에 의존하는 후진국형 성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도 1995년 1만 달러를 상회한 이후 최근에서야 선진국 기준의 하한선이라 할 수 있는 2만 달러대를 간신히 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신흥공업국들이 우리 경제를 추월하여 경제적 위상(명목 GDP)의 세계 순위는 2004년 11위를 정점으로 후퇴하여 현재 15위에 장기간 머물러 있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저속 주행’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성장 모델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 특히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잠재성장률 4%의 경제적 성과 목표 하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수립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미래”와 “바람직한 경제발전전략”이라는 주제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여 향후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았다.

2. 창조경제의 정책 효과 및 선결 과제

(10년 후 잠재성장률 전망) 경제전문가들은 10년 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대로 예측한다. 응답자의 65.2%가 잠재성장률은 현재의 3.5% 수준에서 10년 후에는 2%대(응답자 평균 2.8%)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부 구간별로는 『2%대 초반』을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3.3%로 가장 높았다.

(10년 후 국민소득 전망) 10년 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 3만 5,000달러로 보고 있다. 응답자의 62.5%가 10년 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3.5만 달러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4만 달러 이상을 응답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후 한국 경제의 위상 전망) 10년 후 한국 경제는 현재 경제력 (G15) 수준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G11~G15)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의 현 경제 규모(명목GDP)의 세계 순위는 15위인데, 10년 후에는 현재 경제력 수준(G15)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G11~G15)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9.7%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경제 강국(G10 이내) 진입이 22.2%를 기록하였다.

(대내외 불안 요인 전망) 한국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데 대외 불안요인으

로는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 등 글로벌 충격』, 대내 불안 요인으로는 『투자부진과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를 지목한다. 대외요인으로는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 등 글로벌 충격』이 가장 많은 44.4%의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대내요인으로는 『투자부진과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54.2%)』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경제발전전략 패러다임 변화 가능성 전망) 대체적으로 한국 경제가 선진국의 선도형 경제발전전략으로의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한다. 선진국 형으로의 전략 전환이 성공할 것으로 보는 응답 비율은 60.6%를 기록하였으며, 어려울 것으로 보는 비율은 28.2%에 그쳤다.

(바람직한 경제발전전략의 중심) 향후 한국의 경제발전전략의 중심에 대해서 성장과 분배가 「6 : 4」, 수출과 내수가 「5 : 5」의 비율로 나타났다. 미래를 대비한 한국의 경제발전전략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성장』 61.4%, 『분배』 38.6%로 성장이 분배를 다소 상회하였다. 한편, 『수출(49.3%)』과 『내수(50.7%)』의 비율이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역할) 정부부문의 경제적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경계한다. 한국의 정부지출 규모가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정부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해야 한다가 51.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 수준 유지』까지 포함할 경우 86.1%가 최소한 현재 수준보다 더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주력 산업의 한계와 신성장산업의 필요성) 현재의 주력 산업은 5년 후면 한계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에 신성장산업 발굴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주력산업의 한계 시점에 대해서 『5년 후』를 응답한 비율이 61.1%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62.5%가 『신성장산업 발굴(62.5%)』을 응답하고 있다.

3. 시사점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본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전략의 모습은 첫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대외충격에 대한 내성을 길러야 한다. 둘째, 경제 강대국으로의 발돋움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필요하다. 셋째, 향후 한국 경제를 이끌고 갈 경제발전전략에 대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요구된다. 넷째, 공공부문의 확대를 경계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는 경제성장이 요구된다. 다섯째, 대규모 투자의 수요처가 되고 성장을 견인할 주력 산업의 발굴이 시급하다.

서비스 2년 연속 흑자의 명(明)과 암(暗)

1. 서비스 수출 현황

국내 경기 활성화 및 고용률 제고 등을 위해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최근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선진국형 경제구조로 혁신하기 위해서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육성 및 수출 산업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지는 1998년 이후 적자를 지속하다 2012년 흑자로 14년 만에 처음 전환됐다. 2013년에도 6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서비스 수지 흑자가 2년 연속 지속되고 있는데, 서비스 수지 흑자폭도 2012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세계 서비스 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1.9%에서 2012년 2.5%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서비스 수출의 무역특화지수도 제조업 강국 독일, 일본에 비해 크게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서비스 수출이 증가하며 서비스 수지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점들도 남아있다.

2. 서비스 2년 연속 흑자의 명(明)과 암(暗)

먼저 서비스 수지 개선의 긍정적 측면(명,明)을 살펴보면, 첫째, 세계 서비스 수출 시장 규모가 큰 업종에서 한국의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업 서비스, 개인·문화·오락, 건설, 운송, 여행 서비스의 2012년 세계 수출 증가율은 각각 전년대비 3%, 1%, 2%, 1%, 4%를 나타낸 반면 한국 수출 증가율은 각각 40%, 35%, 27%, 12%, 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업, 여행, 운송 서비스 부문은 세계 수출시장이 매우 크게 나타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다. 둘째, 개인·문화·오락 서비스와 건설서비스의 수출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다. 한류 관련 콘텐츠의 수출 확대로 개인, 문화, 오락 서비스가 수출특화와 비교우위로 전환되었다. 최근 해외건설 수주 증가로 건설서비스의 현시비교우위지수도 개선되며 수출경쟁력이 상승했다. 셋째, 서비스 수출의 업종별 편중성이 완화됐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 상위 5개 업종 편중도가 2008년 0.30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13년 0.22로 하락했다. 넷째, 수출 시장 다변화가 이루어졌다. 금융위기

이후 개도국으로 서비스 수출이 증가하며 전체 서비스 수출에서 개도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반면에, 2006년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으로의 서비스 수출이 총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4%였으나 2012년에 42%로 감소해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다.

서비스 수지 개선의 부정적 측면(암, 暗)은, 첫째,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중심의 흑자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중심의 적자 지속이다. 2013년 기준 서비스 수지 흑자를 기록한 항목 중 운송과 건설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88%로 흑자가 이들 2개 업종에 크게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사업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고부가가치 업종은 서비스 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둘째, 제조업 수출과 연동된 서비스업 중심의 수출로 세계 경제 위기에 취약한 수출 구조이다. 운송 및 사업서비스 등과 같은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에 서비스 수출이 집중되어 있다. 상품 수출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운송 및 사업 서비스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세계 경제 위기가 상품과 서비스 수출에 동시에 전이되는 취약한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

3. 시사점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저부가가치 서비스 업종 중심의 흑자 구조를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확대 시킬 수 있도록 기업 및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인 사업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사용료의 서비스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하여 각각의 서비스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부족한 인프라 보완이나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서비스업의 수출 업종을 다양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수출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중·일 분업구조, 한국의 몫이 줄어들고 있다

1. 한·중·일의 협력과 경쟁 심화

지난 10여 년간 세계 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수출비중은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세부 산업별로는 철강, 자동차, 조선 등 한중일의 대세계 수출 경쟁이 치열해 지는 등 경쟁구도가 가시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일 제조업 분업구조 재편에 대한 논의가 제기 되고 있다.

2. 한·중·일 제조업의 협력과 경쟁 관계

한중일간 산업간 협력관계는 상호 교역에서 나타나는 가치사슬(Value Chain) 분석을 통해 규명할 수 있다. 제조업 국제투입산출표(WIOD)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한중일 3국의 역내 협력 및 경쟁관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은 역내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역내 의존도가 2000년 각각 12.9%, 2.8%에서 2012년 각각 18.3%, 8.8%로 증가하는 등 역내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중국은 동기간 7.4%에서 5.4%로 감소하면서 역내 협력이 약화되었다. 둘째, 역내에서 제조업 분야별로는 한국이 가장 균형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중국은 전기·광학기기, 석유·화학 등 2개 분야에서 역내 협력이 강화되었으나, 산업 전반적으로 역내 의존도가 감소하였다. 일본도 지난 2000년 보다 8개 제조업 분야에서 역내협력이 강화되었으나, 지난 11년간 섬유식품, 전기광학기기 등에 각각 14.0%p, 16.4%p씩 증가하는 등 역내협력이 일부 산업에 편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역내에서는 한국만이 8개 제조업 분야 모두 균형적으로 역내협력을 강화하였다. 셋째, 자국 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중국, 일본에 비해 한국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현재 중국은 전기·광학기기, 수송기기 등 2개 분야를 제외한 6개 분야에서 자국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한국,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 한국은 전기광학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개 분야가 자국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다. 넷째, 한국은 역내에서의 제조업 산업별 경쟁력도 가장 미약한 양상을 보였다. 2011년 현재 일본은 8개 제조업 분야 중 6개 분야가 역내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도 지난 11년간 석유·화학, 금속, 기계, 전기·광학기기 등 4개 분야가 지난 11년간 각각 10.5%p, 6.9%p, 7.2%p, 10.0%p씩 증가하는 등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석유·화학을 제외하고 여전히 역내에서 경쟁이 취약한 양상을 지속하고 있다. 다섯째, 제조업 분야별로 볼 때, 역내에서 한국은 중국, 일본에 비해 가장 낮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역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총액은 일본이 3,157억 달러로 한국 2,595억 달러, 중국 2,716억 달러보다 다소 높으나, 3국이 비슷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자국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포함하면, 중국이 창출하는 이익은 한국, 일본의 각각 11배, 4배에 이르고 있다. 한편, 역내기준에서 제조업 분야별로 볼 때, 2011년 현재 한국과 중국은 비금속 분야에서 각각 310억 달러, 710억 달러로 가장 낮은 이익을 창출하였고, 일본은 섬유·직물 분야로 530억 달러 창출에 그쳤다. 반면, 전기·광학기기 분야에서는 한중일이 각각 816억 달러, 667억 달러, 822억 달러를 창출하는 등 역내에서 가장 큰 이익을 창출하였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역내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은 대중국 제조업 부가가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협력은 강화되었으나, 상대적 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2011년 현재 섬유·직물을 제외하고 7개 제조업 분야에서 한중일 중 역내 의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역내 중 중국에 대한 제조업 부가가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석유·화학, 전기·광학기기, 수송기기 등 3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역내에서 중국보다 낮은 부가가치 기여를 하는 등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역내에서 창출하는 이익은 석유·화학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조업 분야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이익이 적게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시사점

한중일 3국은 산업간 협력을 통한 다음과 같은 경제협력 체제 강화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역내에서 제조업 산업별 대중국 부가가치 역내의존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중국에 편중된 역내 부가가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균형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한중일 분업구조 강화를 위해 한중 및 한중일 FTA 등 역내 협력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자체기술 향상으로 자국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확대되는 만큼, 한중일 FTA와 같은 역내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세계시장에서의 한중일 위상 제고를 위해 표준협력, 투자환경 개선 등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3국간 협력을 부품소재 등 중간재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섯째, 국가 간 신시장 개척을 위해 3국간 협력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제조업을 업그레이드 하자

1. 개요

OECD 국가 전체적으로 2007년까지 약 7% 수준에 머물렀던 기업 R&D 지출에서 차지하는 정부 비중이 2008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R&D 분야에서 제품 및 제조공정과 관련된 산업생산기술 R&D가 타부문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인 2005~08년 대비 2009~12년 동안의 정부 전체 R&D는 8% 증가한 반면, 이중 산업생산기술 R&D는 63%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목적으로 한 미국, 일본, 독일의 R&D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해 본다.

2. 주요 선진국의 제조업 R&D 강화 배경

첫째, 중국 등 선진 개도국의 제조기술 경쟁력 강화로 선진국들은 제조 리더십 약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한국 등 선진 개도국의 기술력이 강화되고 있다.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중 기술인프라가 중국은 2001년 47위에서 2013년 20위로 상승, 과학인프라가 동기간 26위에서 8위로 상승했다. 이러한 결과로 1997년 이후 첨단제품의 전세계 수출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일본은 지속 감소, 미국은 감소후 정체, 독일은 현상 유지를 보인 반면에 중국은 '97년 8%에서 '10년 24%로 급증하였다. 한국은 동기간 4%에서 5%로 늘었다.

둘째 무선인터넷 등 IT네트워크화 진전과 3D프린터 등 3D 기술을 활용한 신공정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IT 기기 및 서비스를 활용해 지역적 제약 없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무선인터넷 기술을 설비에 적용해 공장의 스마트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3차원 프린터 등을 활용해 저비용, 단기간 제조뿐만 아니라 맞춤형 제조까지 가능해지고 있다.

셋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결합한 고부가 융합 제품으로 변화하면서 제품 기술 확보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주력 핵심 제품을 대상으로 한 고부가 융합 제품 개발에 나서면서 제조 기능을 인소싱으로 전환하고, 부족 기술을 자체 개발하거나 M&A 등으로 확보하고 있다.

3. 미국, 독일, 일본의 제조업 기술 선진화 정책

미국, 독일, 일본은 제조 부문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 정책비전과 실행전략을 추진중에 있다. 이들 정책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째, R&D 대상을

제품 핵심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공정 기술 혁신을 통한 제조시스템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제품과 공정을 혁신하기 위해 신재료, 에너지 절감 기술, IT기술(소프트웨어, 무선기술) 등을 활용하고 있다.

둘째, 제조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신규 기본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촉진할 제도적 인프라를 신설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 첨단제조방식 전략 계획”, 독일은 “High-Tech Strategy 2020” 및 “Industrie 4.0”(독일), 일본은 “일본산업 재흥플랜”으로 명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개별부처별로 진행되 왔던 데에서 탈피하고 주로 범부처(multi-agency) 방식으로 추진하며, 이를 지원할 법, 제도, 조직 등 촉진 인프라를 신설하고 있다.

< 미국, 독일, 일본의 제조업 선진화 R&D 정책 >

구분	미국	독일	일본
기본 정책	“국가 첨단제조방식 전략 계획”(2012.2), “제조업 재생 계획”(2012.7)	“High-Tech Strategy 2020”(2010년) 및 실행 계획(2012)	“일본산업 재흥플랜”(2013.6)
R&D 프로그램명	“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y”	“Industrie 4.0”(영문 Industry 4.0)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프로그램 (SIP)”
추진 인프라	제조혁신기관(IMI), 제조혁신네트워크(NNMI)	Industrie 4.0 Platform	종합과학기술회의
주요 추진 과제	-에너지 절감용 제조공정 혁신과 소재선진화 -제조기술가속화센터 건립 -제조혁신네트워크 구축 -제조부문 로봇 개발 -개념 분야의 신제품 및 공정 개발 지원	유무선 I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 구현을 목표로 새로운 제조시스템과 다양한 적용 도구 개발 프로젝트	*SIP 10대 후보 과제 -에너지: 연소기술 및 구조재료 등 5개 과제 -차세대 인프라: 자동운전시스템 등 3개 과제 -지역자원: 혁신적설계 생산기술 등 2개 과제

4. 시사점

선진국의 제조기술 선진화 추세에 대응해, 우리나라는 제조업 주도국 실현을 목적으로 범부처 대응의 ‘제조업 업그레이드 전략’이 요청된다. 첫째, 차세대 제조 시스템의 확보를 목표로 국가 차원의 R&D 정책을 수립해 양적 성장과 질적 고도화를 지향해야 한다. 둘째, 제조업의 R&D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혁신 활동을 강화하는 정책 요청된다. 셋째, 범부처 추진 성격의 국가 프로젝트 관리, 규제 해소 및 개발 기술 보호 등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우수 이공계 인력 양성, 퇴직 기술자 활용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분야의 우수 인력 확보 및 활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선진국 진입, 사회자본 확충이 좌우한다¹⁾

1. 사회자본의 중요성

○ 사회자본과 경제 성장

- 최근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이나 법질서 위반 행위 등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짐
- 갈등이나 부패 등 사회적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사회자본²⁾이 확충될 경우 국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음
 - Knack and Keefer(1997)의 1980~81년과 1990~93년 2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신뢰가 10% 하락 시 경제성장률은 약 0.8%p 하락
 - Whiteley(2002)는 1970~92년 3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신뢰가 1% 증가할 경우 1인당 실질GDP가 약 0.6% 상승한다고 주장
 - La Porta et al.(1997)은 신뢰가 정부 효율성, 사회 효율성, 시민 참여 등에 양의 영향을 끼친다고 발표
-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지수³⁾는 OECD 국가 중 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있음
 - OECD 국가들의 평균 부패지수는 7.0점으로 한국의 4.7점보다 2.3점 높음
 - 한국은 각종 법·제도 개선 등 부패방지 노력을 통해 국가 청렴도를 제고시켜 OECD국가 평균에 이를 경우 연평균 1인당 명목 GDP는 138.5달러, 경제성장률은 명목기준으로 연평균 0.65%p 상승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정

< 부패 방지에 따른 한국의 경제성장 상승 효과 >

구분	평균 부패지수(p)		1인당 명목 GDP 상승효과	명목 GDP 상승효과
	OECD	한국		
'95~'10년 평균	7.0	4.7	138.5 달러	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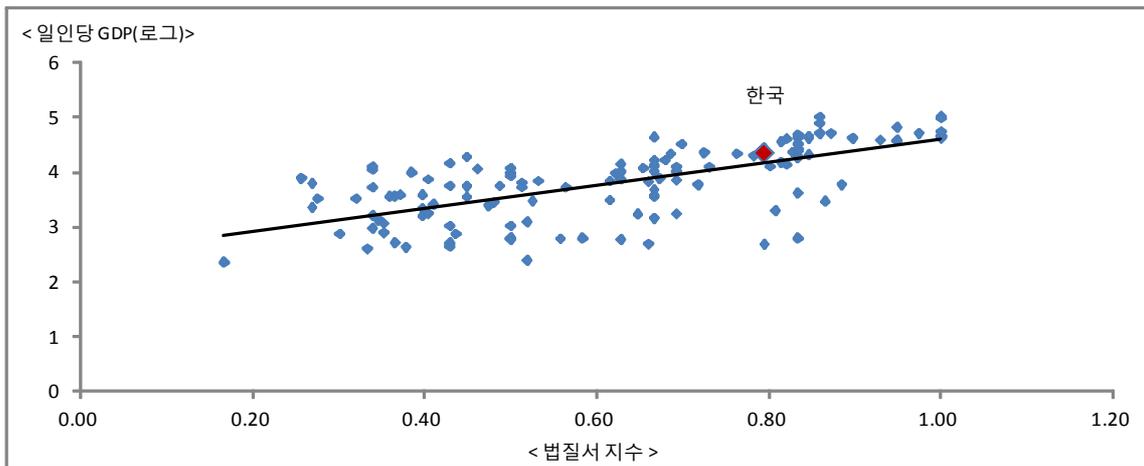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2.5), '부패와 경제성장'

- 1)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14-02호, “선진국 진입, 사회자본 확충이 좌우한다” (2014.1.15)
- 2) Fukuyama에 따르면, 사회자본이란 집단의 구성원 사이에 비공식적 가치와 규범들의 실증적 집합으로서 이들이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이라고 함
- 3) 부패지수는 세계은행, 프리덤하우스, IMD, 세계경제포럼 등 각 기관들이 기업인과 전문가들에게 실시한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청렴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산출. 10점 만점으로 0점이 가장 부패한 수준임

○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사회자본

- 법질서 준수, 신뢰 등 사회자본은 한 나라의 선진국 진입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특히, 법질서 준수와 일인당 GDP와의 상관관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질서 등 사회자본 확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자본의 중요 요소 중 하나인 법·질서 지수⁴⁾가 OECD 국가 중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선진국 진입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더욱 심화시킴
 - 1998년부터 2012년 까지의 법·질서 지수와 2012년 각국의 일인당 GDP와의 상관관계는 0.67로 높게 나타나 일인당 GDP가 높을수록 법·질서도 잘 준수됨
 -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발전 정도에 비해 법질서 준수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해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사회자본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살펴봄으로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 질서 준수와 일인당 GDP >



자료: OECD, Political Risk Services Group 자료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자체 계산
 주: 법질서지수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지수, 일인당 GDP는 2012년 자료

4) PRS Group 그룹이 발표한 한국의 1998-2012년 평균지수는 0.79(1점 만점)로 OECD의 평균 지수 0.85를 하회하며, 순위로는 20위권 밖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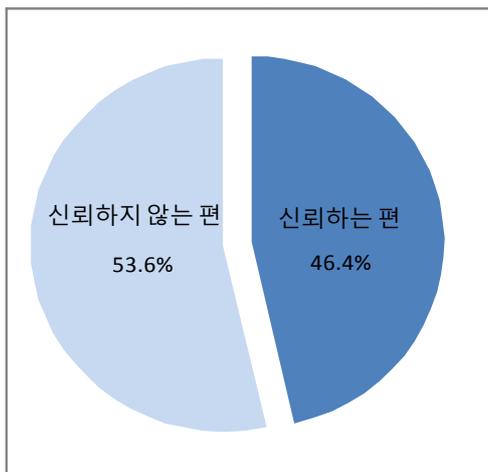
2. 융통성에 밀린 신뢰, 작은 준법정신부터 실천하자⁵⁾

1) 사회시스템에 대한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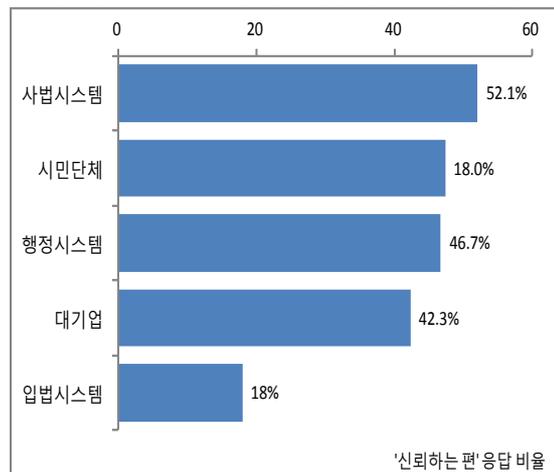
○ 사회시스템 신뢰 여부

- 우리나라 사회시스템에 대해 국민들이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는 향후 신뢰사회로의 도달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잘 나타냄
 - ‘귀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의 세부항목인 ‘전체 사회시스템에 대한 종합 평가’ 부문에서 ‘매우 신뢰’와 ‘신뢰하는 편’의 비율이 46.4%임
-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인 반면, 입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은 편임
 - 사법시스템(52.1%), 시민단체(47.4%), 행정시스템(46.7%), 대기업(42.3%), 입법시스템(18.0%) 순서로 나타남
 - 신뢰사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시스템이 과반수 이상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이 긍정적임

<전체 사회시스템 신뢰 여부>



<각 부문별 사회시스템의 신뢰 여부>



주) 현대경제연구원 2013년 12월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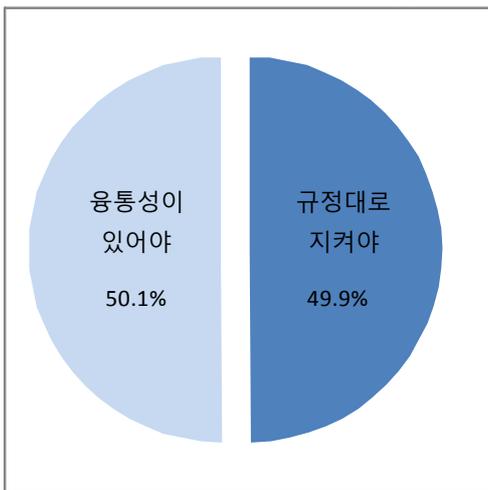
5) ‘신뢰사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전국 성인 남녀 815명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 간 전화조사로 진행되었음. 조사의 최대 오차 범위는 95%신뢰수준에서 ±3.49%임

○ 융통성을 원하는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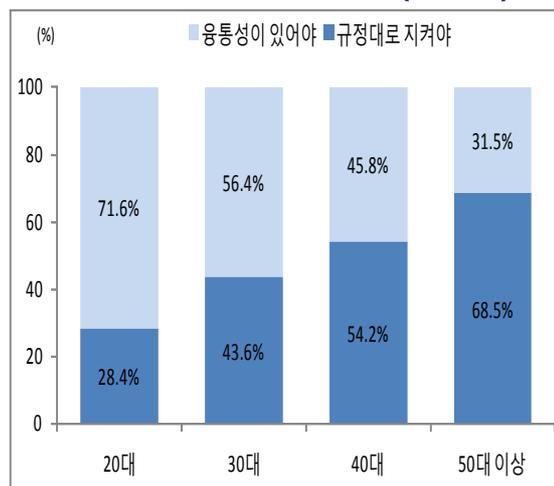
-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자녀들에게 법·질서 준수가 아닌 적당한 융통성을 지녀야한다고 충고하고 있음
 - ‘귀하는 자녀에게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충고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적당한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50.1%였으며, ‘법·질서를 규정대로 지켜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49.9%임
 - 부모조차 법·질서의 준수가 아닌 융통성을 권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사회 현실을 잘 보여줌

- 연령별로 살펴보면, 젊은 사람일수록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20대(71.6%), 30대(56.4%), 40대(45.8%), 50대 이상(31.5%)의 순서로 나타남
 - 50대 이상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이래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20대는 현실에서의 융통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사회생활을 잘하는 방법>



<사회생활을 잘하는 방법(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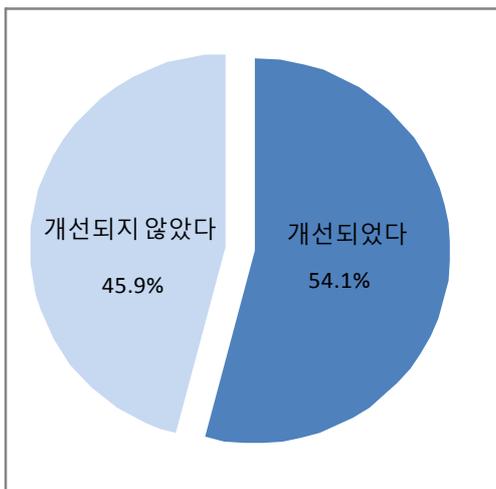


○ 신뢰사회 수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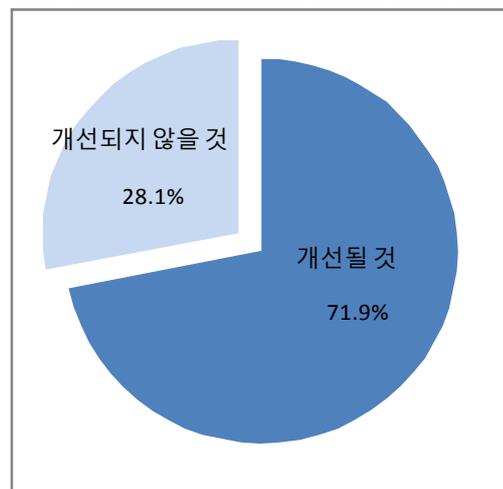
- 우리나라 국민 과반수 이상이 10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 사회시스템의 신뢰 수준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음
 - ‘귀하는 10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의 신뢰수준이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44.2%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 현재 우리나라 사회시스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신뢰 수준을 높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신뢰 수준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이이 10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 사회시스템의 신뢰 수준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음
 - ‘귀하는 10년 후 우리나라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의 신뢰수준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71.9%가 향후 신뢰 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함
 - 우리나라 사회시스템의 신뢰에 대한 미래 기대는 더욱 높아 향후 우리나라가 신뢰 사회로 도달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짐

<과거 대비 현재 신뢰사회 수준>



<향후 신뢰사회로의 변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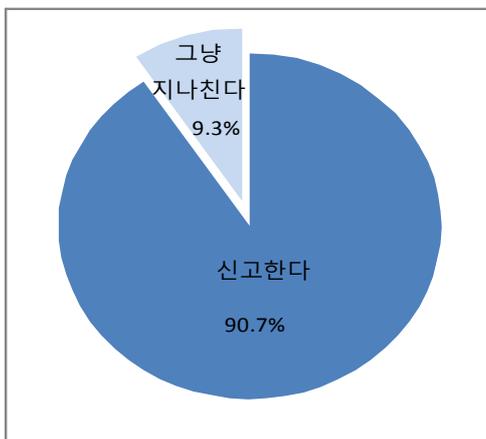
2) 한국 신뢰사회의 특징

① 작은 준법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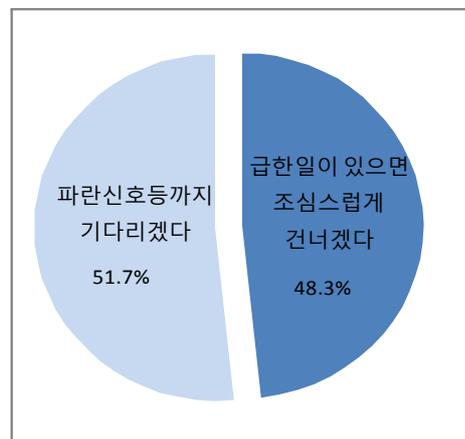
○ 작은 준법정신에 소홀한 한국 사회

- 우리나라 사람들은 뺑소니와 같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귀하가 뺑소니 차량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의견에 90.7%의 사람들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응답함
 - ‘신고할 경우 귀찮아 질 수 있으므로 그냥 지나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9.3%에 불과함
- 반면, 경범죄 수준에 해당되는 교통신호 위반에 대해서는 좀 더 너그러운 태도를 표명하고 있음
 - ‘차가 없는 도로에서 빨간 신호등을 만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의견에 51.7%의 사람들만이 ‘파란 신호등이 켜질 때까지 반드시 기다렸다 건너겠다’라고 응답함
 - ‘급한 일이 있다면 주위를 잘 살피고 조심스럽게 건너겠다’라고 응답한 사람들도 48.3%나 됨

<뺑소니 차량 신고 여부>



<빨간신호등에 건너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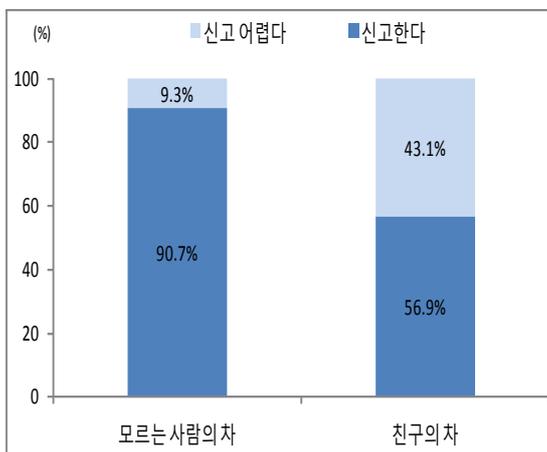


② 사적 친밀감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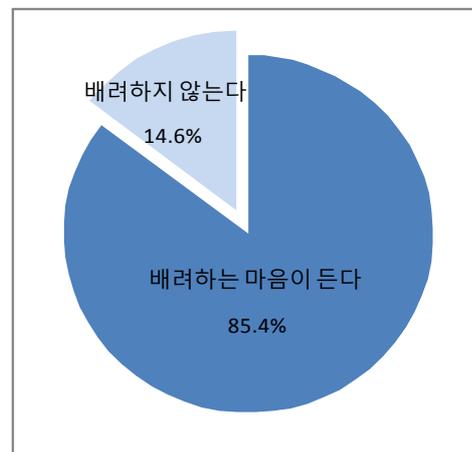
○ 공적 관계보다 사적 관계 우선

- 국민 10명 중 9명 정도는 우리나라를 공적 관계보다 사적 관계를 우선시하는 사회로 인식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법·질서 등 공적 관계보다 지연, 학연, 혈연 등 사적 관계가 우선시되는 사회라는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동의한다’와 ‘동의하는 편이다’라는 응답비율이 88.1%임
- 예를 들어, 뺑소니 신고의 경우도 친구의 차라면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고 나타남
 - ‘만약 뺑소니 차가 귀하 친구의 차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친구이더라도 경찰에 신고한다’라는 응답이 56.9%로 그냥 모르는 사람일 경우의 90.7%보다 훨씬 낮게 나타남
- 또한, 일처리를 할 때도 친구나 친척을 배려하는 마음이 든다고 응답해 사적 친밀감이 매우 높은 사회임을 알 수 있음
 - ‘일처리를 할 때 친척이나 친구를 마주치면 어느 정도 배려하려는 마음이 든다’라는 의견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85.4%임

<뺑소니 차량의 신고 여부>



<일처리 시 친구나 친척 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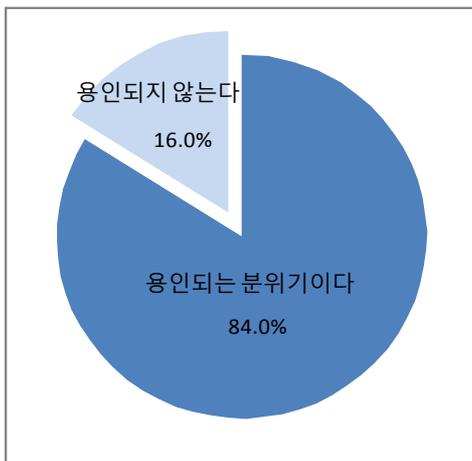
③ 성공에 대한 집착

○ 결과 지상주의 만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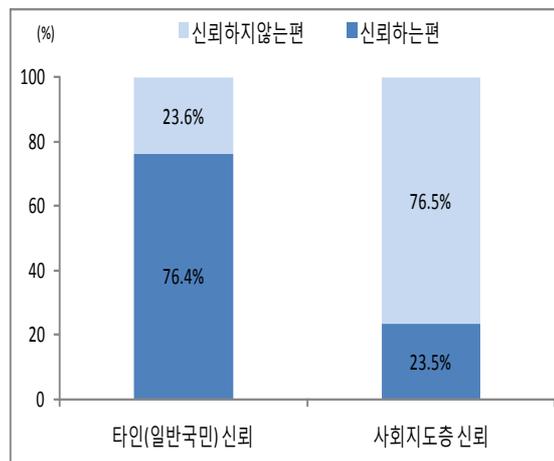
-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우리나라가 성공만 하면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못한 과거도 용서하는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정직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성공하면 사회지도층으로 용인되는 분위기’라는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84.0%에 이룸
 -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성공만 하면 과정 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용서되는 사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음

- 이런 분위기는 국민들의 사회지도층에 대한 인식에 그대로 반영되어 사회지도층을 불신하는 경향이 큼
 - ‘우리나라의 사회지도층은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신뢰한다’와 ‘신뢰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23.5%에 불과함
 - 다른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가 70%대가 넘는 반면,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는 20%대에 머물고 있어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음

<정직하지 못한 사람도 성공하면 사회지도층 용인>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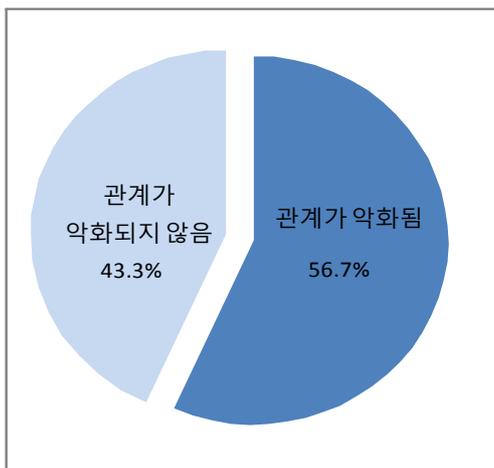


④ 타인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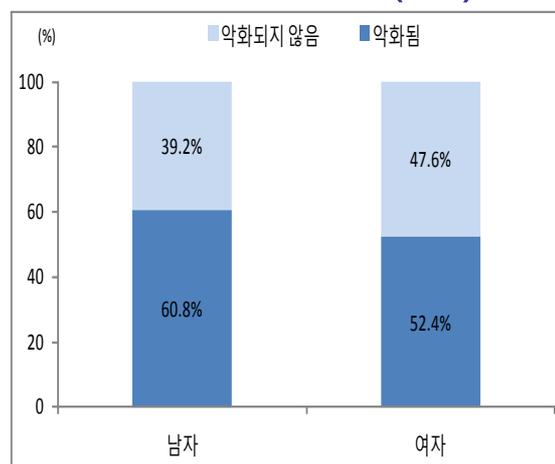
○ 규정대로만 하면 타인과의 관계 불편

-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6명 정도는 엄격한 규정 준수가 타인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내가 법질서나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준수하면 주위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라는 의견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56.7%나 됨
- 엄격한 규정 준수가 타인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은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좀 더 강하게 동의하고 있음
 - 남자들의 경우 엄격한 규정 준수가 타인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응답이 60.8%에 이르고, 여자의 경우 52.4%임
 - 상대적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이런 인식에 좀 더 동의하는 이유는 사회생활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 악화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집단주의적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타인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사항임
 - 따라서 엄격한 규정 준수가 나의 문제를 넘어 타인과의 관계까지 불편해질 수 있다고 인식된다면 법·질서 준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규정준수와 인간관계>



<규정준수와 인간관계(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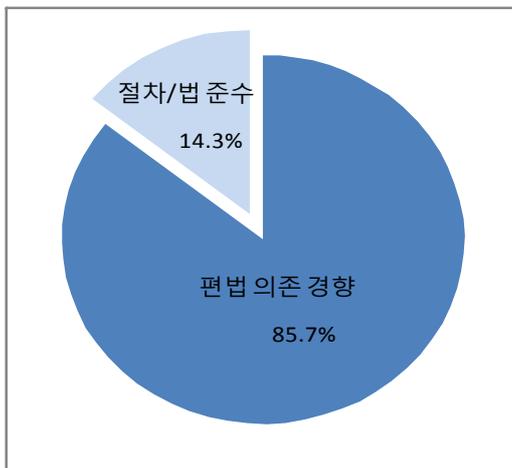


3) 편법 의존 경향의 극복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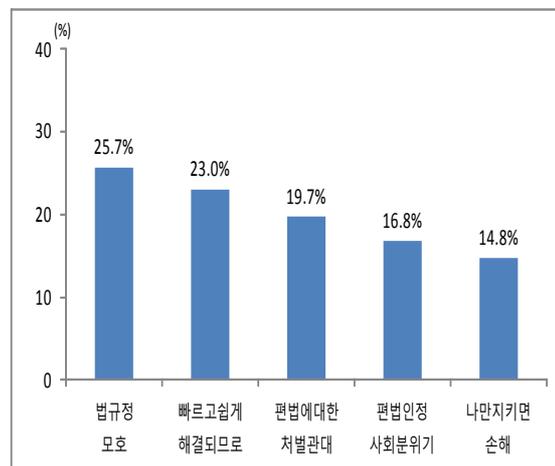
○ 정상적인 법규정 준수보다 편법에 의존

-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법규정 준수보다 편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사회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강함
 -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절차나 법을 지키기보다 편법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동의한다’와 ‘동의하는 편이다’라는 의견이 85.7%에 이름
- 편법 의존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호한 법규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편법을 사용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므로, 모호한 법규정을 개선시키도록 노력해야 함
 - ‘왜 정상적인 절차나 법을 지키기보다 편법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법규정이 모호하고 단속기준도 오락가락하므로’라는 응답이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편법을 통하면 문제가 빠르고 쉽게 해결되므로’라는 응답이 23.0%, ‘편법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서’ 19.7%, ‘결과만 좋으면 사소한 편법 정도는 용서되는 사회분위기 때문에’ 16.8%, ‘편법에 의존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만 규정을 지키면 손해니까’ 14.8% 등의 순서로 나타남

<우리나라 사람의 편법 의존 여부>



<편법 의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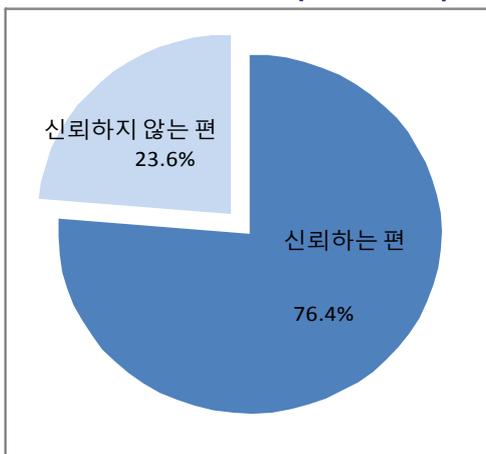


○ 신뢰사회로의 전환 가능성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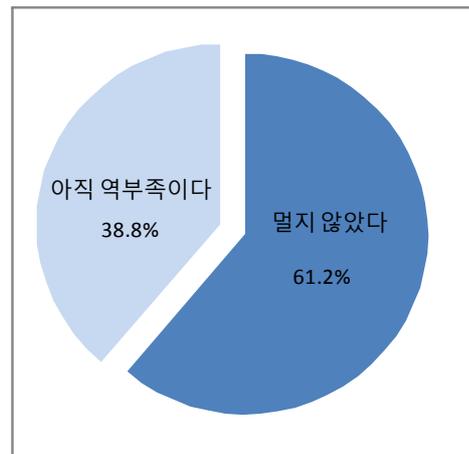
-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타인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음
 - ‘귀하는 가족을 제외한 타인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신뢰한다’와 ‘신뢰하는 편이다’라는 응답 비율이 76.4%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 사회시스템에 대해서는 불신이 약간 높게 나온 것에 반해, 사회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신뢰가 훨씬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의 신뢰사회 전환의 실마리는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임

- 타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신뢰사회로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귀하는 우리나라 사회구성원들의 수준을 볼 때 향후 신뢰사회 도달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개개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신뢰사회가 멀지 않았다’라는 응답비율이 61.2%에 이룸
 - ‘신뢰사회로 나아가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라는 의견은 38.8%에 불과해 우리나라의 신뢰사회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타인에 대한 신뢰(가족 제외)>



<신뢰사회 도달 여부>



3. 시사점

○ 첫째, 작은 약속부터 지키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함

- 어려서부터 작은 준법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신뢰사회 관련 교육을 밀도있게 받는 경우가 별로 없으며, 전반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이지 못해 의지가 있는 사람들조차 이를 실천하기 힘든 경우가 다반사임
 - 따라서, 작은 약속부터 지키는 사회적 분위기를 활성화하여 어려서부터 신뢰사회와 관련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둘째, 사회시스템 각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신뢰 프로세스 구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입법, 사법, 행정시스템 각 부문에서 신뢰가 부족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특히, 입법시스템 등 국민들의 신뢰가 극히 저조한 부문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따라서, 방안 마련 등이 요구됨

○ 셋째, 신뢰사회를 붐업시키는 방송이나 시민단체 운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적극 마련해야 함

- 과거 '정지선을 지킵시다'와 같은 방송 프로그램은 물론, 관련 시민단체의 운동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설문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신뢰와 불신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금만 더 신뢰 부문을 확산시키면 신뢰가 불신을 압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각종 방송 프로그램이나 시민단체의 협조를 통해 신뢰를 붐업시키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여 함

- 넷째,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신뢰사회로의 전환 계기를 마련해야 함
 - 신뢰사회 문제는 시민이 주도적 역할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이므로 사회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이 필요함
 - 특히, 우리나라 사회시스템에 대해서는 불신이 약간 높게 나온 것에 반해, 사회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신뢰가 훨씬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의 신뢰사회 전환의 실마리는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임 **HRI**

장후석 연구위원 (2072-6234, chahus@hri.co.kr)

【별첨】 응답자 특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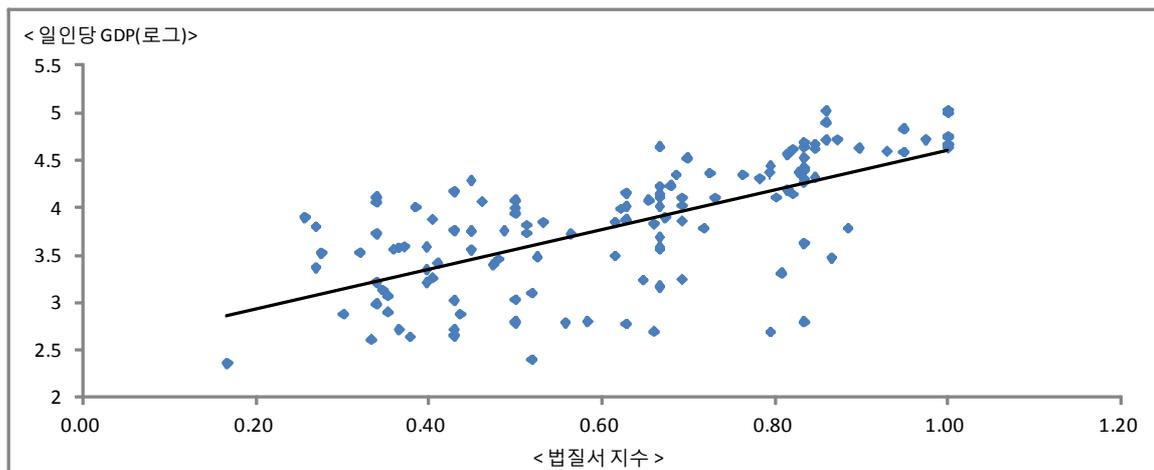
		사례수(명)	비중(%)
전 체		815	100
성별	남자	413	51.0
	여자	397	49.0
연령	20대	194	24.0
	30대	182	22.5
	40대	191	23.6
	50대 이상	243	30.0
직업	사무직	363	45.0
	영업 및 생산	89	11.0
	자영업	95	11.8
	학생	87	10.8
	농림어업	10	1.2
	주부	122	15.1
	무직 및 기타	41	5.0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62	20.7
	400만원 미만	325	41.6
	600만원 미만	201	25.7
	600만원 이상	93	11.9
학력	고등학교이하	191	23.7
	대졸 이상	614	76.3

사회자본지수 개발 및 OECD 비교⁶⁾

1. 사회자본지수의 필요성

- 한 나라의 선진국 진입에 있어서 법질서 준수, 신뢰 등의 사회자본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냄
 - 예를 들어, 1998년부터 2012년까지의 법·질서 지수⁷⁾와 2012년 각국의 일인당 GDP와의 상관관계는 0.67로 높게 나타남
 - 결국, 경제수준이 높은 나라가 사회자본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자본이 선진국 진입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자본 개념조차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는 등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가 미흡함
 - 한국이 4만 달러의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자본 확충 등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경제 구조의 혁신이 필요함
- 따라서, 일차적으로 HRI 사회자본지수를 수립하여 한국 사회자본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가 필요함
 -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자본의 구체적인 확충 방안에 대해 OECD 주요국의 현황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그림 1> 법·질서 준수와 일인당 GDP



자료 : OECD, Political Risk Services Group 자료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자체 계산.
 주 : 법질서지수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지수, 일인당 GDP는 2012년 자료

- 6)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14-21호,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 (2013.10.22)
- 7) PRS Group 그룹이 발표한 한국의 1998-2012년 평균지수는 0.79(1점 만점)로 OECD의 평균 지수 0.85를 하회하며, 순위로는 20위권 밖임

2. 사회자본지수의 개념 및 추정 방법

①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자본

- 사회자본이란 네트워크, 규범, 신뢰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Putnam(2000)의 개념이 대표적임
 - 대표적인 사회자본 요소인 신뢰는 공동체가 개인 간의 관계에서 기회주의와 도덕적 해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함⁸⁾
 - 사회자본은 기존 인적자본이 개인적 차원에 그친 것에 비해 네트워크 등 좀 더 관계 중심적인 특징을 나타냄⁹⁾
- 사회자본의 측정을 위한 연구는 데이터의 한계성과 사회자본 개념에 대한 인식의 목적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90년대부터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2002년 OECD와 영국 통계청(ONS)의 사회자본 컨퍼런스(22개국 참여)에서는 Networks를 중심으로 사회자본 측정에 대해 논의함
 - 이후 영국통계청을 비롯하여 EU 등 국가 차원에서는 신뢰, 상호배려, 참여 등의 관점에서 발굴된 측정 지표를 통해 사회자본 측정함

<표 1> 기존 연구자들의 사회자본 측정 지표

연구자	사회자본 측정 지표	방법
Putnam(1993, 2000)	단체수, 신문구독, 선거추세, 투표 선호도 등	설문조사
Paxton(1999)	신뢰(individuals, institutions), Associationism	설문조사
Costa & Kahn(2003)	자원봉사활동, 공식적 멤버십, 일상활동, 여가 및 친구 방문	설문조사
프랑스 INSEE(2002)	공식/비공식 네트워크, 지역관점, 감정 및 태도 등	설문조사
영국 통계청(2004)	시민 참여, 사회 참여, 사회적 지원, 신뢰, 상호의존, 지역적 관점 등	설문조사
독일 노동사회부(2002)	참여, 만족, 공동체인지, 사회적네트워크, 신뢰 등	설문조사
김성권(2007)	개인에 대한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	설문조사
양정호(2007)	단체 참여(정치단체 등), 자원 봉사(기금모금 등)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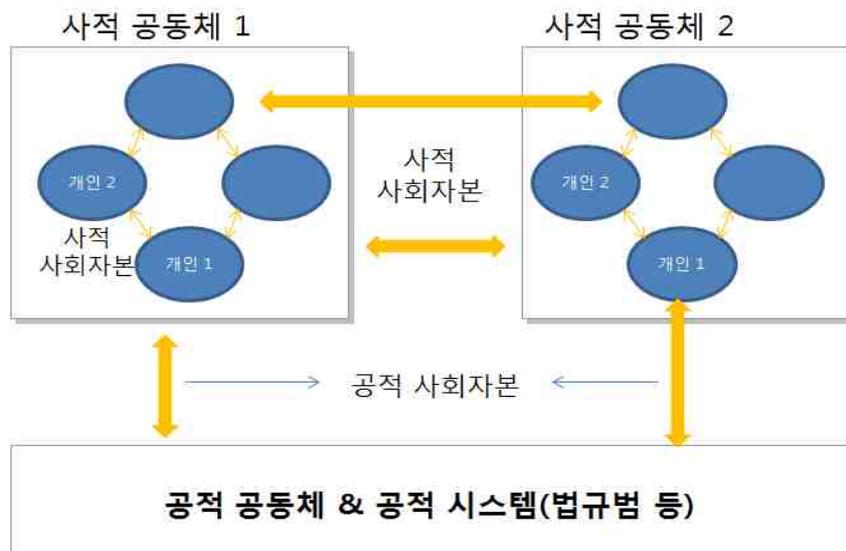
8) Putnam, R. (2000). Bowling Alone. Simon and Schuster

9) WorldBank(2002)

② HRI 사회자본의 개념

-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신뢰, 참여, 배려를 통해 공적, 사적 공동체 내외간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유무형의 자본'으로 정의함
 - HRI 사회자본의 정의는 OECD 정의(Networks together with shared norms, values and understandings that facilitate cooperation within or among groups)를 기본으로 함
- 크게 사적 사회자본과 공적 사회자본으로 구분되며, 공식 및 비공식 그룹까지 포함된 공동체 범주 내에서 상호 간에 긍정적 힘을 발생시키는 행위나 가치를 포함함
 - 사적 사회자본은 가족, 친구 등 사적 공동체 내의 신뢰, 배려 등 가치인식과 이들과의 참여 등의 적극적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유무형의 자본¹⁰⁾
 - 공적 사회자본은 국가나 NGO 등 공적 공동체에 대한 신뢰, 배려 등 가치인식과 이들에 대한 참여 등의 적극적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유무형 자본¹¹⁾으로 정의됨

<그림 2> 사회자본의 형성



- 10) 사적 사회자본은 OECD에서 말하는 Bonding 사회자본과 Bridging 사회자본을 포함하는데, Bonding 사회자본은 좀 더 친밀관계(가족, 친구 등)에서 발생하는 사회자본이고, Bridging 사회자본은 가족이난 친한 친구보다 좀 더 덜 친밀한 관계(이웃, 직장 동료 등)에서 발생하는 사회자본을 의미함
- 11) 공적 사회자본은 OECD에서 말하는 Linking 사회자본을 포함하는데, Linking 사회자본은 공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자본을 의미함

③ HRI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 (사적 사회자본) 사적 사회자본은 사적 신뢰, 사적 배려, 사적 참여로 구성
 - 사적 신뢰는 가족이나 친구 등은 물론이고 사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타인에 대한 신뢰
 - 사적 배려는 개인의 자유 의지에 대한 인정과 소수자 등 타인에 대한 개인의 사적인 배려
 - 사적 참여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교류, 종교 등 사회적 활동 참여, 자원봉사 및 기부 활동 등임

- (공적 사회자본) 공적 네트워크는 공적 신뢰, 공적 배려, 공적 참여로 구성
 - 공적 신뢰는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행정부에 대한 신뢰, 안전에 대한 신뢰 등 국가의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
 - 공적 배려는 삶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배려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공적인 배려
 - 공적 참여는 투표 참가 등 정치적 활동, 정치인이나 공무원 등과의 공적인 교류 등임

<표 2> 사회자본 구성요소별 속성

구분		속성	기존 연구
사적 사회자본	사적 신뢰	- 가족이나 친구 및 타인에 대한 사적 공동체 내의 신뢰	영국 통계청 (2004), 프랑스 INSEE(2002), 독일 노동사회부 (2002) 참조
	사적 배려	- 소수자 배려 등 타인에 대한 개인의 사적인 배려	
	사적 참여	- 가족이나 종교 단체와의 교류와 자원봉사 및 기부 활동 등의 참여	
공적 사회자본	공적 신뢰	- 행정, 사법시스템 등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	
	공적 배려	- 경제적 약자 등 국민에 대한 국가의 공적 배려	
	공적 참여	- 단체, 정치 참여 활동 등과 정치인, 공무원 등과의 공적인 교류	

③ 사회자본지수 추정 방법과 구성요소별 측정 지표¹²⁾

- (측정 지표 선정) ISSP, ESS, Gallup World Poll, OECD, Legatum Institute 등의 설문 문항과 양적 지표를 통해 사회자본에 적합한 측정지표들을 선정함
 - 각 구성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질적 지표 4개와 양적 지표 1개 등 총 5개의 측정 지표를 선정함
 - 질적 지표는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ESS(European Social Survey), Gallup World Poll, OECD, Legatum Institute의 설문 문항에서 추출함
 - 양적지표는 OECD의 각종 사회지표 중 적합한 측정지표를 선정함

- (구성요소별 지수 산출 방법) 구성요소별 지수는 해당 요소의 개별 지표들의 산술평균으로 정의함
 - 데이터의 점수 : 질적 데이터의 경우 각 지표별 만점을 10점으로 하여 모든 개별 지표들을 지수화하였고, 양적 데이터의 경우 각 지표는 표준화 후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지수화함
 - 구성요소별 지수 산출방법 : 구성요소별 지수는 해당 요소의 개별 지표들의 산술평균으로 정의
 - 사회자본지수 : 6개 각 구성요소지수의 산술평균으로 정의

- (구성요소별 측정지표) 6대 구성요소별 측정 지표는 각 구성요소를 적합하게 표현하는 항목들로 구성됨
 - 아래 <표 3>에서 보듯이, 사회자본을 나타내는 구성요소별 측정 지표는 6대 구성요소별로 각각 5개씩 총 30개로 구성됨
 - 사적 신뢰는 타인신뢰, 친척이나 친구 신뢰, 가족 구성의 해체 등으로, 사적 배려는 이민자나 성수자에 대한 관용, 선택의 자유 등으로, 사적 참여는 자원봉사, 기부, 타인에 대한 도움 등으로 구성됨
 - 공적 신뢰는 정부나 사법시스템의 신뢰, 안전에 대한 신뢰 등으로, 공적 배려는 경제적 약자 배려, 환경보호 관심 등으로, 공적 참여는 공적업무 관심, 정치의견 정당한 제시 등으로 구성됨

12) 본고에서의 6대 구성요소 구분과 이에 따른 측정지표의 선정은 OECD 국가들의 수준 비교가 가능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음. 또, 6대 구성요소의 속성과 대표 지표들이 없을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대리지표들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표 3> 사회자본을 나타내는 구성요소별 지표

구분	지표	기준연도	설명	
사적 사회자본	사적 신뢰	타인 신뢰	2010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 정도
		친척과 친구 신뢰	2012	어려움에 처했을 때 친구나 친척 의존 정도
		타인에 대한 부정적 경험	2012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부정적 경험의 정도
		가족 구성의 해체	2010	가족 구성에서 차지하는 사별, 이혼, 별거 비율
		이혼율	2011	연간 이혼건수를 연간인구로 나눈 수치의 1,000분비(양적지표)
	사적 배려	이민자에 대한 관용	2012	이민자가 살기 적합한지 정도
		성소수자에 대한 관용	2012	성소수자가 살기 적합한지 정도
		선택의 자유 인정	2012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살기 적합한지 정도
		어린이의 적절한 성장	2012	어린이에게 적정 성장과 교육 기회를 마련해주는지 여부
		성별 일삶균형 차이	2012	하루 중 여가/개인 용무에 사용하는 성별 시간 차(양적지표)
	사적 참여	자원 봉사 활동 참여	2012	최근 한달간 자원활동 여부
		기부 활동 참여	2012	최근 한달간 기부활동 여부
		타인에 대한 도움	2012	최근 한달간 타인을 도왔는지 여부
		종교적 행사 참여	2012	최근 한주간 종교 행사 참여 여부
		평생교육기간	2010	5세 아동이 39세까지 받을 수 있는 교육 연수의 합(양적지표)
공적 사회자본	공적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	2012	정부에 대한 신임 여부
		사법시스템 신뢰	2012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임 여부
		교육시스템 신뢰	2012	교육시스템이나 학교에 대한 만족 여부
		안전에 대한 신뢰	2012	거주 지역에서의 야간 활동시 느끼는 두려움 정도
		살인율	2010	인구 중 해당 비율(양적지표)
		공적 배려	경제적 약자 배려	2012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		2012	정부의 환경보호에 대한 노력 정도
	기초 생활 여건 제공		2012	적절한 음식이나 잠자리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성실한 사람의 성공		2012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
	공적 참여	GDP 중 복지지출 비중	2012	노인, 장애인, 보건, 가족, 실업, 주거 등 사회정책관련 지출 비중. 현금 및 현물지원 합(양적지표)
		공적 업무에 대한 관심	2012	지난달 공적 업무에 대한 관심 표명 여부
		정치적 권리 행사 제약	2010	정치적 권리 행사에 대한 제약 여부
		정치 의견 정당한 제시	2012	두려움없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지 여부
		일자리 참여 가능성	2012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지 여부
	투표율	2012	인구 중 투표자 비율(양적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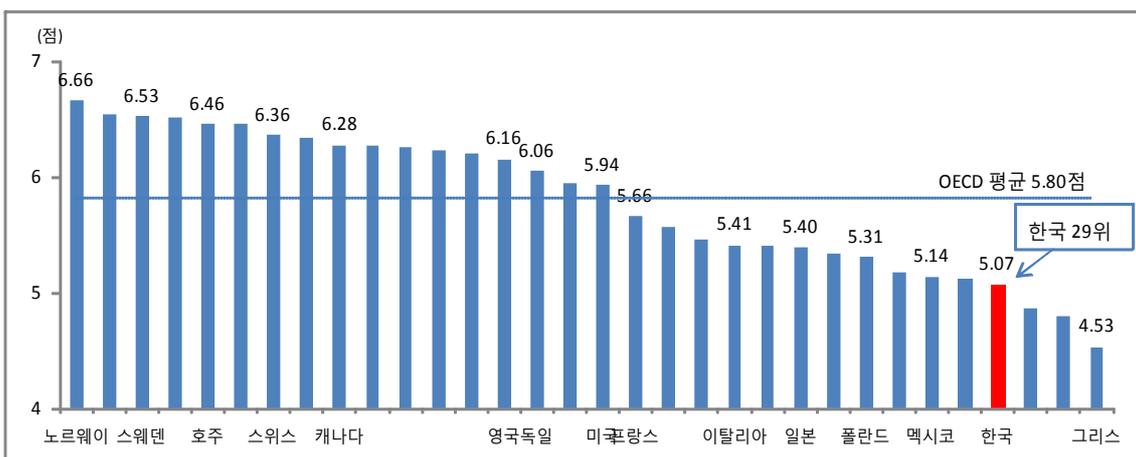
자료 :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ESS(European Social Survey), Gallup World Poll, OECD, Legatum Institute

3. 사회자본지수 추정 결과

○ 한국의 사회자본,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 한국 사회자본지수는 OECD 32개 국가¹³⁾ 중 29위에 불과하여 사회자본 확충에 대한 범국가적인 노력이 요구됨
 - OECD 32개국 내 평균 점수 5.80점보다 한국 사회자본지수는 5.07점으로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의 사회자본지수가 낮은 것은 국민들의 국가사회 시스템에 대한 공적 신뢰가 매우 낮고, 타인에 대한 사적 배려의 취약 등이 주요 원인임
- G7 국가들은 대체로 중위권 이하에 포진하고 있음
 - 캐나다가 G7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6.28점으로 9위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중위권 수준을 보였으나, 일본은 5.40점으로 23위, 이탈리아는 5.41점으로 21위에 불과해 하위권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남
- 복지선도국인 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많이 차지하고 있음
 - 노르웨이(6.66점), 스웨덴(6.53점), 네델란드(6.51점) 등 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주 대륙의 뉴질랜드(6.54점)와 호주(6.46점) 역시 5위 이내에 포진해 사회자본에 강한 면모를 보임

< OECD 주요국 사회자본지수 추정 결과(2012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13) OECD 국가 가운데 이스라엘, 터키는 데이터 부재로 제외

○ 사적 및 공적 사회자본 모두 매우 낮은 수준

- 사회자본지수를 구성하는 사적 사회자본과 공적 사회자본 모두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사적 사회자본이 5.40점으로 OECD 평균 6.22점에 크게 못미치며, 공적 사회자본도 4.75점으로 OECD 평균 5.37점과 큰 격차를 보임
- G7 국가들의 사적 사회자본 평균 점수인 6.35점과 공적 사회자본 평균 점수인 5.37점과도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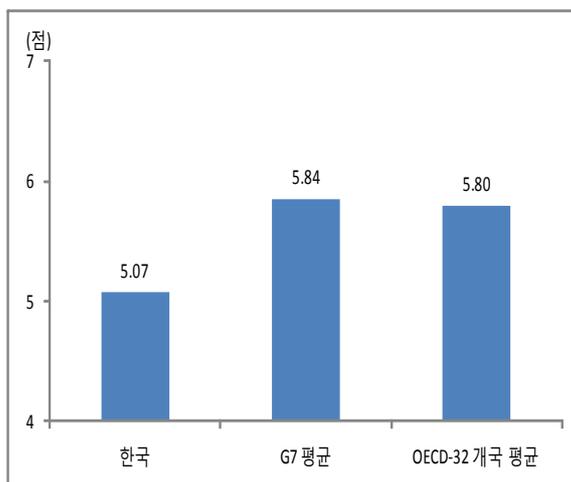
- 사적 사회자본이 낮은 이유는 한국의 사적 배려가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임

- 한국의 경우 사적 참여는 상대적으로 좋은 반면, 사적 배려나 사적 신뢰가 매우 취약해 전체적으로 사적 사회자본지수 점수를 낮춤
- 사적 사회자본 상위 국가로는 아일랜드, 뉴질랜드, 호주 등이 있으며, 하위 국가로는 한국, 그리스, 헝가리, 멕시코 등이 있음

- 공적 신뢰 점수가 너무 낮아 한국의 공적 사회자본 점수를 전반적으로 하락화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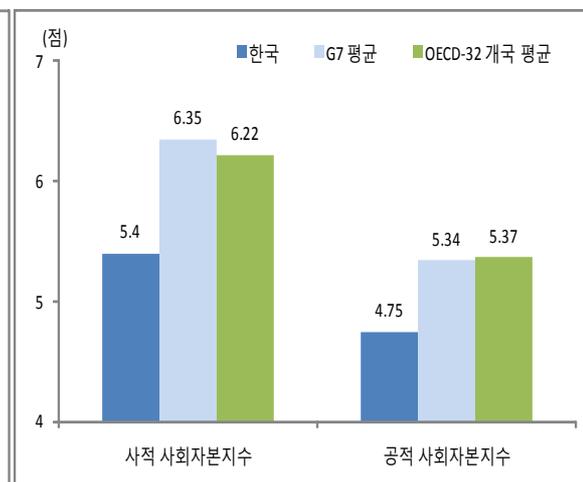
- 공적 참여 점수는 중위권을 유지했지만, 공적 신뢰나 공적 배려 부문이 너무 낮아 공적 사회자본 점수 역시 낮을 수밖에 없음

<한국, G7, OECD 사회자본지수 비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사적 및 공적 사회자본지수 비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한국 사회자본의 가장 취약한 부문, 공적 신뢰

- 한국은 정부나 사법시스템 등 국가의 공적 시스템에 국민들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한국의 공적 신뢰 부문은 OECD 32개국 가운데 3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OECD와 비교해보아도 한국의 공적 신뢰 부문이 매우 취약한 수준임
 - 특히,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경우 2.34점으로 OECD 평균인 5.41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정부에 대한 신뢰나 교육시스템에 대한 신뢰 역시 각각 27위, 29위로 극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공적시스템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낮은 편임
 - 다만, 범죄 등 안전에 대한 신뢰는 상대적으로 높아, 12위인 중위권을 유지하여 공적 신뢰 부문이 최하위는 모면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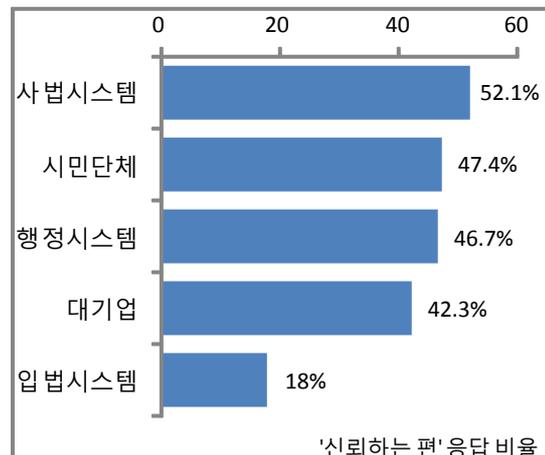
- 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2013년 12월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한국 국민들의 국가사회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46.4%에 불과함
 -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입법시스템 18.0%를 비롯하여 대기업 42.3%, 행정시스템 42.3%, 시민단체 47.4%, 사법시스템 52.1% 등 국민들의 절대적 신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사회자본 추정 결과 - 공적 신뢰>

순위	국가	공적 신뢰
1	스위스	6.85
2	노르웨이	6.52
10	영국	5.72
12	독일	5.64
15	프랑스	5.49
22	일본	4.86
25	미국	4.73
31	한국	4.11
32	멕시코	3.64
OECD 평균		5.31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각 부문별 사회시스템의 신뢰 여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3.12 설문조사.

○ 사적 차원의 타인에 대한 배려도 부족한 한국 사회자본

- 사적 배려 부문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
 - 사적 배려 부문의 경우 5.23점으로 OECD 32개국 중 30위
 - 성소수자에 대한 관용 항목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31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개인 선택의 자유 항목도 29위로 거의 최하위 수준을 보임
 -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지만, 이민자에 대한 관용도 25위에 불과하고 어린이의 성장을 위한 기회 제공 항목도 28위에 불과하여 좋은 점수는 아님

- 사적 신뢰 부문 역시 하위권 수준
 - 사적 신뢰 부문은 6.71점으로 OECD 32개국 중 28위
 - 이는 친척이나 친구에 대한 신뢰가 7.75점으로 OECD 32개국 중 31위를 기록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 가족간의 신뢰가 무너져 이혼율이 높아진 것도 한국의 사적 신뢰 부문 하락에 영향을 미침
 - 하지만, 타인에 대한 신뢰 항목은 22위,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경험 측면에서 15위로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어 최하위권 수준에서 벗어난 상황임

< 사회자본 추정 결과 - 사적 배려, 사적 신뢰 >

종합순위	국 가	사적 배려	사적 신뢰
1	노르웨이	8.53 (3)	8.17 (1)
2	뉴질랜드	8.52 (4)	7.46 (8)
3	스웨덴	8.66 (1)	7.79 (2)
9	캐나다	8.50 (5)	7.28 (10)
14	영국	8.07 (11)	7.05 (18)
15	독일	7.87 (13)	7.03 (20)
17	미국	7.68 (16)	6.59 (31)
18	프랑스	7.42 (18)	6.71 (29)
21	이탈리아	6.00 (26)	7.12 (16)
23	일본	6.42 (22)	7.26 (12)
29	한국	5.23 (30)	6.71 (28)
OECD 평균		7.20	7.14

주 : ()는 OECD 32개국 가운데 순위를 의미

○ 한국 사회자본의 희망, 공적 참여와 사적 참여

- 공적 참여 부문이 사회자본 6개 요소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여 한국 사회자본 확충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공적 참여 부문은 4.14점으로 OECD 32개국 중 16위이지만,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함
 - 공적 참여를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투표율 항목이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따른 제약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기 때문임
 - 다만, 국민들의 공적 업무에 대한 관심(26위)이나 두려움 없이 정치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26위)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요구됨

- 사적 참여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냄
 - 사적 참여 역시 4.26점(18위)으로 OECD 32개국 중에서 중간 수준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음
 - 이는 사적 참여를 구성하는 자원 봉사 활동이나 종교 행사 참여 등의 개별 요소 점수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냈기 때문임
 - 하지만, 기부 활동(23위)이나 타인에 대한 도움 여부(21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사적 참여 부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 활동에 대한 범국민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사회자본 추정 결과 - 사적 배려, 사적 신뢰 >

종합순위	국 가	공적 참여	사적 참여
1	노르웨이	5.34 (1)	4.57 (13)
2	뉴질랜드	4.52 (10)	5.37 (3)
3	스웨덴	5.05 (3)	4.24 (19)
9	캐나다	4.29 (12)	5.22 (5)
14	영국	3.77 (24)	4.84 (7)
15	독일	4.59 (9)	4.58 (12)
17	미국	4.23 (13)	5.85 (1)
18	프랑스	3.98 (20)	3.21 (19)
21	이탈리아	3.77 (25)	4.82 (8)
23	일본	4.00 (19)	3.77 (25)
29	한국	4.14 (16)	4.26 (18)
OECD 평균		4.17	4.32

주 : ()는 OECD 32개국 가운데 순위를 의미

○ 한국 사회자본, G7 모든 국가에게 뒤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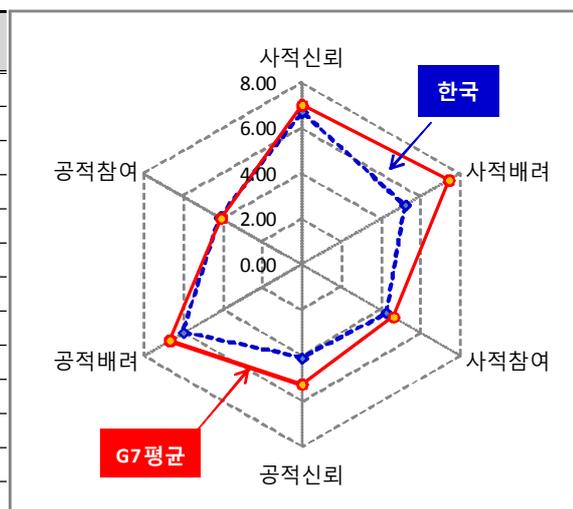
- 전체 사회자본지수뿐 아니라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사적 사회자본과 공적 사회자본 모두 G7 국가보다 절대적으로 취약한 수준임
 - 전체 사회자본지수뿐 아니라 사적 및 공적 사회자본으로 나누어 분석해보더라도, G7 국가 중 한국보다 뒤지는 나라는 전혀 없음
 - 사적 사회자본의 경우 OECD 32개국 중 최하위권인 29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G7 평균에 한참 못미침
 - 공적 사회자본도 한국은 OECD 32개국 평균에 뒤떨어지며 순위도 28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6개 구성요소별로 보더라도, 한국의 경우 공적 참여를 제외하고 G7국가에 비해 열악한 수준임
 - G7 전체 평균으로 살펴보면, 공적 참여는 한국이 4.14점으로 G7 평균 4.09보다 약간 앞서지만 나머지 5개 부문에서는 한국이 G7 평균보다 모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남
 - G7 국가별로 6개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사적 참여의 경우 프랑스와 일본이, 공적 참여의 경우 영국, 프랑스, 일본이 한국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른 4개 부문에서 G7 모든 국가의 점수가 한국보다 뛰어남

< 주요국 사회자본지수 비교 >

종합 순위	국 가	사적 사회자본	공적 사회자본	전체 지수
1	노르웨이	7.09	6.22	6.66
2	뉴질랜드	7.12	5.96	6.54
3	스웨덴	7.02	6.00	6.53
9	캐나다	7.00	5.55	6.28
14	영국	6.65	5.66	6.16
15	독일	6.49	5.62	6.06
17	미국	6.71	5.17	5.94
18	프랑스	5.78	5.55	5.66
21	이탈리아	5.98	4.85	5.41
23	일본	5.81	4.98	5.40
29	한국	5.40	4.75	5.07
G7 평균		6.35	5.34	5.84
OECD 평균		6.22	5.37	5.8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과 G7의 6개 구성요소별 비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4. 시사점

- 국가시스템 개조를 통해 범국가 차원의 공적 신뢰 향상 필요
 - 국가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개조를 통해 한국 사회자본 중 가장 부족한 공적 신뢰 향상을 통한 경제 발전의 원천적인 경쟁력 제고
 - 공적 신뢰성 향상을 위해 행정부 개혁, 사법질서의 확립, 사회전반에 걸친 부패 방지, 사회적 계약을 중시하는 풍토 조성 등이 필요
 - 또한, 신뢰와 관련 교육 투자와 강력한 정책 추진을 통해 개인과 집단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

- 한국의 사회자본 가운데 강점인 사적 참여와 공적 참여의 활용도 제고
 - 사적 참여와 공적 참여를 매개로 한 사회자본 확충 노력 추진
 - 사적 참여와 공적 참여가 사회자본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사회전반의 소통 원활화가 필요
 -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뛰어난 사적 참여와 공적 참여를 매개로 한 타 구성요소로의 전환 노력이 요구됨

- 사회자본 구성 요소의 전반적인 확충을 위한 정부 추진 체제 구축
 - 국가 전체의 사회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에 걸친 동시다발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복잡한 정책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한 정부내 정책추진체제 구축이 요구됨
 - 정부 부처 간, 정부와 민간 부문 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통합하여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 추진 체제가 마련되어야 함 **HRI**

장후석 연구위원(2072-6234, chahus@hri.co.kr)

고승연 연구위원(2072-6308, yeon@hri.co.kr)

【참고 문헌】

- 우천식·김태중(2007). 한국 경제사회와 사회적 자본, 한국개발연구원
- 차문중(2007). 법질서의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KDI정책포럼 제 173호,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2007). 한국경제 사회와 사회적 자본, 한국개발연구원.
- 황준성(2005).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와 한국경제, 신뢰연구 15(2), pp.3-43.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0). Measuring Social Capital; Current Collection and Future Directions, Discussion Paper.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4). Measuring Social Capital ; An Australian Framework and Indicators, Information Paper.
- Babb, P. (2005). Measurement of social capital in the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London.
- Coleman, J.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pp. 300-321.
- Costa, D.L., Kahn, M.E. (2003). Understanding the American decline in social capital. *Kyklos* 56, 17-46.
- European Social Survey (ESS). [<http://www.europeansocialsurvey.org/>]
- 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Germany(2002). Social Capital: Presentation of the major German statistics and the topics they cover. Country paper prepared for the OECD-ON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Capital Measurement London
- Ferragina, E. (2013). "The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social capital. Making Democracy Work revisited. <http://cos.sagepub.com/content/54/1/48.abstract>
- INSEE, France(2002). Direction des Statistiques Démographiques et Sociales. Country paper prepared for the OECD-ON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Capital Measurement London
- Knack, Stephen and Philip Keefer (1997). "Does Inequality Harm Growth Only in Democrac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1), January 1997, 323-32.
- Paxton, P. (1999). Is Social Capital Declining in the United States? A Multiple Indicator Assessment. -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 (1), 88-127.
- Putnam, R. (2000). *Bowling Alone*. Simon and Schuster.
- Putnam, Robert D. (2006). *E Pluribus Unim: Diversity and Commun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Nordic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 World Bank Social Capital Website. <http://www.worldbank.org/poverty/scapital/index.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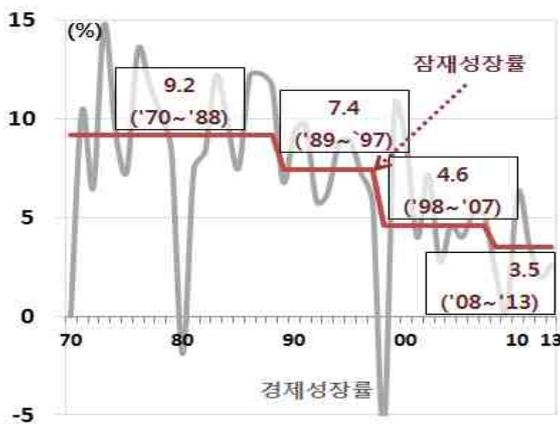
소득 4만불 시대 조기 진입을 위한 과제¹⁴⁾

1. 개요

○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성장의 질적 수준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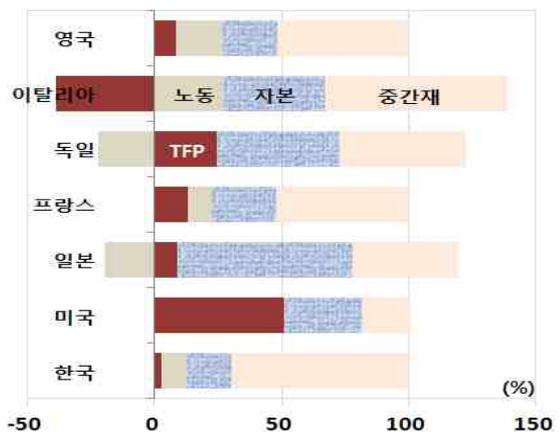
- (잠재성장률 하락)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4.6%에서 이후 3.5%로 급락한 것으로 추정
 -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4.6%에서 이후 3.5% 수준까지 하락함
 - 2012년 연구원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8~2013년) 잠재성장률 수준은 3.8%이었으나, 이번에 2008~2013년으로 확장하여 추정한 결과 3.5% 수준으로 평가됨
- (성장의 질적 수준 악화) 효율성이나 자본스톡보다는 중간재 투입에 의존하는 후진국형 경제 성장 구조 지속
 - 한국의 2000년대(2000~2010년) 기간 동안 생산 요소 중 총산출에 대한 기여율이 가장 높은 요인은 중간재(70.0%)이며, 다음으로 자본(17.3%), 노동(10.2%)의 순서이고, 총요소생산성(TFP)의 산출 기여율은 2.6%에 불과함¹⁵⁾
 - 한편, 2001~2005년의 기간 동안 이탈리아를 제외한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의 총요소생산성(TFP)의 산출 기여율 평균치는 21.2%에 달함

<한국 잠재성장률 추이>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16)

<산출에 대한 생산요소별 기여율(01~05년, 한국 01~10년) 추이>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주: 중간재 = 원재료 + 에너지 + 서비스

14)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13-07호, “소득 4만불 시대 조기진입을 위한 대응전략의 모색” (2013.12.4)

15) EU-KLEMS 및 한국생산성본부.

○ 선진국 추격의 지연과 경제적 위상의 후퇴

- (선진국 추격의 지연) 한국의 1인당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소득)는 1995년 1만 달러를 상회한 이후, 15년 만인 2010년에서야 2만 달러대에 안착
 - 한국 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1995년 1만 1,735달러)한 이후 2만 달러 시대로 완전히 진입(2010년 2만 562달러)하는 데에는 15년이 소요
 - 이 기간중 두 번의 경제충격(외환위기 및 금융위기)으로 9년 동안 국민소득이 후퇴를 경험하였는데, 이러한 충격이 없었다면 6년 내외의 기간 만에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진입이 가능했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됨¹⁷⁾
 - 이러한 국민소득의 후퇴는 경제성장률보다 환율 상승에 따른 효과가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됨¹⁸⁾
 - 또한,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2만 5,000 달러 내외로 추정되며 2016~2017년경에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¹⁹⁾되고는 있으나,
 - 글로벌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 이후 다양한 불안 요인들로 인해 '세계 경제 위기의 상시화'가 예상되고 있고 한국경제가 가지는 높은 대외의존도를 감안할 때,
 - 예상치 못한 글로벌 충격으로 경제성장률 저하나 환율 상승이 재연될 경우 3만 달러 시대로의 진입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경제적 위상의 후퇴) 한국 경제 규모(명목GDP)의 세계 순위는 2004년 11위를 정점으로 후퇴하여 현재 15위를 기록
 - 한국 경제규모(명목 GDP)의 세계 순위는 1970년 38위(세계GDP 비중 0.3%)에서 2013년 현재 15위(세계GDP 비중 1.6%)로 상승
 - 2004년 11위를 기록한 적도 있으나 이후 러시아, 인도, 호주, 브라질 등 대규모 경제권들이 우리를 추월하면서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5위를 유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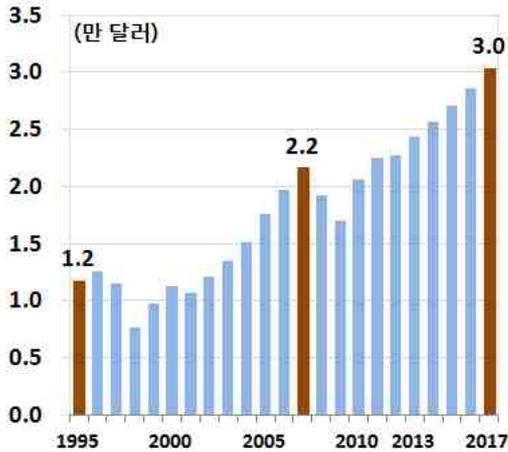
16) 현대경제연구원(2014), "2014년 한국 경제: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복원에 주력해야 한다.", VIP REPORT, 14-1(통권 552호)

17) 1997~2002년의 기간 동안에는 1996년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에 미달하였으며, 2008~2010년의 기간 동안에도 2007년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음

18) 예를 들어 2008년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 대비 약 11%가 감소하였는데 이중 명목경제성장률이 +5%p의 증가효과를 가진 반면, 환율변동은 -16%p의 감소효과를 가짐

19) 현대경제연구원(2014), "2014년 한국 경제 희망요인", 경제주평, 14-02(통권 573호)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전망>



자료: 1) 2013년 이후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
2) 2012년 이전은 한국은행.

<한국 경제규모(명목GDP) 세계 순위 및 비중 추이>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UN 및 IMF 통계를 이용한 계산.

○ 새로운 경제발전전략 대한 필요성 증대

- 한국 경제의 동력이 상실되고 정체되고 있는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델과 다른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
- 이에 최근 정부도 한국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소득과 잠재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 같은 새로운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음
 - 정부는 연초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잠재성장률 4%의 경제적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의 추진 방향은 ① 공공 부문 개혁,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 ② 내수와 수출,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균형 성장, ③ 창의성, 시장 확대, 노동력 확보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등으로 이해 될 수 있음
- 민간 부문에서도 이제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전략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나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임

- 이에 본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미래”와 “바람직한 경제발전전략”이라는 주제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의미를 분석해 봄으로써 최근의 새로운 전략 모색 움직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 설문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13년 12월 18일 ~ 26일
- 조사방법 : 설문지 직접 기입식
- 조사대상 : 경제전문가 72명 (정출연 27명, 민간연 27명, 협회/단체 10명, 기타 8명)

2. 한국 경제의 미래와 바람직한 발전 전략(설문조사 결과)

- (10년 후 한국 경제의 미래) 10년 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대 초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3.5만 달러, 경제규모 세계 순위는 (G11~G15)으로 응답
 - 『10년 후 한국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2%대』가 전체의 6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 특히, 세부 구간별로는 『2%대 초반』을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3.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2%대 후반』의 응답 비율이 31.9%를 기록
 - 응답 구간별 중위값을 뜻수로 가중 평균할 경우 10년 후 전체 응답자들이 예상하는 잠재성장률 평균치는 2.8%로 추정
 - 『10년 후 예상하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3만~3.5만 달러(62.5%)』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기록
 - 다음으로는 『3.5만~4만 달러(19.4%)』, 『2.5만~3만 달러(18.1%)』의 순서로 나타남
 - 그러나 『4만 달러 이상』을 응답한 사람은 전체 조사대상중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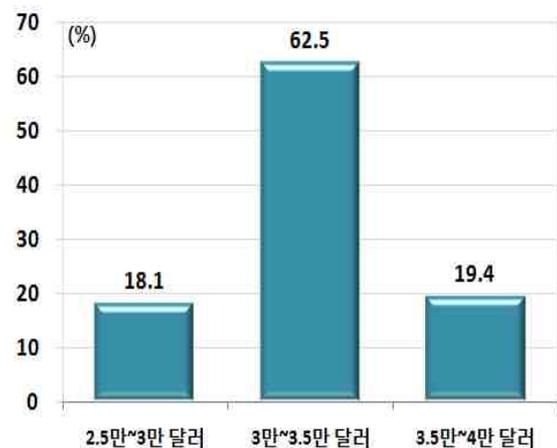
- 『10년 후 한국 경제의 모습은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현재(G15)경제력 수준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G11~G15)』 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9.7%를 차지
 - 다음으로 『경제 강국으로 진입 - G10 이내 진입(22.2%)』, 『현재(G15) 경제력 수준보다 소폭 하락 - G16~G20(11.1%)』 의 순서임
 - 한편, 『중진국 함정에 빠진 저성장 국가로 전락 - G20 밖(4.2%)』, 『경제 대국으로 부상 - G7 진입(2.8%)』 은 소수로 나타남

<10년 후 잠재성장률 전망(설문조사)>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10년 후 한국 1인당 국민소득 전망(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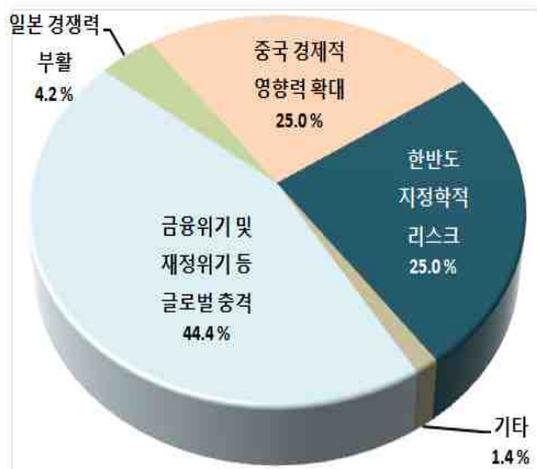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 (경제 대국화를 가로막는 대내외 불안 요인) 한국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데 대외 불안요인으로는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 등 글로벌 충격』, 대내 불안요인으로는 『투자부진과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를 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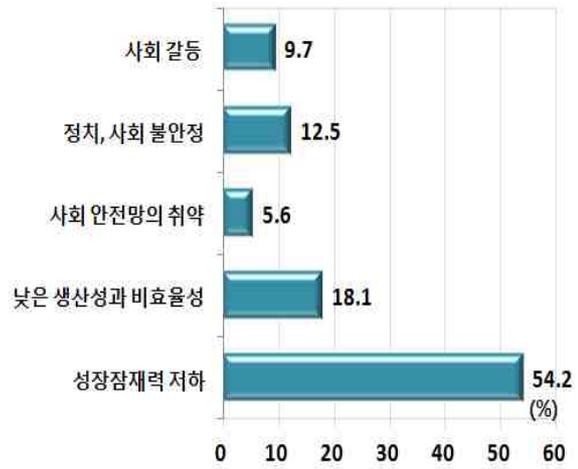
- 『향후 한국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데 대외적으로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 등 글로벌 충격(44.4%)』 이 가장 많이 응답
 - 이외 『중국 경제적 영향력 확대(25.0%)』 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25.0%)』 도 비교적 높은 응답 비율을 기록함
 - 반면 『일본 경쟁력의 부활(4.1%)』 은 소수의 의견에 그침

- 『향후 한국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데 대내적으로 가장 큰 걸림들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투자부진과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54.2%)』 의 항목이 다수를 차지
 - 다음으로 『낮은 생산성과 비효율성(18.1%)』, 『정치, 사회 불안정(12.5%)』 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 『사회갈등(9.7%)』, 『사회 안전망의 취약(5.6%)』 도 10% 미만의 응답 비율을 기록함

<경제대국화의 대외적 걸림들(설문조사)> <경제대국화의 대내적 걸림들(설문조사)>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 향후 바람직한 경제 발전 전략

- 대체적으로 한국 경제가 선진국의 선도형 경제발전 전략으로의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
 - 조사 결과 『현재 한국 경제는 개도국의 추격형 경제발전 전략에서 선진국의 선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모색중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조사 대상자의 60.6%가 한국의 『전략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라고 응답
 - 반면, 『아직 중진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성급한 시각이다』 라는 응답 비율은 28.2%에 그침

- (정부의 역할) 정부 부문의 경제적 비중은 낮은 수준이나 약 86.1%가 현재보다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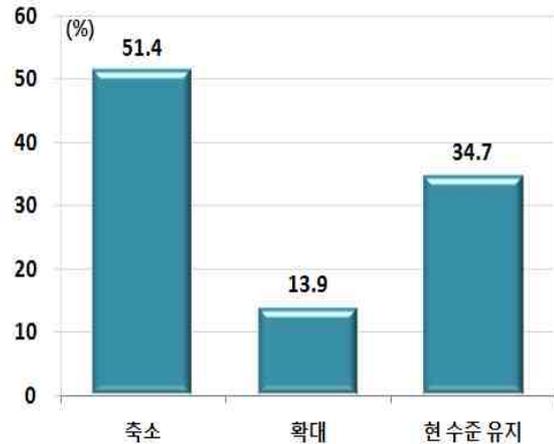
- 『향후 정부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장기적인 비중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축소』 해야 한다고 51.4%로 다수를 차지
- 한편, 『현 수준 유지』 가 34.7%로 조사되었으며 『확대』 해야 한다고 13.9%로 낮은 비율을 기록함
-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정부 부문의 비중이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약 86.1%가 최소한 현재 수준보다 더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나타남

<추격형 발전전략에서 선도형 발전전략으로 전환 가능성(설문조사)>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향후 바람직한 정부부문의 경제적 비중(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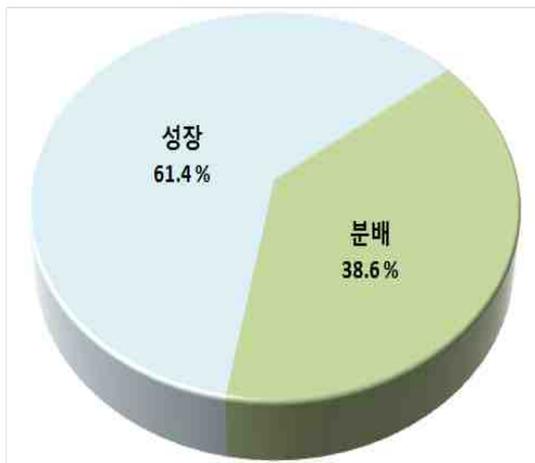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 『미래를 대비한 한국의 경제발전전략에 대해 성장과 분배중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성장』 과 『분배』 가 약 6:4의 비율로 응답

- 『성장(61.4%)』 에 대한 응답 비율이 『분배(38.6%)』 에 대한 배율을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성장과 분배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으나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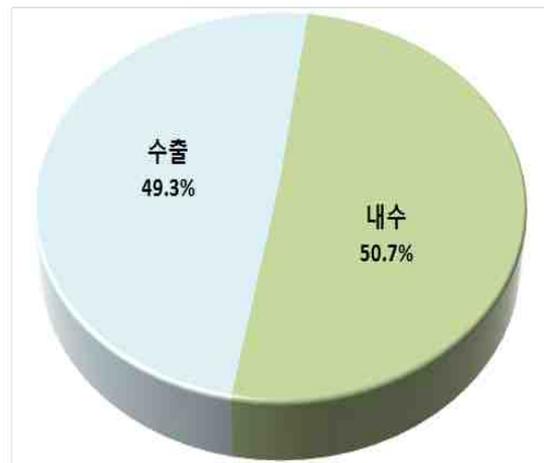
- 『경제발전전략에 대해 수출과 내수중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수출』 과 『내수』 가 약 5:5의 비율로 응답
 - 『수출(49.3%)』 과 『내수(50.7%)』 의 비율이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조사됨
 - 이는 두 가지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수출’과 ‘내수’의 균형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나,
 - 다른 한편으로 경제전문가 사이에서도 ‘수출’과 ‘내수’중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음

<향후 경제발전전략에서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설문조사)>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향후 경제발전전략에서 수출과 내수의 우선순위(설문조사)>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 『현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력산업의 한계 시점은 언제로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5년 후』 를 응답한 비율이 61.1%로 다수를 차지
 - 한편, 『이미 한계에 봉착』 되었다고 보는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의 응답 비율도 15.3%에 달하였으며,
 - 향후 『10년 후에 한계에 봉착』 할 것이라는 비율은 18.1%, 『20년 후 이상』 을 응답한 비율은 5.6%에 그침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62.5%가 『신성장산업 발굴(62.5%)』 을 응답
 - 다음으로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심화 방지(18.1%)』 , 『투자규제 완화 및 외국인투자 유치(9.7%)』 , 『수출시장 확대(4.2%)』 의 순서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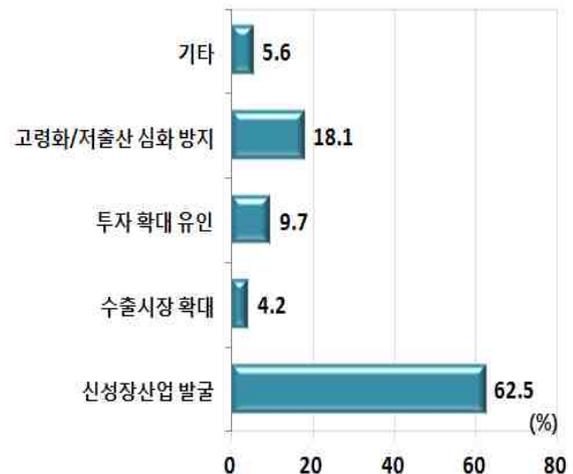
- 이는 성장잠재력 확충의 1차적인 투입 요소는 노동과 자본이나, 경제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요인, 즉 투자의 수요처 또는 투자 동기(motive)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력 산업의 한계 봉착 시기(설문조사)>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설문조사)>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3. 시사점

첫째, 4만 달러 시대로의 조기 진입을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대외 충격에 대한 내성을 길러야 한다.

-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조로화(早老化)로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설문 응답자의 65.2%가 10년 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대(응답자 평균 2.8%)로 전망
 - 또한 62.5%가 10년 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대 초반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4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응답

- 한편 가장 큰 대외 불안요인으로는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 등 글로벌 충격』을 지목하고 있는데, 4만 달러 달성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대외충격에 대한 내성 강화도 필수적임
- 이를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의 원천인 투자 확대를 통한 자본 확충이 시급하며, 대외 충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 및 외환 시장 안정성을 제고시키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둘째, 경제 강대국으로의 발돋움을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필요하다.

-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10년 후에도 G10 이내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지 않다고 보고 있음
 - 응답자의 59.7%가 현재 경제력(G15) 수준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G11~G15)할 것으로 전망함
 - 나아가 응답자의 75%가 G10 이내로의 진입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함
- 21세기는 선진국보다는 국토면적과 인구규모가 큰 경제대국이 세계경제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됨
 - 2005년 이후 한국의 경제규모 순위가 급락한 것은 러시아, 인도, 호주, 브라질 등의 대규모 경제권에 추월당했기 때문이며, 최근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G2로 일컬어지고 있음
- 따라서 한국이 경제 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을 통한 경제규모 확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투자부진 및 인구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설문 문항 중 『투자부진과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54.2%)』가 경제대국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대내 요인으로 지목된 점을 고려하면 투자 수요처 및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경제 통합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경제 대국화의 대외적 걸림돌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25.0%)』도 비교적 높은 응답 비율을 기록하고 있어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안정도 요구됨

셋째, 향후 한국 경제를 이끌고 갈 경제발전전략에 대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요구된다.

- 전문가들의 과반수 이상은 한국 경제가 선진국의 선도형 경제발전 전략으로의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것으로 판단됨
 - 선진국 형으로의 전략 전환이 성공할 것으로 보는 응답 비율은 60.6%를 기록하였으며 어려울 것으로 보는 비율은 28.2%에 그침
 - 나아가 설문 결과를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전략 전환 성공의 여부와 함께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구체적 각론에서는 '성장과 분배' 간, '수출과 내수' 간에 어느 쪽을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설문 결과 바람직한 경제발전전략의 중심에 대해서 성장과 분배가 「6 : 4」, 수출과 내수가 「5 : 5」의 비율로 응답함
 - 이는 다시 말하면 경제발전전략의 전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향후 한국 경제를 이끌고 '21세기 한국형 경제모델'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보다 확산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넷째, 공공 부문의 과도한 확대를 경계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는 경제 성장이 요구된다.

- 많은 경제전문가들의 시각은 정부 부문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정부지출 규모가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부문의 비중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51.4%로 나타남

- 또한 『현 수준 유지』도 34.7%로 조사되어 86.1%가 최소 현재 수준보다 더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본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민간 부문이 중심이 되어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다만, 재정지출이나 재정수입 같은 정부 부문의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통해 국가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다섯째, 대규모 투자의 수요처가 되어 경제성장을 견인할 주력 산업의 발굴이 시급하다.

- 경제전문가들은 현재의 주력 산업은 5년 후면 한계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에 신성장산업 발굴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현재 주력산업의 한계 시점에 대해서 『5년 후』를 응답한 비율이 61.1%로 다수를 차지함
 - 또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62.5%가 『신성장산업 발굴』을 응답하고 있음
- 성장잠재력의 원천이 투자를 통한 자본스톡의 확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부문이 조속히 부상해야 할 것임
 - 제조업 부문에서 신기술·신성장산업의 조기 발굴을 위한 노력도 경주해야 하지만, 아직 고도화되지 못해 오히려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산업 내 고부가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노력도 경주되어야 할 것임

HRI

주 원 수석연구위원 (2072-6235, juwon@hri.co.kr)

【별첨】 설문 조사 결과

문1.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 수준은 약 3%대 중후반 수준, 선진국들의 경우 1~2%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0년 후 한국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2% 미만	2%대 초반	2%대 후반	3%대 초반	3%대 후반 이상
전체	9.7	33.3	31.9	23.6	1.4
정부출연연구소	14.8	37.0	25.9	22.2	0.0
민간연구소	3.7	18.5	44.4	29.6	3.7
협회/단체	10.0	70.0	10.0	10.0	0.0
기타	12.5	25.0	37.5	25.0	0.0

문2.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2만 4,000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0년 후 예상하는 소득수준은?

(%)	2.5만~3만 달러	3만~3.5만 달러	3.5만~4만 달러	4만 달러 이상
전체	18.1	62.5	19.4	0.0
정부출연연구소	14.8	70.4	14.8	0.0
민간연구소	14.8	63.0	22.2	0.0
협회/단체	30.0	40.0	30.0	0.0
기타	25.0	62.5	12.5	0.0

문3. 10년 후 한국 경제의 모습은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 대국으로 부상(G7 진입)	경제 강국으로 진입(G10 이내 진입)	현재(G15)경제력 수준보다 소폭 상승(G11~G15)	현재(G15) 경제력 수준보다 소폭 하락(G16~G20)	중진국 함정에 빠진 저성장 국가로 전락(G20 밖)
전체	2.8	22.2	59.7	11.1	4.2
정부출연연구소	3.7	18.5	59.3	11.1	7.4
민간연구소	0.0	11.1	70.4	14.8	3.7
협회/단체	10.0	50.0	40.0	0.0	0.0
기타	0.0	37.5	50.0	12.5	0.0

문4. 현재 한국 경제는 개도국의 추격형 경제발전 전략에서 선진국의 선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모색중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전략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아직 중진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성급한 시각이다	모르겠다
전체	60.6	28.2	11.3
정부출연연구소	69.2	19.2	11.5
민간연구소	48.1	40.7	11.1
협회/단체	70.0	20.0	10.0
기타	62.5	25.0	12.5

문5. 향후 한국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데 대외적으로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 등 글로벌 충격	일본 경쟁력 부활	중국 경제적 영향력 확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기타
전체	44.4	4.2	25.0	25.0	1.4
정부출연연구소	51.9	0.0	14.8	33.3	0.0
민간연구소	25.9	7.4	44.4	22.2	0.0
협회/단체	70.0	0.0	10.0	10.0	10.0
기타	50.0	12.5	12.5	25.0	0.0

문6. 향후 한국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데 대내적으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	투자부진과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낮은 생산성과 비효율성	사회 안전망의 취약	정치, 사회 불안정	사회갈등
전체	54.2	18.1	5.6	12.5	9.7
정부출연연구소	59.3	7.4	7.4	11.1	14.8
민간연구소	51.9	22.2	3.7	14.8	7.4
협회/단체	50.0	30.0	10.0	10.0	0.0
기타	50.0	25.0	0.0	12.5	12.5

문7. 미래를 대비한 한국의 경제발전전략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성장	분배
전체	61.4	38.6
정부출연연구소	57.7	42.3
민간연구소	59.3	40.7
협회/단체	70.0	30.0
기타	71.4	28.6

문8. 미래를 대비한 한국의 경제 성장은 어느 부문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출	내수
전체	49.3	50.7
정부출연연구소	54.2	45.8
민간연구소	33.3	66.7
협회/단체	70.0	30.0
기타	62.5	37.5

문9. 현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력산업의 한계 시점은 언제로 생각하십니까?

(%)	이미 한계에 봉착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이상
전체	15.3	61.1	18.1	5.6
정부출연연구소	25.9	63.0	11.1	0.0
민간연구소	3.7	66.7	18.5	11.1
협회/단체	20.0	60.0	20.0	0.0
기타	12.5	37.5	37.5	12.5

문10. 향후 정부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장기적인 비중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축소	확대	현 수준 유지
전체	51.4	13.9	34.7
정부출연연구소	51.9	18.5	29.6
민간연구소	40.7	11.1	48.1
협회/단체	50.0	10.0	40.0
기타	87.5	12.5	0.0

문11.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	신성장산업 굴 발	수출시장 확대	투자규제 완화 및 외국인투자 유치	고령화 및 저출 산 문제 심화 방지	기타
전체	62.5	4.2	9.7	18.1	5.6
정부출연연구소	63.0	3.7	7.4	18.5	7.4
민간연구소	63.0	3.7	11.1	18.5	3.7
협회/단체	60.0	0.0	10.0	20.0	10.0
기타	62.5	12.5	12.5	12.5	0.0

서비스 2년 연속 흑자의 명(明)과 암(暗)²⁰⁾

1. 서비스 수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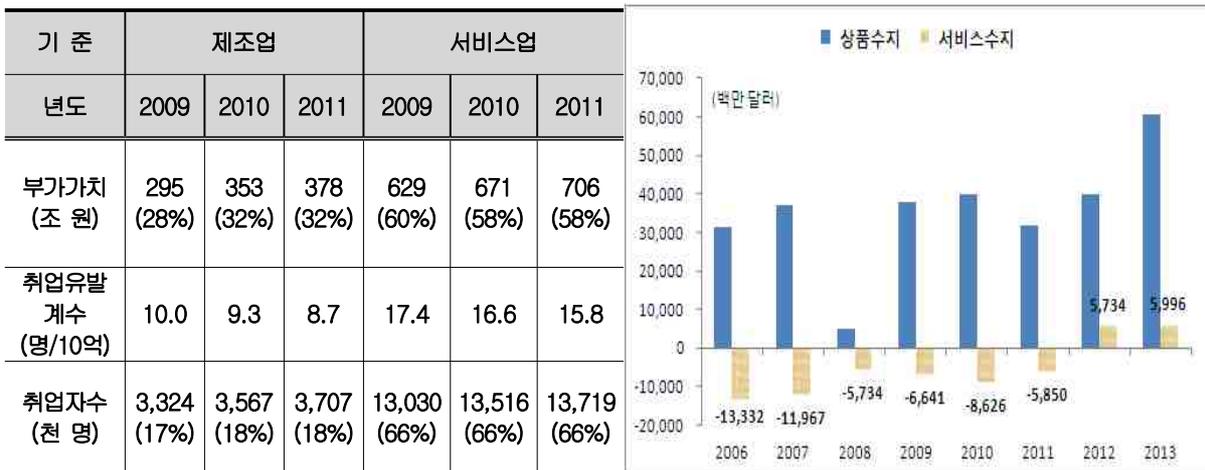
○ 국내 경기 활성화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해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최근 더욱 부각

- 서비스업은 국내 경기 활성화와 더불어 고용률 제고를 위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선진국형 경제구조²¹⁾로 도약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이 필요함
- 2011년 기준 서비스업은 고용의 66.1%(1,372만 명), 부가가치의 58.1%(706조 원)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10억 원 당 제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8.7명에 불과하지만 서비스업은 15.8명으로 두 배에 달해 고용률 제고를 위해 서비스업 확대 및 서비스업 수출 산업화가 필요
- 이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는 서비스 수출의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서비스 수출의 특징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

○ 서비스수지는 1998년 이후 적자를 기록하다 2012년 흑자로 전환된 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

- 상품수지는 흑자를 지속하는 반면에 서비스 수지는 1998년 이후 적자를 지속하다 2012년 흑자로 전환된 후 2013년에도 흑자 지속
- 서비스수지가 1998년 이후 적자를 지속하며 적자폭이 확대되었으나 2012년 57억 흑자를 기록해 14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되었고 2013년 60억 달러 흑자 기록

< 한국 경제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교 > < 한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지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주 : ()는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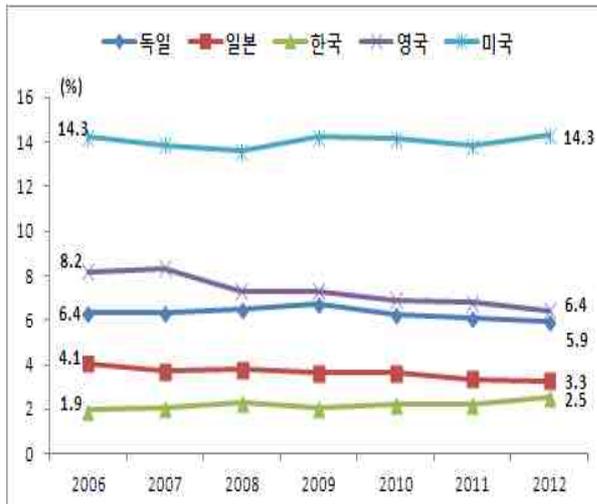
20)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4-05호, “서비스 2년 연속 흑자의 명과 암” (2014.1.29)

21) OECD가 2014년에 발표한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2009년 기준 한국이 60.3%, 미국 79.4%, 일본 71.5%, 독일 72.7%, 영국 75.5%(2008년 기준)로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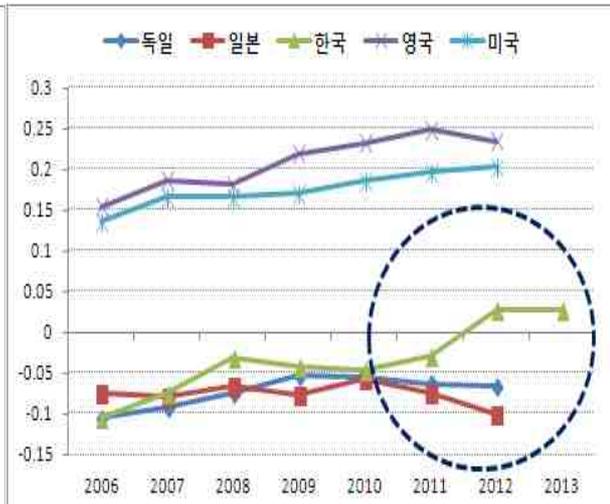
○ 한국의 서비스 수출 세계 시장 점유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증가세를 나타내고, 서비스 수출의 무역특화지수도 제조업 강국 독일, 일본에 비해 크게 개선

- 세계 총 서비스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총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지만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냄
 - 세계 총 서비스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총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1.9%에서 2012년 2.5%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12년 기준 세계 총 서비스 수출 시장에서 각 나라의 총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14.3%, 영국 6.4%, 독일 5.9%, 일본 3.3%를 기록했고 미국은 제외하고 영국, 독일, 일본은 2006년 대비 비중이 하락함
- 한국 서비스 수출의 무역특화지수는 상승하며 2012년 이후 플러스로 전환
 - 서비스 수출 무역특화지수는 영국과 미국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에 제조업 중심의 한국, 일본, 독일은 낮게 나타남
 - 한국 서비스 수출 무역특화지수는 2010년 이후 상승세를 나타내며 개선됨

< 서비스 수출 세계 시장 점유율²²⁾ 추이 > < 서비스 수출의 무역특화지수²³⁾ 추이 >



자료 : WTO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산출
주 : 점유율=서비스 수출/세계 총 서비스 수출



자료 : WTO,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이 산출
주 : 무역특화지수=(수출-수입)/(수출+수입)

22) 세계 총 서비스 수출 시장에서 EU(27개국)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47%에서 2012년 42%로 하락함

23)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는 각 품목의 수출입 차를 해당품목의 수출입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수출에 있어서 상대적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임. 무역특화지수는 $-1 \leq TSI \leq 1$ 의 값을 가지며, 0에서 -1로 갈수록 수입특화의 정도가 높아짐. 반면 +1로 갈수록 수출특화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함. 무역특화지수는 국제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는데 0과 1 사이 값이면 그 제품이 무역 흑자를 기록해 국제경쟁력이 강한 것을 뜻하고 -1에 가까울수록 그 제품이 적자를 기록해 국제경쟁력이 약한 것을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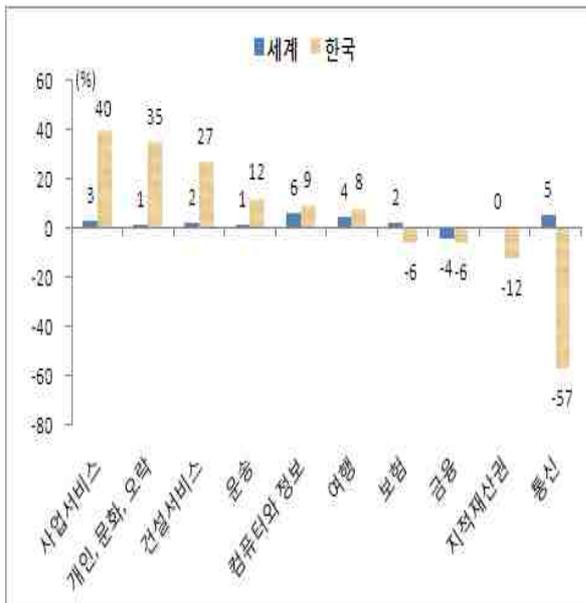
2. 서비스 2년 연속 흑자의 명(明)과 암(暗)

① 긍정적 측면

○ 첫째, 세계 수출 시장 규모가 큰 업종에서 수출 증가율이 높아서 향후 수출 증가의 지속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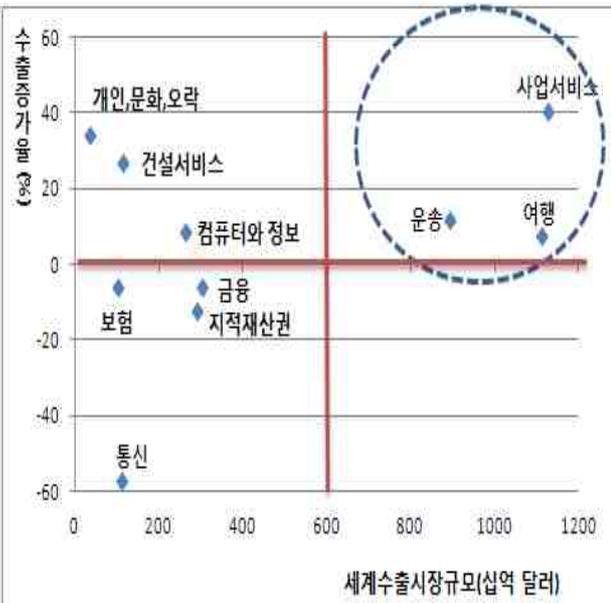
- 사업 서비스, 운송 서비스 및 여행의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세계 수출 증가율보다 높고 이들 업종은 세계 수출 시장 규모가 커 성장 가능성이 높음
- 사업 서비스, 개인·문화·오락, 건설, 운송, 여행 서비스의 2012년 세계 수출 증가율은 각각 전년대비 3%, 1%, 2%, 1%, 4%를 나타낸 반면 한국 수출 증가율은 각각 40%, 35%, 27%, 12%, 8%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세계 서비스 수출 시장 규모가 평균이상으로 큰 업종은 사업 서비스, 여행, 운송 서비스로 나타나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높은 항목이 세계 시장 규모도 커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음

< 세계 및 한국의 서비스수출 증가율 >



자료 : WTO, 한국은행
 주 : 1) 2012년 기준 전년대비 증가율
 2) 세계는 WTO, 한국은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해 증가율을 산출함

< 한국의 서비스수출 증가율 및 세계 서비스수출 시장 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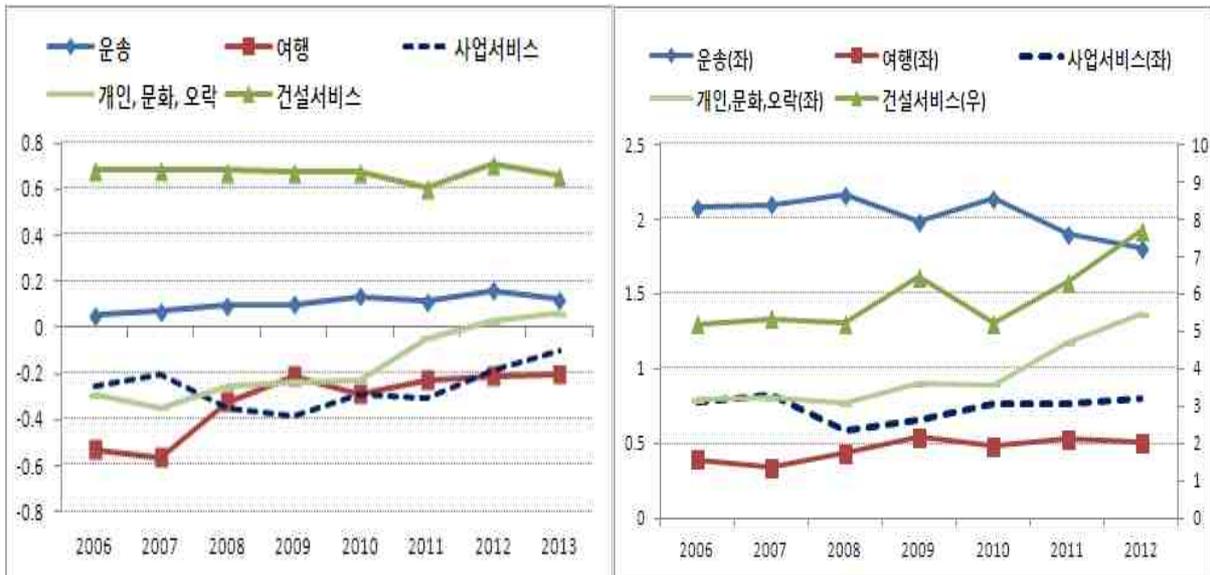


자료 : WTO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산출
 주 : 1) 2012년 기준
 2) 세계시장규모 대소 구분은 항목별 서비스 수출시장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함

○ 둘째, 개인·문화·오락 서비스와 건설서비스의 수출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음

- 개인, 문화, 오락 서비스의 무역특화지수와 현시비교우위지수가 개선되고 건설서비스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크게 개선되며 이들 업종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짐
- 2011년까지 개인, 문화, 오락 서비스의 무역특화지수는 지속적인 수지 적자로 인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2012년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흑자로 전환되어 무역특화지수가 플러스를 기록하며 수출특화로 전환됨
- 개인, 문화, 오락 서비스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2010년까지 1이하 수치를 지속하여 비교열위를 나타냈으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2011년과 2012년 각각 1.2, 1.4를 기록하여 비교우위로 전환되며 수출경쟁력이 상승함
- 건설 서비스는 최근 해외건설 수주의 증가로 인해 현시비교우위지수가 2012년 7.7을 기록하며 크게 개선됨

< 한국의 수출 항목별 무역특화지수 > < 한국의 수출 항목별 현시비교우위지수²⁴⁾ >



자료 :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이 산출. 자료 : WTO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산출
 주 : 무역특화지수=(수출-수입)/(수출+수입) 주 : 현시비교우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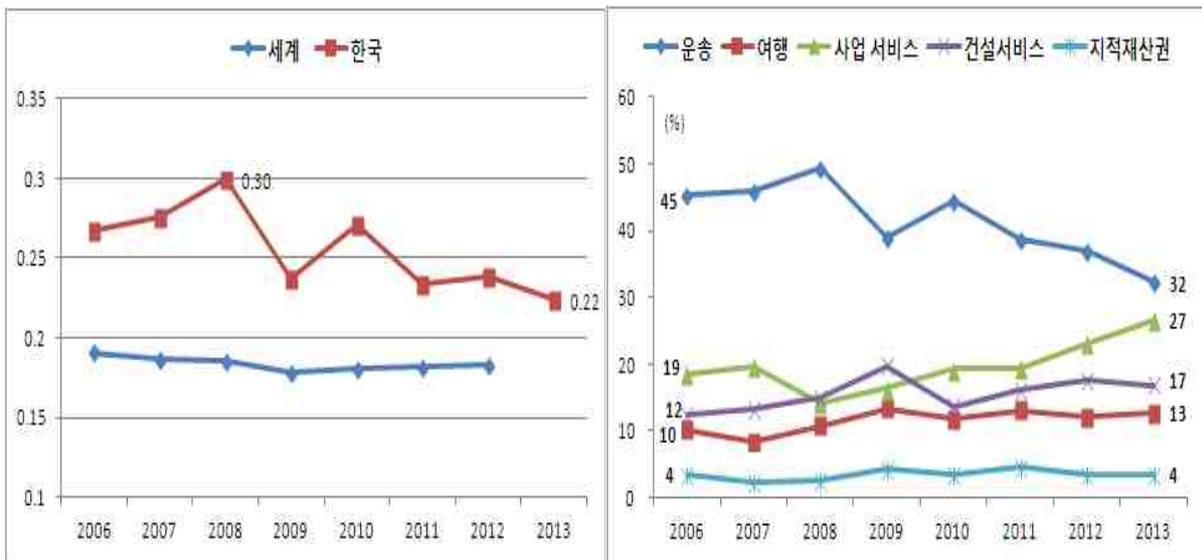
$$= \frac{(\text{한국의 각 서비스 항목 수출} / \text{한국의 총 서비스 수출})}{(\text{세계의 각 서비스 항목 수출} / \text{세계 총 서비스 수출})}$$

24) Balassa(1965)의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지수는 세계 전체 서비스 수출시장에서 특정 서비스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가의 서비스 수출에서 동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사이의 비율로 서비스 수출 산업의 비교우위를 판단하는 지표로써 그 값이 1보다 크면 해당 국가의 특정상품이 비교 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RCA 지수가 1보다 작으면 비교우위가 없는 것을 의미

○ 셋째, 서비스 수출의 업종별 편중성이 완화되고 있음

- 운송서비스가 전체 서비스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수출 편중성이 높았으나 최근 사업 서비스, 여행, 개인·문화·오락 서비스 수출이 확대되며 편중성이 완화
- 서비스 수출 편중성을 나타내는 수출 집중도를 살펴보니, 상위 5개 업종의 수출 집중도가 2008년 0.30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13년 0.22으로 크게 하락해 우리나라 수출의 편중성이 완화되었고 세계 수출의 편중성은 동기간 큰 변화가 없음
- 운송 서비스가 전체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50%를 넘으며 서비스 수출이 운송 서비스에 편중 되었으나 2013년 33%로 크게 낮아진 반면에 사업 서비스, 여행, 개인·문화·오락 서비스 수출 비중이 소폭 확대

< 서비스 수출 상위 5개 업종 편중도²⁵⁾ > < 한국 서비스 수출 상위 5개 업종 비중 >



자료 : WTO,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이 산출
 자료 :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이 산출
 주 : 전체 서비스 수출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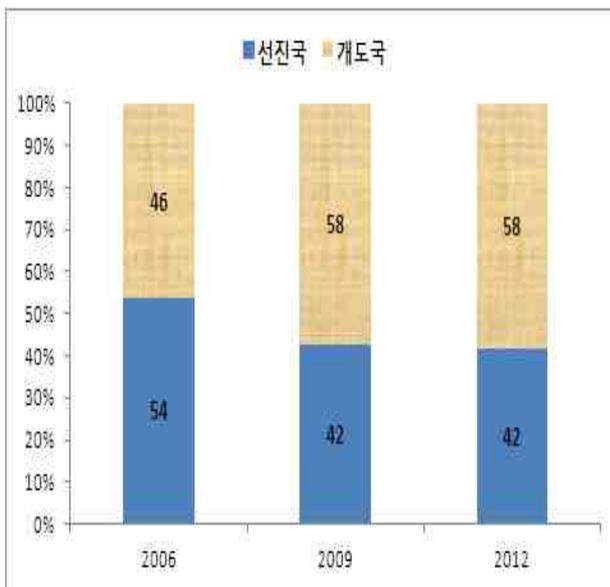
- 주 : 1) 편중성은 상위 5개 업종별 서비스 수출의 비율을 구한 후 이 수치의 제곱의 합
 2) 세계는 운송, 여행, 사업, 지적재산권, 금융 서비스가 상위 5개 업종에 해당함
 3) 한국은 운송, 여행, 사업, 지적재산권, 건설 서비스가 상위 5개 업종에 해당함

25) 수출편중성을 나타내는 수출 집중도(Export Concentration Index)는 Herfindahl-Hirschmann Index라고도 하며 이 값이 높을수록 총수출에 대한 각각의 수출품목의 비중이 균등하게 분산되어 있지 않고 편중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각 서비스산업 수출이 총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한 후 각 값의 제곱의 합을 구한 수치가 HHI 지수를 산출하는 공식임

○ 넷째, 서비스 수출시장이 다변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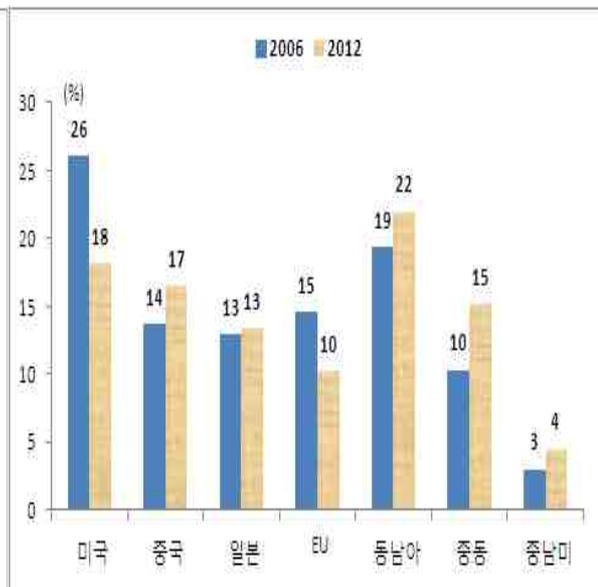
- 금융위기 이후 개도국으로 서비스 수출이 증가하며 전체 서비스 수출에서 개도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서비스 수출시장이 다변화되고 있음
- 중국으로 수출되는 서비스 수출이 전체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14%에서 2012년 17%로 상승했고 동남아시아도 동기간 19%에서 22%로 상승하며 개도국 수출 비중 확대
- 반면에, 2006년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서비스 수출이 전체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4%이었으나 2012년에는 42%로 감소함
- 특히, 미국과 유럽 시장으로 수출되는 서비스 수출이 전체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각각 26%, 15%에서 2012년 18%, 10%로 크게 감소한 반면에 일본은 소폭 증가함

< 한국의 지역별 서비스 수출 비중 >



자료 : 한국은행
주 : 선진국은 미국, EU, 일본을 포함

< 한국의 국가별 서비스 수출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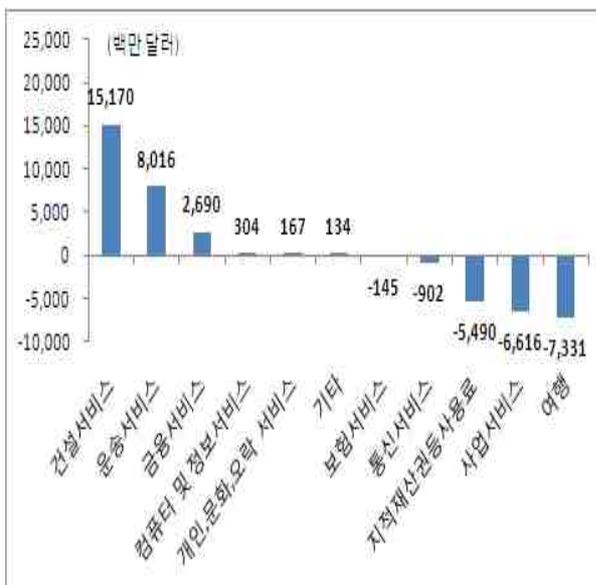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주 : 중동은 해외건설 수주 확대에 의해 건설 서비스 수출 증가로 서비스 수출 급증

② 부정적 측면

○ 첫째,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중심의 흑자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중심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서비스 수지 흑자 항목과 적자 항목을 살펴보면, 흑자가 운송 및 건설 서비스업의 저부가가치 업종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적자는 고부가가치 업종에 많이 집중되어 있음
- 2013년 기준 서비스 수지 흑자를 기록한 항목 중 건설 서비스와 운송 서비스가 흑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로 흑자가 이들 2개 업종에 크게 집중된 반면에 사업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고부가가치 업종은 서비스 수지 적자를 기록함
- 주요 선진국의 서비스 수지를 살펴보면, 서비스 수지 흑자가 사업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 사용료 등 고부가가치 업종에 많이 집중되어 있음²⁶⁾
- 독일, 영국, 미국은 사업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에서 흑자를 나타내고 있어 서비스 수출 산업의 구조가 고도화되어 있는 반면에 한국은 이들 부문에서 적자를 지속

< 한국의 항목별 서비스 수지 >



자료 : 한국은행
 주 : 기타는 유지보수서비스와 정부서비스를 포함

< 주요 선진국 항목별 서비스 수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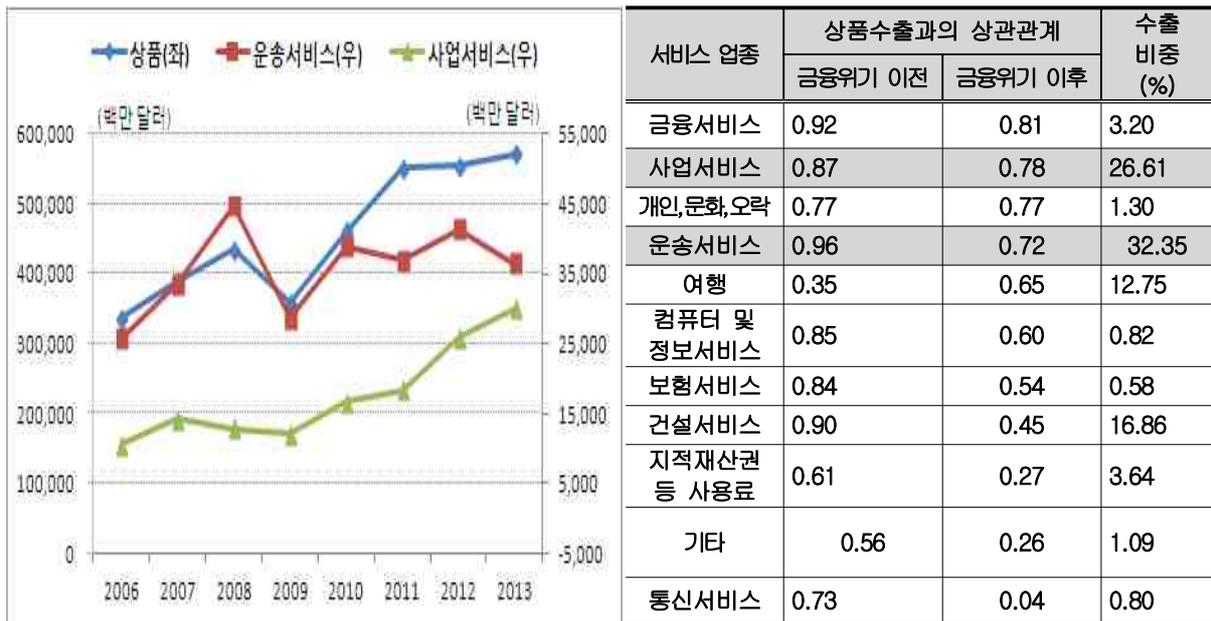
자료 : WTO
 주 : 1) 2012년 기준
 2) 미국은 2011년 기준

26) 업종별 국가별 서비스 수지 비교는 별첨 참조

○ 둘째, 제조업 수출과 연동된 서비스업 중심의 수출로 인해 세계 경제 위기가 상품과 서비스 수출에 동시에 전이되는 취약한 구조임

- 대외지향적 제조업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인해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고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냄
- 상품 수출과 운송서비스와 사업서비스 수출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금융위기 이후 다소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각각 0.72, 0.78로 높은 수준이고 이들 서비스 부문의 수출이 전체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나타냄
- 제조업과 연동된 서비스업 중심의 수출 구조는 금융위기 등 세계 경제 위기에 상품 수출 뿐 아니라 서비스업 수출도 동시에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위기에 취약한 수출 구조임

< 상품 및 운송, 사업 서비스 수출 추이 > < 상품 수출과 운송서비스 수출 상관관계 >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월자료를 이용해 수치를 구함
 주 : 1) 금융위기 이전은 2000.1~2008.12 이고
 금융위기 이후는 2009.1~2013.12임
 2) 기타는 유지보수서비스와 정부서비스를 포함
 3) 수출 비중은 2013년 기준임

3. 시사점

○ 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서비스 수출 흑자 구조를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기업 및 정부 차원에서 정책이 필요

-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인 사업서비스 및 지식 재산권 사용료의 서비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 마케팅 및 시장조사, 법률, 회계 및 경영컨설팅 등 사업 서비스 분야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업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
 - 특허 및 핵심 기술의 개발을 통해 지적 재산권 등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하여 각각의 서비스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향 모색
 - 방송, 게임, 교육, 영화 등의 부문에서 한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적극적인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 한류 문화와 연계한 여행 상품 개발 및 의료관광 등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여행 서비스 수출 경쟁력 제고
 - 운송 서비스의 수출 경쟁력은 매우 높은 수준이나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기업들의 투자 및 경영 여건이 침체되어 있는 바, 정부는 전략적인 물류 수송 정책 추진으로 여건 개선을 지원
- 중, 장기적으로는 부족한 인프라 보완이나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서비스업의 수출 업종을 다양화
 - 멀티미디어와 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창조적 콘텐츠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와 제품의 상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융합 상품 개발에 노력
 - 컴퓨터에서 모바일로 진화하며 발전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큰 부문으로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 및 연구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서비스 수출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국 및 신흥국에 대한 시장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확대
- 중국 및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 상품 개발로 우리나라 금융업의 강점을 발휘해 금융 서비스 분야의 수출을 확대하여 수출 시장 다양화 **HRI**

김민정 연구위원 (2072-6212, kimmj@hri.co.kr)

【별첨】 서비스 항목별 주요 자료

< 서비스 항목별 내용 및 세계 수출 시장 규모 >

서비스 항목	내 용	세계 수출 시장 (십억 달러)
운송	선박 및 비행기 등 운송수단에 의해 발생한 서비스의 수출입으로 항공 및 해상의 화물운임, 여객운임, 운항 경비 및 조달 등을 포함	891.9
여행	유학, 여행 및 여행 경비, 여행 알선 및 수수료, 여행자 수표 등을 포함	1110.7
통신	원거리통신(telecommunication)과 우편 서비스를 포함하는데 원거리통신은 전화, 전보, 라디오와 TV 케이블, 인터넷 통신망, 위성 방송, 핸드폰 서비스, 인터넷 접속 서비스 등을 포함	111.5
건설	해외 건설 프로젝트, 설비 등에서 이루어지는 건설 서비스와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	113.0
보험	거주 보험회사(resident insurance enterprises)와 비거주자(non-resident) 또는 비거주 보험회사(non-resident insurance enterprises)와 거주자(resident) 간에 보험계약을 통해 발생된 서비스 거래를 포함	100.3
금융	은행, 증권 회사, 신용 카드 회사, 채권 매수 회사 등에 의해서 제공되는 중개 및 기타 서비스를 포함	303.1
컴퓨터와 정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뉴스 및 기사 공급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웹 서치 포털 등의 정보 서비스를 포함	262.7
로열티, 사용료	로열티 및 사용료는 무형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사용료 및 특허, 저작권, 상표권, 가맹점 영업권, 산업 공정 등의 소유권에 대한 사용료 등을 포함	289.6
사업 서비스	무역중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광고 및 마케팅 수수료, 법률, 회계, 경영컨설팅, 시장 조사 및 분석, 공학 및 기술 서비스, 홍보 서비스, 여론 조사 등을 포함	1127.2
개인, 문화, 오락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뮤지컬 리코딩, 문화 콘텐츠 및 관련 공연 등이 포함된 음향·영상 서비스와 공연, 박물관, 도서관, 역사 기록관, 문화, 스포츠, 오락 활동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	36.4

자료 : WTO

주 : 2012년 기준

< 한국의 항목별 서비스 수지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서비스 업종	2006	2009	2012	2013
건설서비스	5,695	11,747	16,345	15,170
운송서비스	2,674	5,242	11,339	8,016
금융서비스	1,996	1,573	2,217	2,690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350	-183	-16	304
개인,문화,오락	-302	-323	65	167
기타	745	415	451	134
보험서비스	-580	-395	-304	-145
통신서비스	-370	-502	-747	-902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2,605	-3,989	-4,672	-5,490
사업서비스	-7,173	-15,005	-11,793	-6,616
여행	-13,063	-5,221	-7,151	-7,331
합계	-13,333	-6,641	5,734	5,996

< 주요 선진국 항목별 서비스 수지 >

(단위: 백만 달러)

서비스 업종	독일	일본	영국	미국
운송서비스	-11,392	-15,163	5,287	-5,995
여행	-45,754	-13,298	-16,118	63,071
통신서비스	309	-213	4,250	4,829
건설서비스	2,390	3,816	695	672
보험서비스	2,347	-7,783	15,365	-41,143
금융서비스	6,285	1,430	47,829	57,848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2,474	-3,140	7,754	-9,037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1,210	11,927	3,217	84,216
사업서비스	7,549	-8,906	34,826	38,983
개인,문화,오락	-1,619	-1,020	2,987	329
기타	27,858	-1,444	112,211	106,213
합계	-8,343	-33,793	218,303	299,986

자료 : 한국은행

주 : 기타는 유지보수서비스와 정부서비스를 포함

자료 : WTO

주 : 1) 2012년 기준이고 미국은 2011년 기준

2) 기타는 유지보수서비스와 정부서비스를 포함

< 한국의 서비스 항목별 무역특화지수 추이 >

	운송	여행	통신	보험	금융	컴퓨터 와 정보	지적재 산권 등	사업서 비스	개인,문 화,오락	건 설 서 비스
2006	0.05	-0.53	-0.22	-0.51	0.65	-0.41	-0.39	-0.25	-0.29	0.69
2007	0.07	-0.56	-0.25	-0.41	0.70	-0.23	-0.49	-0.20	-0.35	0.68
2008	0.10	-0.32	-0.23	-0.23	0.69	-0.31	-0.41	-0.36	-0.26	0.68
2009	0.10	-0.21	-0.26	-0.37	0.53	-0.30	-0.38	-0.38	-0.24	0.68
2010	0.14	-0.29	-0.27	-0.26	0.53	-0.36	-0.48	-0.29	-0.23	0.68
2011	0.11	-0.23	-0.30	-0.14	0.58	-0.13	-0.25	-0.31	-0.05	0.61
2012	0.16	-0.21	-0.51	-0.24	0.53	-0.02	-0.38	-0.19	0.03	0.71
2013	0.12	-0.20	-0.33	-0.10	0.59	0.19	-0.40	-0.10	0.06	0.66

자료 :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이 산출

주 : 무역특화지수=(수출-수입)/(수출+수입)

< 한국의 서비스 항목별 현시비교우위지수 추이 >

	운송	여행	통신	보험	금융	컴퓨터 와 정보	지적재 산권 등	사업서 비스	개인,문 화,오락	건설 서비스
2006	2.08	0.39	0.46	0.23	0.58	0.10	0.60	0.78	0.79	5.20
2007	2.10	0.34	0.32	0.26	0.64	0.10	0.41	0.82	0.80	5.34
2008	2.16	0.44	0.32	0.24	0.54	0.07	0.44	0.59	0.77	5.22
2009	1.99	0.54	0.37	0.17	0.41	0.05	0.65	0.65	0.90	6.47
2010	2.14	0.48	0.39	0.23	0.43	0.05	0.55	0.77	0.89	5.23
2011	1.90	0.53	0.35	0.24	0.48	0.08	0.68	0.76	1.17	6.33
2012	1.81	0.51	0.31	0.20	0.42	0.07	0.47	0.81	1.37	7.69

자료 : WTO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이 산출

주 : 현시비교우위지수

$$= \frac{(\text{한국의 각서비스 항목수출} / \text{한국의 총서비스수출})}{(\text{세계의 각서비스 항목수출} / \text{세계 총서비스수출})}$$

【참고 자료】

- 1) 「기술집약도에 따른 한국 제조업의 장기적 수출경쟁력 변화」 주경원, 국제무역연구, 8(1), 1-31. 2002
- 2) 「아시아 신흥국 서비스 시장의 성장과 시사점」, VIP REPORT, 현대경제연구원, 2011
- 3) 「한국의 주요 서비스산업 수출경쟁력 분석을 위한 현시비교우위지수간의 비교분석과 시사점」, 정분도, 윤봉주, 전우근, 무역연구 제 5권 제 3호, 2009
- 4)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VIP REPORT, 현대경제연구원, 2010

한중일 분업구조, 한국의 몫이 줄어들고 있다²⁷⁾

1. 한중일의 협력과 경쟁 심화

○ 지난 10년간 한중일의 대세계 수출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별로는 한중일 3국간 수출 경쟁이 심화

- 세계 상품 수출시장에서의 한중일의 대세계 수출액 비중이 급증
 - 2012년 현재, 세계 상품 수출 중 한중일 수출총액의 비중은 약 27%로 지난 2000년 17.6%보다 약 10%p 상승
 - 한중일 3국의 대세계 수출총액은 지난 2012년 각각 4,630억 달러, 1조 9,250억 달러, 7,100억 달러로 지난 2000년보다 각각 3배, 9배, 2배 증가
- 산업별로 살펴보면, 한중일 3국간 치열한 경쟁관계를 나타냄
 - 철강분야는 2012년 현재 중국과 일본의 대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각각 9.2%, 9.8%로 지난 2000년 각각 3.1%, 11.2%보다 경쟁이 치열
 - 자동차 분야도 2012년 현재 일본의 점유율이 12.9%로 한국과 중국 각각 5.5%, 4.4%보다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한중간 경쟁 가속
 - 특히, 조선분야에서는 기존의 한일 간 경쟁구도에서 최근에는 한국과 중국의 경쟁체제로 전환

< 세계 상품 수출 중 한중일 비중 추이 >

(십억 달러) (%)



자료 : WTO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통관기준 상품수출.

< 주요 제조업 산업별 한중일의 대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00	'12	'00	'12	'00	'12
철강	5.2	6.3	3.1	9.2	11.2	9.8
기계	3.4	3.0	3.0	18.9	11.5	8.0
자동차	2.8	5.5	0.8	4.4	16.1	12.9
조선	21.2	26.0	4.2	26.7	26.4	15.3
정밀기기	1.0	7.2	3.3	14.0	17.7	8.8

자료 : UN Comtrade 자료로 HRI 자체 계산.
주 : 1. 산업 분류는 HS 코드 2단위 기준에 따라 철강(72), 기계(84), 자동차(87), 조선(89), 정밀기기(90)로 구분.
2. 5개 산업은 각국의 전체수출 중 비중이 70% 이상

27)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14-04호, “한중일 분업구조, 한국의 몫이 줄어들고 있다” (2014.1.24)

2. 한중일 제조업의 분야별 협력과 경쟁 관계

1) 분석방법

- 국제투입산출표(WIOD)²⁸⁾를 이용하여 한중일 3국간 제조업의 협력과 경쟁 구도 파악
 - 한중일 3국간 협력·경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2000~2011년 사이의 국가간 제조업 투입산출 데이터를 분석
 - 국가 간 부가가치 기준에서 특정국의 최종수요에 대해 국가 간 생산 및 수출입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를 통해 3국간 협력·경쟁 관계 규명
 - 분석방법²⁹⁾은 14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수출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통해 한중일 3국간 협력과 경쟁 관계 파악
 - 국가별 산업 분석 대상은 국제투입산출표의 35개 산업 중, 1차 산업, 광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제조업 14개 항목³⁰⁾으로 선정
 - 우선, 역내에서 한중일 3국의 상호 협력관계를 보기 위해 한중일의 산업별 부가가치 의존도³¹⁾ 분석, 다음으로 3국의 역내에 대한 국가별 부가가치 기여도를 통해 3국간 경쟁관계 규명
 - 마지막으로 한중일의 제조업 분야별 자국 및 역내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액을 통하여 국가별 상대적 이익의 취득 상황 분석

< 한중일 제조업의 분야별 협력·경쟁관계 분석 방법 >

구분	분석 내용	데이터 및 참고문헌
분석대상	-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 - 14개 제조업 업종(WIOD에서 c3~c16 해당)	- WIOD(2000~2011년)
분석방법	- 한중일 제조업 분야별 자국 부가가치 기여율 - 한중일 제조업 분야별 역내 부가가치 기여율	- Timmer(2012) - Robert Stehrer(2012) 등
분석기준	- 협력 : 역내 부가가치 의존도가 높을수록 협력 강화 - 경쟁 : 자국 혹은 역내 부가가치 기여도가 높을수록 심화	

28) 국제투입산출표(WIOD)를 이용한 부가가치 분석 선행연구는 【별첨1】에서 정리하여 제시
 29) 자세한 분석 방법은 【별첨2】에서 제시
 30) 14개 제조업 분야는 식품가공, 섬유·직물, 신발·가죽, 목재, 펄프·종이·인쇄, 석유, 화학, 고무·플라스틱, 기타 비금속광물, 금속, 기계, 전기·광학기기, 수송기기, 기타제조업 등으로 분류
 31) 역내 부가가치 의존도란, 한 국가의 최종수요에 대해 역내 국가들로부터 조달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을 의미하고, 역내 부가가치 기여도란, 역내 전체 최종수요에 대해 한 국가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을 의미

2) 한중일 제조업의 협력 및 경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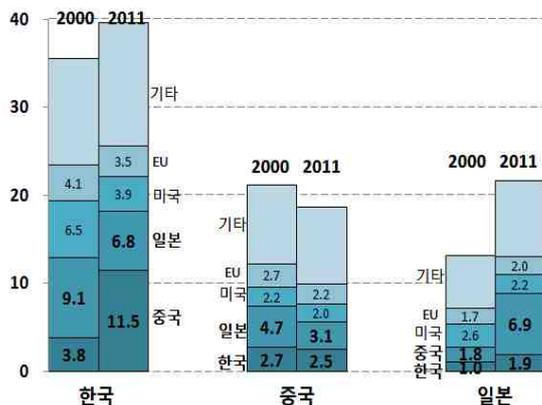
① 한중일 역내 협력 : 한국, 일본의 역내 협력 강화

- 한국과 일본은 역내에서의 대중국 부가가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역내 협력이 강화되나, 중국은 약화 추세
 - 한국은 2011년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각각 6.8%, 11.5%의 부가가치를 조달하면서 역내에 대한 부가가치 의존도는 18.3% 기록, 지난 2000년 12.9%보다 확대되는 등 역내 협력이 강화
 - 동기간 일본도 역내에서 조달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이 2.8%에서 8.8%로 급증하면서 역내 협력 강화
 - 반면, 중국의 부가가치 역내 의존도는 2000년 7.4%에서 2011년에는 5.6%로 감소하는 등 역내 협력이 다소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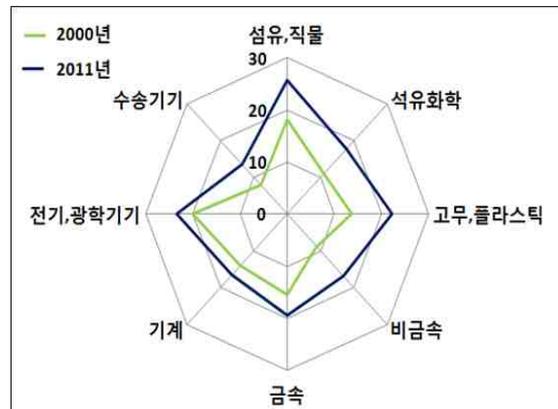
② 한중일 제조업 분야별 역내 협력 : 한국이 가장 균형적으로 협력

- 한국은 8대 주요 제조업분야에서 균형적인 역내 협력을 강화
 -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이 역내의존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섬유·직물, 전기·광학기기 등 2개 분야로, 부가가치 역내 의존도가 2011년 기준으로 각각 25.7%, 23.4% 기록
 - 한편,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섬유·직물 등 분야의 역내의존도는 2000년보다 8.6%p, 7.9%p, 7.6%p씩 증가하는 등 지난 11년간 역내 의존도가 빠르게 심화

< 한중일의 대주요국 역내 부가가치 의존도 >
(단위 : 비중, %)



< 한국의 산업별 역내 부가가치 의존도 >
(단위 : 비중, %)



자료 : WIOD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 자국 부가가치 기여도는 생략.

자료 : WIOD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 8개 제조업 분야 기준.

- 중국은 역내 의존도가 하락하는 등 역내 협력이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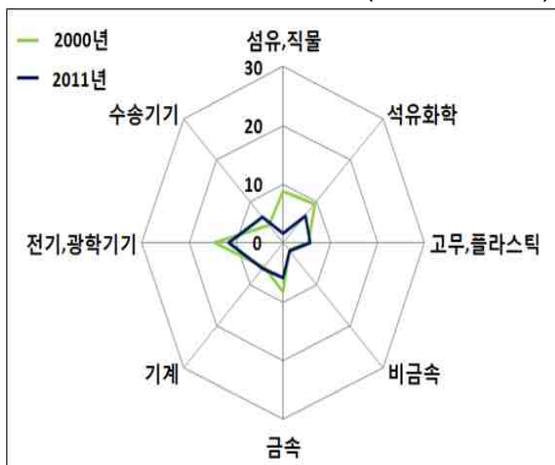
- 2011년 기준으로 중국이 역내의존도가 가장 높은 2가지 분야는 전기·광학기기, 석유·화학 분야로, 부가가치 역내의존도가 2011년 기준으로 각각 11.7%, 6.8% 기록
- 하지만, 2000~2011년 사이 섬유·직물, 석유·화학, 금속, 전기·광학기기 등 4개 분야 부가가치의 역내 의존도는 각각 7.1%p, 2.7%p, 2.4%p, 2.9%p씩 감소하는 등 일부 분야에서는 역내 협력이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일본은 섬유·직물, 전기·광학기기 등 분야로 역내 협력이 편중

- 2011년 기준으로 일본은 역내의존도가 섬유·직물, 전기·광학기기 등 2개 분야에서 가장 높으며, 부가가치 역내의존도가 2011년 기준으로 각각 27.8%, 16.4% 기록
- 2000~2011년 사이, 섬유·직물, 전기·광학기기 분야에서의 역내의존도는 각각 14.0%p, 16.4%p씩 증가하는 등 역내의존도가 빠르게 확대되는 등 편중 양상이 심화
- 한편, 수송기기 분야는 2011년 기준으로 역내의존도가 4.0%를 기록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한중일 3국 중 역내의존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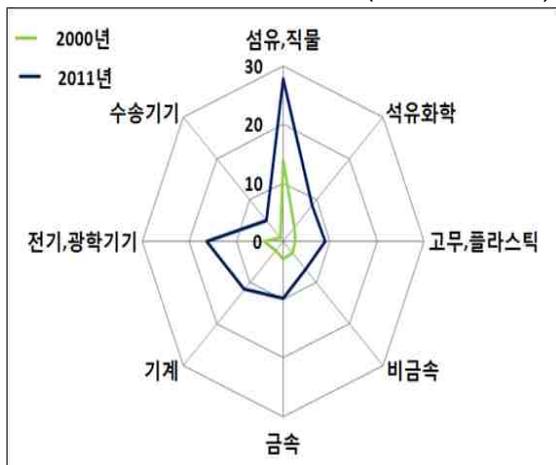
< 중국의 산업별 역내 부가가치 의존도 >

(단위 : 비중, %)



< 일본의 산업별 역내 부가가치 의존도 >

(단위 : 비중, %)



자료 : WIOD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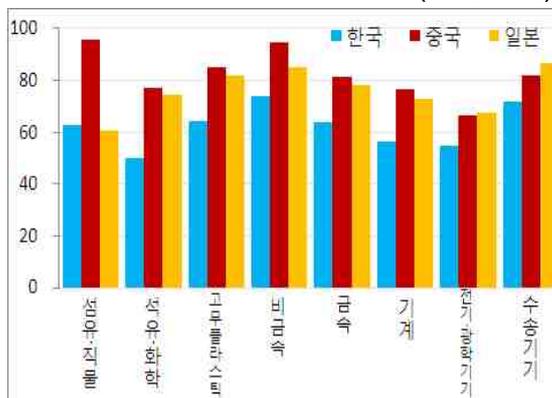
주 : 8개 제조업 분야 기준.

③ 자국 부가가치 창출 능력 : 한국이 가장 열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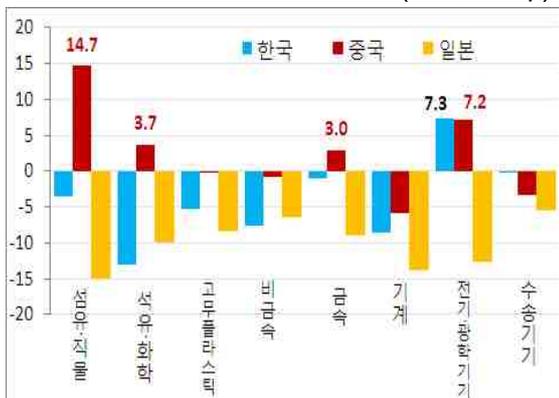
○ 한국은 자국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중국, 일본에 비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은 지난 11년간 자국 스스로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크게 확대
 - 2011년 현재, 중국은 전기·광학기기, 수송기기 등 2개 분야를 제외한 6개 분야는 자국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한국, 일본을 압도
 - 더욱이, 섬유·직물, 석유·화학, 금속, 전기·광학기기 등 4개 분야는 2000년보다 자국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각각 14.7%p, 3.7%p, 3.0%p, 7.2%p씩 증가
- 일본은 전기·광학기기, 수송기기 등 2개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보다 스스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
 - 2011년 현재, 일본은 전기·광학기기, 수송기기 등 2개 분야의 자국 부가가치 창출 비중은 각각 67.5%, 86.5%로 한국, 중국보다 많이 창출
 - 하지만, 8개 제조업 분야에서 지난 2000년보다 자국 부가가치 창출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역내외 의존성이 상승
-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교해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 낮으며, 전기·광학기기를 제외하고 7개 분야에서 빠르게 저하

< 2011년 한중일 제조업 분야별 자국 부가가치 기여도 >
(단위 : %)



< 한중일 제조업 분야별 자국 부가가치 기여도 격차(2000~2011년) >
(단위 : %p)



자료 : WIOD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 자국 부가가치 기여도 격차는 2011년 기여도에서 2000년 기여도를 차감 값.

④ 역내에서 산업별 경쟁력 : 한국이 가장 취약

○ 지난 10여 년간 역내에서 일본은 부가가치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 가장 많으나, 한국과 중국은 취약한 양상을 보임

- 일본은 2011년 현재, 역내에서 부가가치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 6개로 가장 높은 경쟁력 유지

· 2000년 일본은 고무·플라스틱, 금속, 기계, 전기·광학기기, 수송기기 등 5개 산업에서 부가가치 창출 비중이 각각 44.1%, 51.3%, 62.6%, 56.2%, 62.3%로 한국, 중국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보임

· 2011년에는 비금속 분야가 42.0%로 중국 40.3%를 근소하게 추월하면서 전체 8개 제조업 분야 중 6개가 역내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유지

- 중국도 지난 11년간 섬유식품 분야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이는 가운데, 석유화학, 금속 등 분야의 경쟁력이 빠르게 상승

· 한국의 섬유식품 분야는 역내 부가가치 기여도가 지난 2000년 51.0%에서 2011년 73.9%로 경쟁력이 급상승

· 더욱이 석유·화학, 금속, 기계, 전기·광학기기 등 4개 분야가 지난 11년간 각각 10.5%p, 6.9%p, 7.2%p, 10.0%p씩 상승하는 등 한국과 일본을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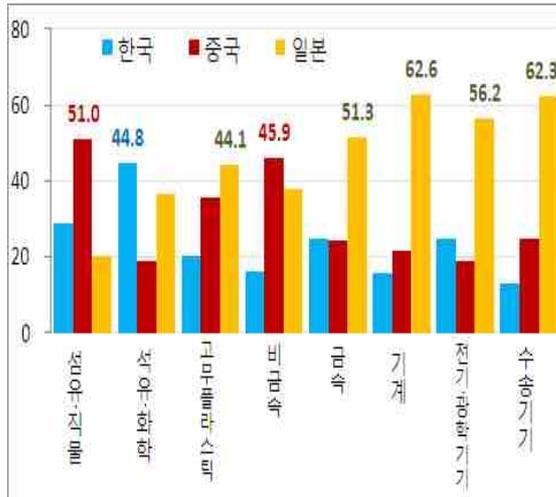
- 하지만 한국은 동기간 기계, 전기·광학기기 등 분야에서 경쟁력이 빠르게 상승하나, 석유·화학을 제외하고 여전히 역내에서의 경쟁력이 취약

· 한국의 석유·화학 분야는 역내 부가가치 기여도가 2011년 현재 40.0%로 지난 2000년 44.8%보다 4.8%p 감소했지만, 중국 29.4%, 일본 30.6%보다 경쟁력 우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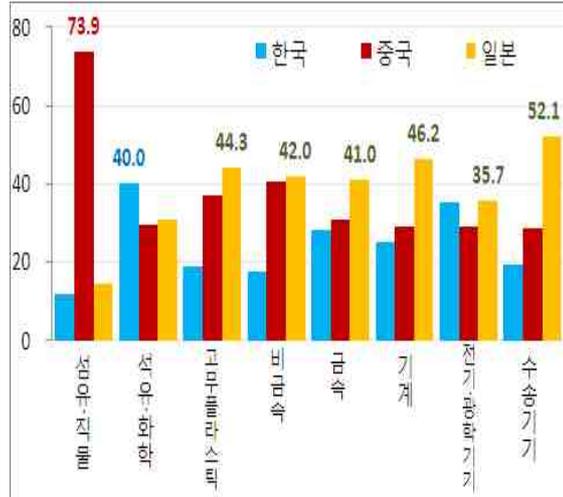
· 더욱이 지난 11년간 기계, 전기·광학기기, 수송기기 등 분야에서 각각 부가가치 기여도가 9.2%p, 10.6%p, 6.3%p씩 상승하는 등 경쟁력 빠르게 향상

· 하지만, 석유·화학 분야를 제외한, 7개 분야의 역내 경쟁력이 여전히 취약할 뿐 아니라, 특히 섬유·식품,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등 분야는 중국, 일본의 동종업종과 비교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한중일 산업별 역내 부가가치 기여도(2000년) >
(단위 : %)



< 한중일 산업별 역내 부가가치 기여도(2011년) >
(단위 : %)



자료 : WIOD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 역내 전체부가가치 창출 총액 대비 한중일의 각각의 역내 부가가치 기여도.

⑤ 한중일 산업별 역내 창출 이익 : 한국이 가장 낮은 이익 창출

○ 부가가치 창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한중일 3국 중 일본, 중국, 한국 순으로 이익을 높은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역내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액은 한중일 3국이 비슷한 가운데, 일본이 가장 큰 이익을 창출

· 2011년 역내에서 한중일은 각각 2,595억 달러, 2,716억 달러, 3,157억 달러로 일본이 가장 큰 이익 창출

- 하지만, 자국 및 역내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합산하면, 중국이 한국과 일본보다 각각 약 8배, 3배에 이룸

· 2011년 제조업 8대 주요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총액기준으로 볼 때, 중국은 자국 및 역내에서 총 5조 7,523억 달러를 창출, 한국 7,398억 달러, 일본 1조 9,858억 달러의 각각 7.8배, 2.9배에 이룸

· 특히, 자국 내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중국은 한국, 일본보다 각각 11배, 4배에 다다름

- 한편, 역내에서 가장 낮은 이익을 기여하는 분야는 한국과 중국은 비금속, 일본은 섬유·직물 산업이며, 가장 높은 이익을 기여한 분야는 3국 모두 전기·광학기기 산업으로 나타남
 - 2011년 현재, 한중일 3국의 산업 중 부가가치 기여액이 가장 낮은 분야는 비금속 분야로 한국 310억 달러, 중국 710억 달러, 일본 740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남
 - 동년 부가가치 기여액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전기·광학기기 산업으로 한국 816억 달러, 중국 667억 달러, 822억 달러로 나타남

- 하지만 자국 부가가치 창출을 포함하면, 한중일은 각각 금속, 금속, 석유 화학 등에서 가장 큰 이익을 창출
 - 2011년 현재, 한국과 중국은 금속산업에서 각각 2,011억 달러, 1조 3384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기여
 - 일본은 동년 석유·화학 산업에서 5,332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

- 이에 따라, 한중일 3국은 석유·화학, 금속, 전기·광학기기 등 3개 분야에서 가장 큰 이익을 창출

< 2011년 한중일 제조업 분야별 자국 및 역내 부가가치 기여액 >

(단위 :십억 달러)

구 분	한 국			중 국			일 본		
	자국(A)	역내(B)	A+B	자국(A)	역내(B)	A+B	자국(A)	역내(B)	A+B
섬유·직물	19.0	4.2	23.2	475.5	26.7	502.2	44.3	5.3	49.5
석유·화학	98.1	80.3	178.4	1,274.6	58.9	1,333.5	471.8	61.4	533.2
고무·플라스틱	26.7	8.8	35.5	340.8	17.2	358.0	130.0	20.6	150.6
비금속	22.6	3.1	25.7	365.0	7.1	372.1	65.2	7.4	72.6
금속	146.7	54.4	201.1	1,278.1	60.3	1,338.4	449.3	79.9	529.2
기계	36.7	16.8	53.5	501.8	19.6	521.4	100.7	31.3	132.0
전기·광학기기	82.5	81.6	164.2	831.0	66.7	897.7	202.9	82.2	285.1
수송기기	47.0	10.2	57.2	413.8	15.1	428.9	206.0	27.6	233.6
합계	479.3	259.5	739.8	5,480.7	271.6	5,752.3	1,670.1	315.7	1,985.8

자료 : WIOD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 1. 한중일 3국이 분야별로 자국내 및 對역내 부가가치 창출액을 의미함.

2. 한국의 역내 대상국은 중국·일본, 중국의 역내 대상국은 한국·일본, 일본의 역내 대상국은 한국·중국.

3) 종합평가

-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역내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상대적 이익은 줄어드는 추세
- (역내 의존도) 한국의 대역내 부가가치 의존도 즉 역내협력도가 가장 심하고, 중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8대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의 역내 의존도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의 역내 의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판단
 - 특히 한국은 섬유·직물, 전기·광학기기에서는 역내 의존도가 25.7%, 23.4%를 기록하는 등 한중일 3국 중 역내협력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판단됨
 - 특히, 중국의 대한국 부가가치 창출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한국은 중국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역내 기여도) 일본, 중국의 대역내 부가가치 기여도가 가장 높은 가운데, 3국 중 한국의 상대적 이익을 창출
 - 2011년 현재, 일본은 섬유·직물 분야를 제외하고 역내 부가가치 기여도가 한국과 중국을 능가하는 등 역내에서 가장 큰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
 - 반면, 한국은 석유화학 분야를 제외하면 7개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과 중국에 비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등 역내에서 낮은 이익을 창출

< 2011년 한중일 역내 부가가치 조달 및 기여도 >

(%)

구 분	역내로부터 조달(역내 의존도)			역내로 창출(역내 기여도)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섬유직물	25.7	1.7	27.8	11.6	73.9	14.6
석유화학	17.7	6.8	8.8	40.0	29.3	30.6
고무·플라스틱	22.2	5.8	9.0	18.8	36.9	44.3
비금속	16.8	1.9	6.7	17.7	40.3	42.0
금속	19.5	6.0	9.7	28.0	31.0	41.0
기계	16.6	6.3	11.7	24.9	28.9	46.2
전기·광학기기	23.4	11.7	16.4	35.4	28.9	35.7
수송기기	13.5	6.3	4.9	19.2	28.6	52.1

자료 : WIOD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 주 : 1. 역내로부터 조달(의존도)는 자국부가가치와 해외부문 제외.
- 2. 역내로 창출(기여도)는 한중일의 역내 창출을 기준.

3. 시사점

- **한중일 3국은 역내 불균형 개선과 더불어 대세계 경쟁력 강화를 협력 강화 필요**
 - 3국간 불균형 해소를 통하여 역내 협력을 위한 산업인프라, 제도 등 기반 마련
 - 국가간 기술교류, 인적교류 등을 통해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제고 노력

- **한국도 역내에서의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 마련 시급**
 - 역내에서 중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 능력 제고를 위해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육성 방안 마련
 - 한국은 국내 산업의 R&D역량을 강화하여 제조업 부품소재 국산화 정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또한, 산업 인프라시설 개선,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국내 제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노력이 절실
 - 더불어, 고부가가치형 중소 제조업체를 적극 육성,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추진

- **첫째, 역내에서 중국에 편중된 부가가치 의존도 개선 필요**
 - 최근 역내 산업별 부가가치 의존도가 지나치게 중국에 편중되는 양상이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3국간 역내 불균형 해소 방안 모색
 - 3국간 협력 불균형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수요에 맞는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한일간 협력 강화 필요

- **둘째, 한중일 분업구조 강화를 위해 한중 및 한중일 FTA 등 역내 협력 모색**
 - 한중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對세계 위상을 높이기 위해 3국간 경제협력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제도통합 마련 필요
 - 특히, 중국의 경우, 자체기술 향상으로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조달하는 수요가 점차 감소하는 등 기존 분업구조가 에 한중일 FTA와 같은 역내경제협정 등 협력방식 모색 필요

- 셋째, 한중일 3국간 공동 관심분야 시장 개척 모색을 통해 역내 협력관계 진전 도모
 - 3국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양, 환경 등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 모색
 - 비전통에너지, 해운, ICT 등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차세대 기술 개발과 시장창출을 위한 협력 강구
 - 또한 산업표준협력에 대한 실행안을 구체화하여 무역촉진 및 기술장벽 해소 발판 마련
 - 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인프라 등 환경을 개선하여 상호간 산업 유대 관계 강화 필요

- 넷째, 3국간 협력을 통해 부품소재 등 중간재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성 증대
 - 한국은 역내에서 부품소재 관련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강화야 나감과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도 대두

- 다섯째, 국가간 신시장 개척을 위해 3국간 협력구도 변화에 미리 대응
 - 향후, 한중일 3국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신시장 개척에서 경쟁이 심화될 우려 상존
 - 따라서, 한국은 신시장 관련 기술 우선 확보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속 **HRI**

경제연구본부 연구위원 한재진 (2072-6225, hzz72@hri.co.kr)
연구원 천용찬 (2072-6274, junius73@hri.co.kr) 의

【별첨1】 국제투입산출표를 이용한 부가가치 분석 선행연구

○ 최근 국가 간 산업연관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 중 국제투입산출표를 이용한 국가간 가치사슬 패턴 연구가 활발히 진행

- 국제산업연관표는 OECD 등 여러 기관에서 발표

-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지난 1970년부터 5년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10개국을 포함하는 국제산업연관표를 발표
- OECD에서도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산업연관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2012년부터 발표
- 한편,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에서도 1997년, 2001년, 2004년에 데이터를 발표, 2012년에는 2007년 기준 데이터를 발표

- 최근에는 EU KLEMS³²⁾ 데이터와 연계해 구축한 국제투입산출표(WIOD)도 국가간 폭넓게 이용

- 국제투입산출표 데이터는 EU의 지원으로 1995~2011년까지 41개국(기타포함), 35개 산업 및 생산요소별 자료로 구성
- 산업분류는 국제표준사업분류인 *ISIC revision 3*과 유사한 유럽연합의 경제활동분류체계인 *NACE³³⁾ revision 1*을 토대로 분류

- 국제투입산출표는 국가간 글로벌 가치사슬 패턴 연구에 유용

- 글로벌 가치사슬을 고려한 국가간 상이한 생산구조 및 교역관계를 살펴보는 데 유용한 방법론
- 국제투입산출표의 특징은 세관을 통과하는 물품을 기준으로 하는 통관기준의 수출입통계와는 달리 소유권 변동, 여행 및 용역서비스 등 무역외수지를 포함
- 하지만, 각국의 산업연관표, UN 무역데이터, EU의 KLEMS 데이터베이스 등을 혼재해 이용하고 있어 작성방법에 따라 데이터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32) EU KLEMS란 경제성장, 생산성, 고용, 자본형성, 기술진보 등을 측정하기 위해 1970년 EU 회원국의 산업별 Capital(자본), Labour(노동), Energy(에너지), Materials(원재료), Service(서비스) 등 생산요소 투입 데이터 구축 프로그램을 의미

33) NACE는 60개 산업으로 분류되며, 비교우위별 및 기술별로 분석이 가능하나, 국제투입산출표는 35개 산업으로 통합하고 있어 자세한 분석이 어려운 단점이 존재

【별첨2】 한중일 제조업의 부가가치 산출 방법

- 한중일 3국간 무역의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산업연관표상의 균형식을 응용해 표현

- 산업연관표 균형식은 다음과 같음

$$x = Ax + y = Ly$$

- 여기서 x 는 총산출, A 는 한 국가에서 특정산업 생산물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각 요소의 총합, y 는 최종수요를 나타냄
- 상기 방정식의 두 번째 항인 L 은 레온티에프 역행렬(*Leontief inverse*)을 의미, $(I-A)^{-1}$ 을 나타냄

- 부가가치유발액은 다음과 정의할 수 있음

- k(한국), c(중국), j(일본) 3개 국가가 있다고 가정

$$[X^k, X^c, X^j] = \begin{bmatrix} X^{kk} & X^{kc} & X^{kj} \\ X^{ck} & X^{cc} & X^{cj} \\ X^{jk} & X^{jc} & X^{jj} \end{bmatrix} + \begin{bmatrix} y^{kk} & y^{kc} & y^{kj} \\ y^{ck} & y^{cc} & y^{cj} \\ y^{jk} & y^{jc} & y^{jj} \end{bmatrix} \dots\dots \text{식 (1-1)}$$

- 중간재를 총산출로 나눠주어 투입계수행렬인 A 로 표시

$$\begin{aligned} [X^k, X^c, X^j] &= \begin{bmatrix} A^{kk} & A^{kc} & A^{kj} \\ A^{ck} & A^{cc} & A^{cj} \\ A^{jk} & A^{jc} & A^{jj} \end{bmatrix} [X^k, X^c, X^j] + \begin{bmatrix} y^{kk} & y^{kc} & y^{kj} \\ y^{ck} & y^{cc} & y^{cj} \\ y^{jk} & y^{jc} & y^{jj} \end{bmatrix} \\ &= \begin{bmatrix} L^{kk} & L^{kc} & L^{kj} \\ L^{ck} & L^{cc} & L^{cj} \\ L^{jk} & L^{jc} & L^{jj} \end{bmatrix} \begin{bmatrix} y^{kk} & y^{kc} & y^{kj} \\ y^{ck} & y^{cc} & y^{cj} \\ y^{jk} & y^{jc} & y^{jj} \end{bmatrix} \dots\dots \text{식 (1-2)} \end{aligned}$$

- 식 (1-2)에서 L 매트릭스는 생산유발계수 $|I-A|^{-1}$ 로서 레온티에프 역행렬을 의미, 부가가치유발액은 부가가치 대각행렬 A^v 와 생산유발계수를 곱해 $VA = A^vLY = A^v|I-A|^{-1}Y$ 로 표현할 수 있음

$$VA = [v^k, v^c, v^j] = \begin{bmatrix} v^k & 0 & 0 \\ 0 & v^c & 0 \\ 0 & 0 & v^j \end{bmatrix} \begin{bmatrix} L^{kk} & L^{kc} & L^{kj} \\ L^{ck} & L^{cc} & L^{cj} \\ L^{jk} & L^{jc} & L^{jj} \end{bmatrix} \begin{bmatrix} y^{kk} & y^{kc} & y^{kj} \\ y^{ck} & y^{cc} & y^{cj} \\ y^{jk} & y^{jc} & y^{jj} \end{bmatrix} \dots \text{식 (1-3)}$$

- 식 (1-3)에서 v^k, v^c, v^j 는 대각행렬을 의미하며, A^vL 은 부가가치 유발계수 행렬로서 국내재화에 대한 수요가 한 단위 늘어날 경우 해당국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 단위를 의미

【참고 자료】

- 1) 이부형, 정민,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제고 필요하다: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2-14*, 2012.
- 2) _____, “제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제조업의 역할 재조명”,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3-37*, 2013.
- 3) 오영석 외, “한중일 국제분업구조 분석과 협력증진 방향”,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583*, 2010.
- 4) 최낙균, “무역의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Vol. 12 No.22*, 2012.
- 5) 박승록, “글로벌 밸류체인으로 본 한중 경제관계” 산업정책 Agenda 발굴 자문회의 발표자료, 2013.
- 6) Timmer, Marcel, “The World Input-Output Database(WIOD): Contents, Sources and Methods”, Seventh Framework Programme, 2012.
- 7) Meng, Bo, Yasiong Ahang, Jiemin Guo, and Yong Fang, “China’s Regional Economies and Value Chains: An Interregional Input-Output Analysis.” IDE Discussion Paper No. 359.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2012.
- 8) Johnson, Robert C. and Guillermo Noguera, “Accounting for Intermediates: Production Sharing and Trade in Value Added.”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86, 2012, pp. 224-236.
- 9) Robert Stehrer, “Trade in Value Added and the Value Added in Trade,” WIIW Working Paper 81, June 2012, pp.1-19.

제조업을 업그레이드 하자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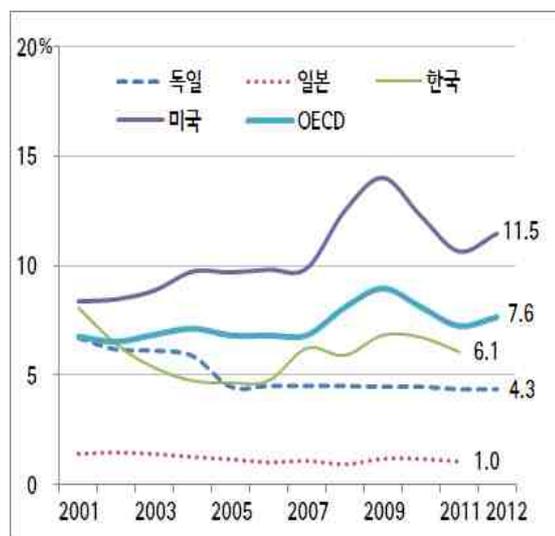
1. 개요

- OECD 전체적으로 2007년까지 약 6.8% 수준에 머물렀던 기업 R&D 지출에서 차지하는 정부 예산 비중이 2008년부터 증가세를 보임
 - 미국의 경우, 9%대에 머물렀던 동 비중이 2008년부터 늘어나 2009년에는 14.0%에 달했으며, 2012년에는 11.5% 수준
 - OECD 전체적으로 기업 R&D 규모(금액 기준)는 2001년부터 2012년 동안 연평균 4.8% 증가

< 기업R&D 지출의 자금원별 비중(%) >

국가	자금원	비중(%)		
		2001	2005	2012
한국	기업	91.2	94.4	93.8*
	정부	8.1	4.6	6.1*
독일	기업	90.7	92.1	91.4
	정부	6.7	4.5	4.3
일본	기업	97.9	98.3	98.3*
	정부	1.4	1.2	1.0*
미국	기업	91.6	90.3	83.3
	정부	8.4	9.7	11.5
OECD	기업	89.4	89.3	87.4
	정부	6.8	6.8	8.6

<기업 R&D 지출액 중 정부 비중 >



자료: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주: 1) PPP 달러 기준

2) *표시된 한국과 일본 실적은 2011년 실적임

3) 연평균 증감률(%)은 2001년~2012년 실적. 단, 한국과 일본은 2001년~2011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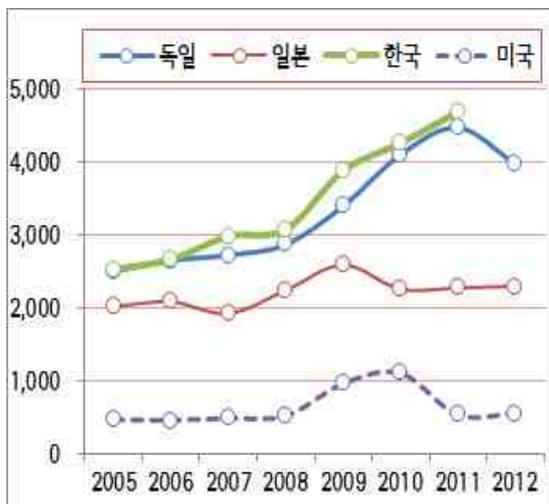
- R&D 분야중에서 제품 및 제조공정과 관련된 산업생산기술(Industrial Production and Technology) R&D가 타부문보다 높은 증가율 시현
 - OECD 기준에 의한 14개 정부 R&D의 목적별 지출³⁵⁾ 중 산업생산기술 부

34)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14-07호, “제조업을 업그레이드 하자” (2014.2.17)

문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약 4년 동안의 연평균 R&D 지출액을 살펴보면,

-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에서 정부 전체 R&D 증가율(국방부문 예산 제외)보다 산업생산기술 R&D 증가율이 월등히 높음
- 특히 미국은 정부 전체의 평균 R&D는 8% 증가한 반면, 산업생산기술 R&D는 63%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정부 R&D 예산에서 산업생산기술 R&D 금액 추이 >
*PPP 달러 기준



< 금융위기 전후 4년간 R&D 증감률 : 전체 vs 산업생산기술 부문 >
(단위: 100만 PPP 달러)

국가	지출 구분	'05~'08년 연평균 R&D (A)	'09~'12년 연평균 R&D (B)	증감 (B/A)
한국 *	전체	10,605	14,537	37%
	산업생산	2,909	4,278	47%
독일	전체	21,910	28,620	31%
	산업생산	2,688	3,988	48%
일본	전체	29,003	33,160	14%
	산업생산	2,068	2,355	14%
미국	전체	138,390	149,550	8%
	산업생산	483	789	63%

자료: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 주: 1) 정부 R&D 예산은 국방부예산 제외 예산
2) 한국은 '06~'08년과 '09~'11년의 3개년 실적 기준

-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 제조업을 부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도를 마련하고 R&D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추진중
- 여기서는 최근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주요국의 R&D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
 - 우리나라는 한국 경제 성장에 커다란 기여³⁶⁾를 하고 있는 제조업을 업

35) OECD는 정부 R&D 예산을 사회-경제적 목적에 따라 산업생산기술을 비롯, 지구 탐사·자원 개발, 환경, 우주탐사, 수송·통신 인프라 등 14개로 분류. 이중 산업생산기술은 다른 목적의 R&D에 속하지 않고 순수하게 산업 제품 및 제조공정의 R&D만을 대상

36) 우리나라 경제에서 제조업의 역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현대경제연구원 발간 『경제주평』 “제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2013.8.30) 참조

그레이드하는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청

- 국내 제조업체중 대기업 일부가 글로벌 선진업체와 견주는 위상을 확보하고 있으나, 리딩 컴퍼니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제조업 혁신과 선진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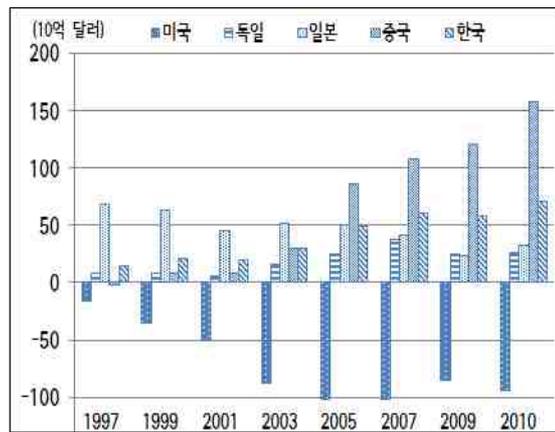
2. 주요 선진국의 제조업 R&D 강화 배경

- 첫째, (제조업 주도권 약화에 대한 위기감 고조) 중국등 선진 개도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로 선진국들은 제조 리더십 약화에 대한 위기감 고조
 - IMD의 국가경쟁력 조사 항목중 기술인프라 순위가 중국은 2001년 47위에서 2013년 20위로 상승, 과학인프라 순위가 동기간 26위에서 8위로 상승(*한국: 기술인프라 2001년 25위 → 2013년 11위, 과학인프라 2001년 21위 → 2013년 7위)³⁷⁾
 - 1997년 이후 주요국의 전세계 첨단제품³⁸⁾ 수출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일본은 지속 감소, 미국은 감소후 정체, 독일은 현상 유지를 보였으나, 중국은 1997년 8%에서 2010년 24%로 급증(*한국: 1997년 4% → 2010년 5%)

< 첨단제품 수출 점유율 추이 >



< 첨단제품 무역수지 추이 >



자료: U.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12, Feb. 2013.

37) IMD,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년호

38) 첨단제품에는 항공우주, 통신 및 반도체,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과학용 기기 및 측정 기기, 제약이 포함

- 첨단제품의 무역수지를 살펴보면(앞페이지 그래프 참조), 미국은 2005년 이후 2010년까지 매년 약 1천억 달러 적자를 내고 있으며, 독일은 흑자폭이 축소되고 있으며, 반면에 중국은 1997년 적자였던 무역수지가 2010년 1.5조 달러 흑자 시현
- 둘째 (신 공정 기술의 등장) 무선인터넷 등 IT네트워크화 진전과 3D프린터 등 3차원 기술을 활용한 신공정 기술 등장
 - IT 네트워크 기반의 제품개발 : IT 기기 및 서비스를 활용해 지역적 제약 없이 부품공급업체, 엔지니어, 사용자들의 지식 교환을 통한 신제품 창출
 - 3D 기술 활용한 제품 제조 : 3차원 스캐너, 3차원 CAD, 3차원 프린터 등을 활용해 저비용, 단기간 제조뿐만 아니라 맞춤형 제조, 자가 제조가 가능
 - 무선인터넷 기술을 제조 설비에 적용해 공장의 자동화, 스마트화를 실현
- 셋째 (고부가 융합 제품 기술 확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결합한 고부가 융합 제품으로 변화하면서 제조 기능의 인소싱 전략으로 전환
 - 애플이 아이팟, 아이폰이라는 제품에 소프트웨어, 여기에 아이튠스라는 서비스를 결합한 모델로 경쟁구조를 재편하고 고수익을 실현한 데에 자극
 - 핵심 제품을 대상으로 직접 생산, 유통·서비스까지 일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제조기능의 인소싱, 부족 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M&A 단행

3. 미국, 독일, 일본의 제조업 기술 선진화 정책

- 제조 부문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신규 정책비전 제시와 실행전략 추진 중

(*다음 페이지 표 참조)

- R&D 대상: 제품 핵심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공정 기술 혁신을 통한 제조시스템 개발을 지향하는 게 특징
 - 기존 제품과 공정을 혁신하기 위해 신재료, 에너지 절감 기술, IT기술(소프트웨어, 무선기술) 등을 활용

- R&D 체제: 제조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기본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촉진할 제도적 인프라 구축
 - 정책 명칭: “국가 첨단제조방식 전략 계획”(미국), “High-Tech Strategy 2020” 및 “Industrie 4.0”(독일), “일본산업재흥플랜” (일본)
 - 추진 방식 및 인프라: 국가 차원의 R&D 과제 특성상 개별 부처가 아닌 범부처(multi-agency) 방식으로 추진하며, 이를 지원할 촉진 인프라를 신설 또는 기능 강화

< 미국, 독일, 일본의 제조업 선진화 R&D 정책 >

구분	미국	독일	일본
추진 배경	경제력 강화, 국가안보,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고령화 등	산업기반 강화, 과학기술 혁신 추진
기본 정책	“국가 첨단제조방식 전략 계획”(2012.2), “제조업 재생 계획”(2012.7)	“High-Tech Strategy 2020”(2010년) 및 실행 계획(2012)	“일본산업재흥플랜”(2013.6)
R&D 프로그램 명칭	“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y”	“Industrie 4.0” (영문 Industry 4.0)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프로그램 (SIP)”
추진 인프라	제조혁신기관(IMI), 제조혁신네트워크(NNMI)	Industrie 4.0 Platform	종합과학기술회의
주요 추진 과제	-에너지 절감용 제조공정 혁신과 소재선진화 -제조기술가속화센터 건립 -제조혁신네트워크 구축 -제조부문 로봇 개발 -개념 분야의 신제품 및 공정 개발 지원	유무선 I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 구현을 목표로 새로운 제조시스템과 다양한 적용 도구 개발 프로젝트	*SIP 10대 후보 과제 -에너지: 연소기술 및 구조재료 등 5개 과제 -차세대 인프라: 자동운전시스템 등 3개 과제 -지역자원: 혁신적설계 생산기술 등 2개 과제
R&D 예산 (정부)	-2014년 29억 달러 *2015년 예산 편성시 첨단제조부문 최우선 고려	-2012년~2015년간 2억 유로	-2014년도 SIP 510억엔 (계상)

주: 국가별 세부 내용은 pp.6~11 참조

(1) 미국: <첨단제조기술(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y)> R&D 추진

- (배경) R&D 투자 강화를 담은 『미국 경쟁력 강화 재승인법』에 "첨단 제조방식" R&D에 관한 전략 수립을 규정³⁹⁾
 - "첨단 제조방식"(Advanced Manufacturing)은 기존 제조업을 재생하거나, 새로운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을 가리킴
 - 이의 개발에는 IT(정보, 전산,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자동화, 센싱 관련 기술을 활용하거나 신기술(나노, 바이오 등)로 창출된 첨단 소재등을 활용
 - 추진 배경으로서 첨단 제조방식은 경제력 강화, 국가안보, 좋은 일자리 창출, 수출 원천, 기술 혁신 원천으로서 핵심 기술로 평가

- (전략 목표) 2012년 2월 미국 대통령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 첨단제조 방식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아래의 다섯 가지 추진목표를 설정⁴⁰⁾
 - 첨단 제조 기술의 투자 가속화
 - 첨단 제조 부문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관련 교육 훈련 시스템 개발
 - 공공-민간, 산관학 파트너십 구축 및 지원
 - 정부 기관간의 합의를 통해 연방정부의 첨단 제조방식 투자를 최적화
 - 첨단 제조방식 R&D의 공공-민간 투자를 확대

- (실행인프라 구축) 2012년 7월 공표한 『미국 제조업 재생 계획』에 따라 제조혁신기관인 IMI와 협력네트워크인 NNMI등 인프라 구축을 발표
 - IMI(Institute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신기술 및 양산기술 개발, 제조인력육성, 지방 중소기업의 지원을 주요 활동으로 전국 15개 설치
 - NNMI(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IMI가 개발한 기술 및 지식을 공유하는 전국 네트워크

39) 자료: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A National Strategic Plan for Advanced Manufacturing, Feb. 2012., p.2.

4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고서(2011.6.24)에 기반해 오바마 대통령이 발족한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Steering Committee는 2012.7월 첨단제조방식 16개 이슈를 제안 (자료: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Report to the President on Capturing Domestic Competitive Advantage in Advanced Manufacturing, July 2012.)

- (2014년도 예산 및 중점부문) 2014년도 과학기술 9개 우선분야중 하나로써 첨단제조기술 분야에 총 29억 달러 투입

- 기존 제조업을 재생하고 동시에 신산업의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첨단제조기술 분야로서 아래 다섯 분야에 2014년도 총 29억 달러 예산 투입⁴¹⁾
- 에너지 산업 및 소비 측면의 절감을 위한 제조공정 혁신과 산업재 선진화 (3억 6,500만 달러)
- 제조업의 신기술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조 기술 가속화 센터 (Manufacturing Technology Acceleration center) 건립 (2,500만 달러)
- 첨단제조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제조혁신네트워크 운영 (10억 달러)
- 제조부문 노동생산성을 증가해주는 로봇 개발
- 계몽 분야 창업가에게 신제품과 공정 개발을 지원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이니셔티브

- (2015년도 예산 수립 방향) 『2015년도 R&D 예산 편성 방침』에서 첨단제조분야를 최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

- 2015년도 R&D 예산 편성시 범부처가 추진해야 할 우선과제(multi-agency priorities)로 9개 과제 선정하고 첨단제조기술 과제를 최우선에 위치⁴²⁾
- 첨단제조기술 과제에 아래와 같은 R&D 예산 편성 방향을 제시
- 첫째, 미국 제조업의 재생과 변신을 도모하는 최첨단기술프로그램에 투자
- 둘째, 『국가 첨단제조방식 전략 계획』(2012.2)에 제시된 기술(로보틱스, 신소재, 사이버-물리 시스템⁴³⁾)과 정부-산업계-대학 파트너십에 중점
- 셋째, 나노기술 관련 과제인 나노제조, 태양에너지, 나노전자, 센서, 나노정보학의 R&D 지원 지속

41) 자료: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Fiscal year 2014 - Analytical Perspectives - Budget of the U.S. Government, p.371

42) 9개 과제: ①첨단제조, ②청정 에너지, ③지구 기후 변화, ④정책 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 ⑤IT (정보기술), ⑥국가안보, ⑦생물학·신경과학 혁신, ⑧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교육, ⑨혁신과 상업화 촉진 (자료: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nd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Science and Technology Priorities for the FY 2015 Budget", Memorandum for the Heads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2013.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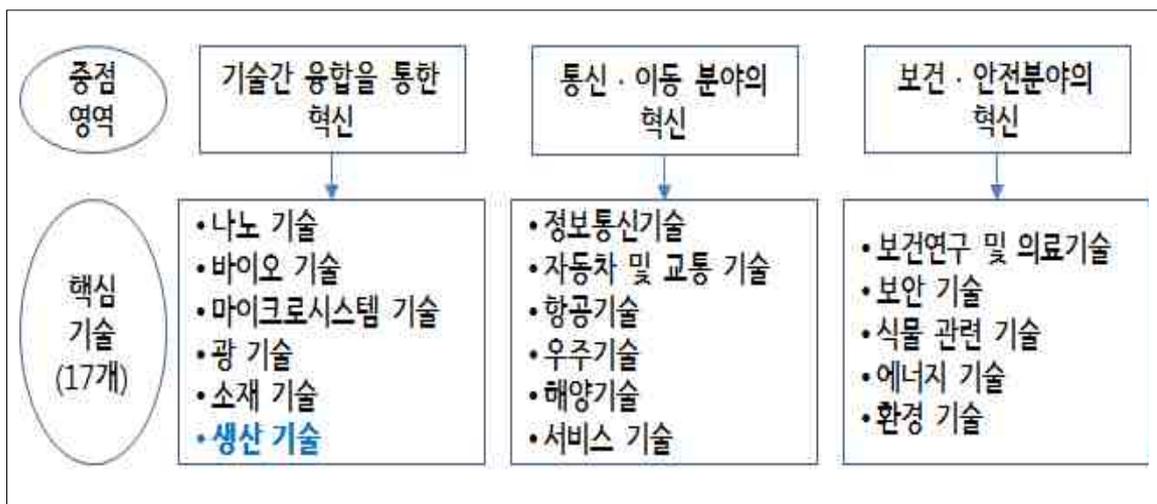
43) 이를 CPS라 칭하며, 이의 의미는 다음 페이지의 독일 사례 참조

(2) 독일: 차세대 제조생산시스템을 개발하는 『Industrie 4.0』 프로젝트 추진

- (배경) 『High-Tech Strategy 2020』(2010) 전략 추진과 그 일환으로 차세대 제조생산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는 『Industrie 4.0』 프로젝트 추진

- 2010년 독일은 범정부차원에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후변화, 고령화, 식량부족 등의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기술혁신 전략으로 『독일 첨단 기술 전략 2020』(High-Tech Strategy 2020) 채택
-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 건강/영양, 이동성, 안전성, 통신 등 5대 중점 추진 영역을 확정하고⁴⁴⁾, 각 영역별로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신제품 및 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총 17개의 핵심기술을 선정했으며(*아래 그림 참조),
- 그중에 생산기술 과제로서 자동차, 기계등 제조업에 ICT시스템을 적용하여 모든 생산기계, 공정, 물류 및 서비스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산업생산시스템을 의미하는 『Industrie 4.0』을 선정
- 2013년 4월에는 산업계를 중심으로 이행전략 실천을 위한 <Industrie 4.0 Platform>을 발족

< 『High-Tech Strategy 2020』의 중점 영역과 17개 핵심 기술 >



44) 자료: The High-Tech Strategy for Germany, <http://www.hightech-strategie.de/de/390.php>

- 『Industrie 4.0』(Industry 4.0)의 목표, 전략, 핵심요소

- 추진 배경: 무선기기의 고속화·지능화, 인터넷 네트워크 기반의 대량 자료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CPS)⁴⁵⁾의 산업적 활용가능성에 대한 관심 대두
- 추진 목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기계, 공정, 물류 및 서비스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 구축
- 추진 전략: 독일식 제조방식을 스마트화해 독일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Leading supplier strategy)하고, 나아가 이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신산업을 창출(Leading market strategy)을 설정
- 연구예산: 2012년~2015년 동안 연 2억 유로 투자를 확정(2012.3)
- 현재 연방교육연구부와 연방경제기술부의 지원하에 4가지 프로젝트가 2015년 또는 2017년을 기한으로 진행

< 『Industrie 4.0』 관련 주요 R&D 프로젝트 >

프로젝트 명칭	연구내용	기간	예산 (유로)	참가 기관수
CyProS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의 CPS 운용 방식과 도구 등 개발	‘12.9월 ~ ‘15.9월	약560만	21개
KapaflexCy	·CPS를 활용한 유연한 생산시스템 구축	‘12.9월 ~ ‘15.9월	약270만	10개
ProSense	·인공지능시스템과 지능형센서 기반의 생산관리 실현	‘12.9월 ~ ‘15.9월	약308만	9개
Autonomik	·통신(인터넷) 기능, 상황 감지·적응 기능, 기기간 상호작용 기능이 가능한 스마트 툴 및 시스템 개발 ·세부적으로 12개 프로젝트 운용	‘13년 ~ ‘17년	약4,000만	미정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 “Industrie 4.0 : 製造業に革新を”, 『ジェトロセンサー』, 2013.9. ; 관련 인터넷 사이트

주: 참가기관은 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체, 연구기관, 대학을 가리킴

45) 다양한 기기가 감지한 자료를 수집, 처리하는 ICT 기반의 가상 시스템(Cyber System)과 이에 의해 제조 기계 등을 제어하는 물리시스템(Physical System)을 통합한 개념

(3) 일본: 『일본산업재흥플랜』에 기반한 산업구조혁신 및 혁신적 설계생산 기술 R&D 프로그램 시행

- (배경)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 추진 등을 담은 『일본산업재흥플랜』을 수립, 추진

- 일본 제조업은 현재 R&D 저하 및 설비투자 감소, 고성능·고품질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 경영자원의 효율성 저하가 과제로 대두⁴⁶⁾
-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6월 경제 재생을 목표로 하는 『일본재흥전략』을 수립했으며, 3대 실행계획⁴⁷⁾중 하나로써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추진 등을 담은 『일본산업재흥플랜』을 제시

- (주요 내용) 『일본산업재흥플랜』에 제조기술 선진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첨단설비투자 촉진”과 “과학기술혁신 추진”을 핵심 과제로 선정

- “첨단설비투자 촉진” : 국내 R&D 및 첨단제조기능의 유지·강화하는 등의 첨단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위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⁴⁸⁾

- 이는 일본산업재흥플랜에서 산업 신진대사 촉진을 목적으로 마련된 『긴급구조개혁 프로그램』의 핵심 추진 과제
- 목표: 연간 설비투자액을 2012년도 약 63조엔에서 향후 3년내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3~2007년 연간 평균 수준인 70조엔으로 확대
- 산업경쟁력강화법에는 첨단설비투자의 촉진, 벤처투자의 촉진, 사업재편의 촉진과 관련된 제도를 창설하는 내용이 담길 계획이며,
- 이 중 “첨단설비투자의 촉진”에는 초기비용이 대규모이고, 초기 가동 예측이 어려운 3D프린터 및 첨단의료기기 등의 첨단설비에 대한 세제조치 등을 포함한 설비투자지원책 마련이 주요 내용

46) 자료: 日本經濟産業省, 『2013年版ものづくり白書』, 2013.6

47) 일본산업재흥플랜(日本産業再興プラン), 전략시장창조플랜(戰略市場創造プラン), 국제전개전략(國際展開戰略) (자료: 日本經濟再生本部, 『日本再興戰略 -JAPAN is BACK-』, 2013.6)

48) 자료: 日本經濟再生本部 産業競争力會議, 『産業競争力強化法案について』, 2013.10.1.

- “과학기술혁신 추진” : 기술 우위의 제조업 부활을 목적으로 한 신규 R&D 프로그램으로서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SIP)⁴⁹⁾과 ‘혁신적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ImPACT)⁵⁰⁾을 운영
 - 목표: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의 기술력 순위를 현재 세계 5위에서 향후 5년내 1위 달성
 - 이를 추진할 조직으로서 범정부 차원의 과학기술 및 혁신 정책을 기획하고 종합 예산을 책정하는 『종합과학기술회의』 기능을 강화
- ① SIP: 국가의 전략시장 창조에 요구되는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범 정부부처 간 횡단적 프로그램으로서 2014년도 예산으로 500억엔 계상
 - 현재 에너지, 차세대 인프라, 지역자원 3개 분야를 대상으로 SIP에서 추진할 10대 후보 과제를 선정 (*2014년 3~4월에 과제 및 예산배분 구체화)
 - 10대 후보 과제의 하나로서 3차원 프린팅 등 시간적, 지리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설계·생산기술의 고도화하는 ‘혁신적 설계 생산 기술’(2014년도 예산으로 45억엔 계상)을 선정
- ② ImPACT: 산업, 사회에 커다란 변혁을 줄 혁신적인 과학기술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고위험-고영향(high risk, high impact)의 도전적 R&D 프로그램
 - 현재 후보 과제로 생산기술의 고기능화를 목표로 하는 ‘고부가 자원 개발’을 비롯, ‘극한환경하의 고도 기동력 발휘’, ‘초간편-초고감도 감지’ 선정

4. 시사점

- 주요 선진국의 제조기술 선진화 추세에 대응, 우리나라는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여 ‘제조업 업그레이드 전략’을 담은 기본 정책 수립이 요청
- 정책 수립시 검토 사항으로는 첫째, 제품 기술뿐만 아니라 차세대 제조 시스템 확보를 목표로 하는 국가 차원의 R&D 정책 수립
 - 글로벌적으로 선도하는 한국형 제조기술 구축을 목표로 무선통신기술, 인터넷 등 ICT 기술과 제조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제조 시스템 개발

49) SIP: Cross-ministerial 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

50) ImPACT: Impulsing PARadigm Change through disruptive Technologies

- 글로벌 생산 시스템 프로젝트 추진하여 첨단 제조기술의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선진국의 기술보호 및 특허 무기화에 대응
 - 국가 차원의 산업적, 사회적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 R&D가 요청되는 분야 및 핵심 기술의 이행 강화
- 둘째,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제조업의 R&D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혁신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이 마련
- 글로벌 선도 제조업체의 위상에 맞는 업종별 R&D 투자 수준(매출액 대비) 도달을 목표로 설정하고, R&D의 촉진 지원책을 마련
 - 업종별 가치사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류 제품 기술, 공정 기술 개발을 목표로한 제조 및 유통 시스템 개발을 추진
 - 장기 R&D가 요구되는 국가 차원의 차세대 R&D 프로젝트를 정부, 민간 공동 수행
 - 국가 차원의 미래 성장동력사업의 핵심 기술 개발을 전담하는 ‘창조형 벤처, 중소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도모
- 셋째, 범부처 추진 성격의 국가 프로젝트 관리, 규제 해소 및 개발 기술 보호 등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운영 방안을 마련
- 투입 예산의 효과성 제고 및 중복 투자 배제를 위해 국가 차원의 범부처가 추진할 프로젝트를 선정, 추진할 관리 체제 마련
 - ‘융합 제품·기술’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제약을 가하는 각종 규제를 검토하고 해소하는 지원 기반 마련
 - 특허 취득까지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허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취득 방안 마련
- 넷째, 제조 부문의 우수 인력 확보 및 활용 대책 수립
- R&D 투자에 우수 이공계 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 우수한 퇴직 제조 기술자를 R&D 프로젝트에 활용 **HRI**

이장균 수석연구위원 (2072-6231, johnlee@hri.co.kr)

창조경제 주요 정책 및 지표

- 국내외 창조경제 주요정책
- 창조경제 주요지표

□ 국외 창조경제 관련 주요 정책

국가	정책	주요 내용
이스라엘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⁵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스라엘은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 극복을 위해 벤처기업의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화를 지향하고 정부는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 - 이스라엘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와 벤처캐피탈을 통한 간접 지원 형태로 구분 가능 - 보조금을 통한 벤처기업 창업지원 정책의 특징은 Grant 방식으로 연구개발비의 50~80%까지 지원하며 사무실 임대에서부터 사업 기획, 타당성 조사, 초기자금 지원 등 창업의 전 단계에 걸쳐 실질적인 지원으로 창업의 성공률 제고 - 요즈마 캐피탈과 같은 정부 주도의 벤처캐피탈을 통해 창업기업이 부족한 상업화와 마케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R&D 역량강화를 지원 <p>① 요즈마(Yozma)로 대표되는 정부의 벤처캐피탈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경영 노하우, 마케팅, 파트너 발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캐피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993년 요즈마 벤처캐피탈을 설립 - 요즈마 벤처캐피탈은 10여개의 자회사 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캐피탈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하이테크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등 두 가지 역할을 수행 <p><요즈마(Yozma) 벤처캐피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3년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 하이테크 산업에 투자할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설립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공공투자 프로그램 ○ 요즈마 프로그램은 자본이나 담보능력 없이 아이디어만으로 출발하는 벤처기업인들에게 자금조달을 해결해주기 위해 설립된 정부 주도의 벤처캐피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은 벤처캐피탈과 정부가 2대1 매칭 방식으로 투자하여 수익이 나면 정부지분을 민간투자자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운영 ○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당 800만 달러가 1개의 연구 개발업체에게 전용 배정 - 요즈마는 현재 진행 중인 경영활동에 계속 참여하며 파트너들에게는 일정한 기한이 종료된 후 펀드에 있는 요즈마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받음 - 요즈마는 이스라엘인이 설립하거나 이스라엘인을 핵심 지위에 채용하는 외국인업체들과의 협력 강화

51) 이스라엘 산업통상노동부 (www.moital.gov.il, www.investinisrael.gov.il)

국가	정책	주요 내용
이스라엘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p>② Tnufa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nufa 프로그램은 수석과학관실에서 운영하는 신생기업 육성프로그램으로 초기 비용의 85%, 최대20만 세켈(약 5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이 시적자금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지원 - 기획단계(pre-seed stage)에서는 티당성조사, 사업계획서 작성, 파트너 탐색, 투자자 유치 지원 및 초기단계의 기술벤처에 대해서는 초기 자금(seed money) 지원 - 정부자금을 지원받은 창업자는 매출이 발생할 경우에만 7년에 걸쳐서 3~5%의 기술료 형태로 정부자금을 상환 <p>③ 기술인큐베이터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무역노동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재무부, 수출공사,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신생기업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무실임대, 금융지원, 기타 상담 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프로그램 - 소요되는 자금의 85%가 정부지원이며,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지원 - 이스라엘에는 총 24개의 인큐베이터가 있으며, 이를 통해 총200여개의 신생기업이 지원을 받고, 지원 대상 신생기업의 60%가 IT관련 기업
중국	과학기술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5계획은 국가12·5계획뿐만 아니라,과교흥국전략,인재강국전략,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요강(2006~2020)의 연장선상에서 수립됨 - 과학기술의 진보·혁신을 통해 국가12·5계획에서 밝힌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립됨 <p>가.기본이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혁신능력을 강화하여 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킴 ② 과학기술 성과의 상용화를 강화함 ③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 ④ 장기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둠 ⑤ 혁신을 제도화하고 개방을 강화함

국가	정책	주요 내용
중국	과학기술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 ⁵²⁾	<p>나. 발전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구개발 투자 대폭 확대 ② 독자 기술개발 능력 제고 ③ 과학기술과 시장경제 결합도 제고 ④ 과학기술 혁신 및 성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 제고 ⑤ 혁신기지 건설 ⑥ 과학기술 인재 육성 ⑦ 과학기술혁신시스템 및 메커니즘 완비 <p>다. 전략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대 과학기술 전문프로젝트 실시 가속화 ②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및 발전 ③ 중점분야 핵심기술 발전을 통한 산업고도화 ④ 기초연구와 선도기술 연구 우선 추진 ⑤ 과학기술 혁신기지 및 플랫폼 구축 ⑥ 혁신형 과학기술인재 양성 ⑦ 개방 및 국제협력 수준 제고 ⑧ 시스템 개혁 및 전면적 국가혁신시스템 구축 ⑨ 과학기술정책 실천 강화를 위한 혁신환경 최적화
일본	‘일본재흥전략’ 개정판 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 및 육아 경험 살릴 수 있는 육아지원원 도입 - 기업 여성 임원 비율 표시 의무화 - 외국인 기능실습기간 연장 : 3년 → 5년 - 건설, 조선업에 외국인 인력 활용 - 벤처기업과 대기업을 중개하는 벤처창조협의회 창설 - 기업 투자 촉진책 마련 - 안전성이 검증된 원전 재가동 - 발전과 송전 부문 분사화 - 재생가능에너지를 판매해 전기요금 상승 부담 억제 - 법인실효세율을 몇 년내로 20% 인하 - 성과에 따라 급여지급하는 제도 도입, 연수입 1,000만엔 이상 - 전국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권한 축소 및 전국 농협조합연합회 수식회사화 - 기업의 농지소유 해금은 5년 후 검토 - 환자의 동의에 기초해서 혼합진료 도입 - 가사지원 및 창업 외국인 유치 - 창업 절차 간소화 - 해외 금융기관을 유치하는 담당자 육성 및 배치

52)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 국내 창조경제 관련 주요 정책

국가 정책	주요 내용
창조경제 구현	<p>온라인 창조경제 타운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세대 참여확대, 멘토링 내실화, 사업화 지원강화 등을 통해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지속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3.3) 창조 아이디어 6,088개, 공유 아이디어 640개가 등록되어 활발히 운영 중 <p>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시·도별로 설치하여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이 되도록 운영 <p>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R&D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p>「창업→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이후 자생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R&D, 자금, 인력 등 성장에 필요한 핵심 지원 내실화 <p>「중소→중견기업」 경영애로 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 제도 등 중견기업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안정적 자금지원 확보 유도 등 중견기업에 필요한 지원 확충 <p>창업·재도전 분위기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대보증 완화 등 도전적인 창업·재도전의 기업가 정신 확산 -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정부의 창업보육지원을 효율화·전문화 <p>투자자금 선순환 정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유도 <p>M&A 매수기반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모투자펀드(PF), 전략적 투자자 등 잠재적 매수주체의 M&A 수요 확대 <p>M&A 인센티브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인센티브 제공 <p>M&A 규제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M&A를 위해 절차상 규제 완화 <p>융합신산업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바탕으로 ICT를 타 산업에 접목하여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내 주력산업의 연관 서비스업 육성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미래 투자	<p>R&D 총량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년까지 국가(정부+민간) R&D 투자를 GDP의 5% 수준으로 확대 <p>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 프로그램 신설, 중소·중견기업과 연계강화, 외국인 친화적 정주환경 구축을 통해 해외 우수인재의 유치·활용 촉진

자료 : 기획재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세부 실행과제 중

국가 정책	주요 내용
미래투자	<p>지식재산권 보호 · 활용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조 상품 단속, 특허법 개정, 해외 지재산권 분쟁 지원 등을 통해 지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IP Pool 구축 등을 통해 지재산권 활용 촉진 <p>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안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권 거래제 안착을 위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추진 <p>안정적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공급기반을 확충하여 공급구조를 개선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가스공급 인프라 적기 확충 추진 <p>친환경에너지 신산업 육성·신시장 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로 에너지 수요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p>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공급과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해외진출 촉진	<p>한국형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단계별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전략 마련 <p>온라인 쇼핑 수출시장 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소비자의 국내 온라인 쇼핑(逆 직접 구매)을 활성화시키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국내 전자거래 제도를 선진화 <p>전략적 FTA 활용 극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시장규모를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FTA 활용 제고 대책 수립 <p>해외건설·플랜트 수출 고부가가치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 등 지원 확대 <p>국내 외화유동성의 생산적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유출입의 양방향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외평기금을 통한 투자촉진 용도의 외화대출 지원 등 국내 외화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 <p>EDCF를 통한 중소기업·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CF 차관조건 등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다각적으로 지원 <p>문화·방송 등 콘텐츠 수출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해외수출 인프라 구축 및 맞춤형 지원전략 수립

자료 : 기획재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세부 실행과제 중

□ 인적 자본

구분	GDP 대비 교육 부문 공공 지출 비중 (2010)	1인당 교육 부문 공공 지출 (2010)	중등교육 등록률 (2010)	고용률 (2011)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2009)			
					기하 평균	읽기	수학	과학
캐나다	6.0	2,581	101.3	72.0	526.7	524	527	529
프랑스	6.0	2,443	113.2	63.9	497.0	496	497	498
독일	4.3	1,724	103.3	72.5	509.9	497	513	520
이탈리아	4.8	1,691	100.4	57.0	486.0	486	483	489
일본	3.6	1,532	102.2	71.2	529.3	520	529	539
영국	7.0	2,443	101.8	69.5	499.9	494	492	514
미국	6.7	3,052	96.0	66.6	496.3	500	487	502
한국	4.6	785	97.1	63.8	541.0	539	546	538

자료: OECD, IMF.

□ 혁신 자본

구분	GDP 대비 R&D지출액 비중 (2011)	경제활동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 (2011)	과학 분야 논문수 (2009)	삼극특허 수 (2010)	하이테크 무역 수지비 (2011)	기술무역 수지비 (2011)
캐나다	1.7	8.1	29,017	654.2	0.50	5.44
프랑스	2.2	8.5	31,748	2,464.6	1.02	1.60
독일	2.8	7.9	45,003	5,725.9	1.10	1.15
이탈리아	1.3	4.3	26,755	714.7	0.67	0.74
일본	3.3	10.0	49,627	1,5712.6	1.06	5.75
영국	1.8	8.3	45,649	1,596.5	0.93	1.81
미국	2.8	9.1	208,601	1,4022.1	0.75	1.46
한국	3.7	10.7	22,271	2,223.1	1.70	0.42

자료: OECD, NSF Science & Engineering Indicators.

□ ICT 자본

	GDP 대비 텔레커뮤니케이션 투자(2010)	유선 고속통신망 이용료 (2010)	고속통신망 가입자 수 (2010)	인터넷 사용자 (2011)	전체 재화 수출 중 ICT 비중 (2010)
캐나다	0.52	26.22	297.3	849	2.8
프랑스	0.32	30.33	339.9	774	4.4
독일	0.24	39.67	319.3	799	5.1
이탈리아	0.40	26.42	220.8	764	2.1
일본	0.21	23.01	265.9	846	10.7
영국	0.37	24.71	315.2	820	5.9
미국	0.18	19.95	276.8	841	10.5
한국	0.55	24.26	348.0	828	21.4

자료: OECD,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Computer Industry Almanac, World Bank.

□ 문화 자본

	가계 지출 중 오락 및 문화 비중 (2011)	정부 예산 중 여행 및 관광 지출 비중 (2011)	세계 자연 유산 수 (2012)	세계 문화 유산 수 (2012)	외국인 관광객 수 (2010)	관광 수지비 (2010)	창조산업 수지비 (2010)
캐나다	9.7	4.1	9	7	16,097,000	0.5	0.9
프랑스	8.4	3.0	4	45	77,148,000	1.2	0.7
독일	8.7	2.1	2	34	26,875,000	0.5	1.1
이탈리아	7.4	3.6	3	47	43,626,000	1.2	1.6
일본	9.8	4.2	4	32	8,611,000	0.4	0.3
영국	10.6	2.8	5	24	28,295,000	0.7	0.8
미국	9.3	5.2	13	9	59,791,000	1.5	0.6
한국	7.7	2.6	1	23	8,798,000	0.7	0.5

자료: OECD,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UNESCO, UNDP, World Bank.

□ 사회적 자본

	부패 인식 지수 (2011)	지니계수 (2000년대 후반)	삶의 질
캐나다	8.4	0.324	9.36
프랑스	7.1	0.293	8.16
독일	7.9	0.295	9.28
이탈리아	4.2	0.337	7.19
일본	7.4	0.329	7.77
영국	7.4	0.342	7.48
미국	7.3	0.378	8.13
한국	5.6	0.314	6.27

자료: 국제투명성 기구, OECD, IMD.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2014	
				1/4	2/4	3/4	연간(E)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3.7	2.0	1.5	2.3	3.3	2.6	3.8	
	민간소비(%)	2.4	1.7	1.5	1.7	2.2	2.0	2.7	
	건설투자(%)	-4.7	-2.2	2.4	7.1	8.0	3.7	2.5	
	설비투자(%)	3.6	-1.9	-11.9	-5.1	1.8	-1.5	6.7	
대외거래	경상수지(억 \$)	261	431	100	198	190	620	490	
	통관기준	무역수지(억 \$)	308	283	57	143	111	468	399
		수출(억 \$)	5,552	5,479	1,353	1,412	1,370	5,648	6,123
		증감률(%)	(19.0)	(-1.3)	(0.4)	(0.8)	(2.9)	(3.1)	(8.4)
		수입(억 \$)	5,244	5,196	1,297	1,269	1,259	5,180	5,724
증감률(%)	(23.3)	(-0.9)	(-3.0)	(-2.7)	(0.2)	(-0.3)	(10.5)		
소비자물가 상승률(%)		4.0	2.2	1.4	1.1	1.2	1.4	2.4	
실업률(%)		3.4	3.2	3.6	3.1	3.0	3.3	3.1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08	1,127	1,085	1,123	1,111	1,098	1,07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